민주노총 총서 2023-06

미중 갈등과 한국경제

김성혁 · 나원준 · 임수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발간사 ····· x ii
요약 ····· x vi

제1장 서론 ····· 2

제2장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 ····· 6
Ⅰ. 머리말 ····· 6
Ⅱ. 고전 제국주의론의 쟁점 ····· 8
1. 제국주의 5표지의 개관 ····· 8
2. 표지체계의 비판과 표지 4 및 5의 검토 ····· 12
3. 표지 2의 검토 ····· 20
4. 표지 3의 검토 ····· 28
5.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34
Ⅲ. 종속 이론의 평가 ····· 40
1. 종속 이론의 문제의식 ····· 40
2. 폴 바란과 성장의 정치경제학 ····· 43
3. 라틴아메리카 구조주의 전통에서의 종속 논의 ····· 45
4. 종속 = 저발전 등식의 검토 ····· 47
Ⅳ. 달러 헤게모니와 금융제국주의 ····· 54

1. 경제적 균형의 변화 ····· 54
2. 종이 금의 시대: 미국 재무부증권 본위 체제의 확립 ····· 58
3. 미국 금융제국주의의 특징 ····· 64
4.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란 ····· 71
5. 탈산업화와 재산업화 ····· 75
6. 평가 ····· 78
Ⅴ. 소결 ····· 82
[보론]
1.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론 ····· 85
2. 하비의 신제국주의론 ····· 86

제3장 미중 갈등과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 90
Ⅰ. 머리말 ····· 90
Ⅱ. 미중 관계의 발전 ····· 98
1.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 배경 ····· 98
2. 미중 경제관계의 특징 ····· 106
Ⅲ. 미중 갈등과 그 영향 ····· 115
1. 미중 불균등 발전과 상호 의존성의 균열 ····· 115
2. 위기에 대한 미중의 대응 ····· 118
3. 세계 경제질서에 끼칠 영향 ····· 127
Ⅳ. 미중 관계 이데올로기들과 소결 ····· 144
1. 미중 관계 이데올로기들 ····· 144
2. 소결 ····· 149

제4장 신냉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154
Ⅰ. 미국의 경제패권 약화와 경제블록 ····· 154
1. 금융세계화의 한계와 달러패권의 약화 ····· 154
1) 달러 체제와 세계금융위기 ····· 154
2) 중국경제의 성장 ····· 157
2. 미중 갈등과 세계화의 쇠퇴 ····· 159
1)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 159
2) 신냉전 경제블록 형성 ····· 161
3. 탈달러 흐름과 브릭스의 부상 ····· 162
1) 탈달러 흐름 ····· 162
2) BRICS의 부상 ····· 170
Ⅱ. 미중 갈등과 신냉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179
1. 미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 ····· 179
1) 반도체와 과학법 ····· 180
2) 인플레이션 감축법 ····· 185
3) 생산기지 미국 이전 ····· 187
2. 수출주도성장의 쇠퇴 ····· 188
1) 무역수지 적자 지속 ····· 188
2) 세계화의 쇠퇴와 수출주도성장의 위기 ····· 197
3. 내수경제의 침체 ····· 206
1) 인플레이션과 실질소득 감소 ····· 206
2) 가계부채로 성장 잠식 ····· 208
3) 달러체제에 종속된 통화·재정 정책 ····· 211

Ⅲ. 시사점 ····· 219
1. 핵심 산업의 자립화 ····· 220
2. 확장적인 재정정책 ····· 221
3. 중립적인 외교통상정책 ····· 222
4. 자주적인 통화정책 ····· 223

참고문헌 ····· 224

표 목차

[표 2-1] 달러 헤게모니 ····· 61
[표 3-1] 미국 기업의 이윤, 축적, 생산성(1950~2021) ····· 100
[표 3-2] 미국, 중국, 일본의 GDP 추이(1980~2020) ····· 118
[표 3-3] 글로벌 무역 균열로 인한 예상 손실 ····· 129
[표 3-4] 통상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 130
[표 4-1] 미국 내 생산확대 법안 및 행정명령 ····· 180
[표 4-2] 반도체와 과학법 가드레일 ····· 184
[표 4-3] IRA 배터리 학생광물, 배터리 부품 최소비중 요구치 ····· 186
[표 4-4] 해외직접투자 국가별 동향(상위 3개) ····· 187
[표 4-5] 한국 수출입 현황, 무역수지 ····· 189
[표 4-6] 한국의 주요국별 무역수지 격차 변화 ····· 190
[표 4-7] 우리나라 주요국별 무역수지 추이 ····· 192
[표 4-8] 주요 품목별 수출 비교 ····· 195
[표 4-9] 주요 품목별 수입 비교 ····· 196
[표 4-10] 삼성 중국법인 투자액 추이 ····· 202
[표 4-11] 중국의 수입시장 상위 5개국 비교 ····· 203
[표 4-12]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년간 세수효과 ····· 216
[표 4-13] OECD 평균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 219

그림 목차

[그림 2-1] 세계 GDP 중 미국 비중 ····· 54
[그림 3-1] 글로벌 가치사슬의 스마일 곡선 ····· 109
[그림 3-2] 중국의 기업 형태별 수입 원자재 가공 수출 ····· 111
[그림 3-3] 생산적부문과 비생산적 부문의 수준 변화 ····· 113
[그림 3-4] 세계 제조업의 부가가치의 주요국의 비중 ····· 113
[그림 3-5] GDP 대비 세계무역의 비율 ····· 116
[그림 3-6] 미국 기업 중국 사업부의 수익성 전망 ····· 132
[그림 3-7] 미국 기업 중국 사업부의 전년대비 수익성 ····· 133
[그림 3-8] G8과 브릭스의 대외 직접투자 ····· 142
[그림 4-1] 연준 자산 추이 ····· 156
[그림 4-2] 미국 정부 부채 추이 ····· 157
[그림 4-3] 전세계 GDP 대비 미중이 차지하는 비중 비교 ····· 158
[그림 4-4] 구매력 평가 기준 미중 GDP 비중 비교 ····· 159
[그림 4-5] 위안화와 달러화 결제 비중 비교 ····· 166
[그림 4-6] 주요 수요자들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 추이 ····· 168
[그림 4-7] 브릭스 5개국과 G7 간 명목 GDP 비교 ····· 171
[그림 4-8] 브릭스 5개국과 G7 간 구매력 기준 GDP 비교 ····· 171
[그림 4-9] 브릭스 11개 가입국 ····· 173

[그림 4-10] 한국의 국가별 반도체 수출 비중 ····· 181
[그림 4-11] 한국 수출입 추이 ····· 189
[그림 4-12] 2017 상반기~2023 상반기 주요국 무역수지 증감폭 ···· 191
[그림 4-13]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 193
[그림 4-14] 대중국 수출입 비중 추이 ····· 194
[그림 4-15]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 198
[그림 4-16]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시기별 비교 ····· 199
[그림 4-17] G20 경제성장률과 한국 경제성장률 간 상관계수 ····· 200
[그림 4-18] 한국 산업별 대중국 수출의존도 ····· 204
[그림 4-19]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209
[그림 4-20] 2022년과 2023년 1~7월 국세수입 비교 ····· 216

발간사

발간사

코로나19 창궐, 미중 무역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가 구조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했던 미국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장기침체, 중국의 추격 등을 극복하고 경제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2023년 뉴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화의 종료를 선언하고 신냉전 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무역으로 중국·러시아 등을 제재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여 자국과 동맹국 중심으로 핵심 기술과 생산설비를 재배치하는 전략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갈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하고 에너지와 첨단제품 등에 대한 공급망이 차단되어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세계화 시대 국제분업체제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는, 미중 갈등과 신냉전으로 세계무역 침체, 중국·러시아와의 교역감소 등으로 복합불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침체 속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장기화로 인해 대외의존적인 한국경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리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위기와 소비침체를 불러오고, 고환율은 수입물가 상승과 외국자본 이탈 등으로 거시경제를 위협하며, 고물가는 1년 이상 실질임금과 실질소득을 하락시켜 노동자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한국이 급속하게 수출감소, 가계부채 위기, 내수침체 등의 복합위기에 빠져든 원인을 살펴보고 진보진영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세계경제의 변화를 진단하기 위해서, 먼저 여전히 논쟁 지점인 제국주의와 신식민지 문제를 21세기 현실에 맞게 분석하고, 다음으로 미중 무역대결의 원인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면서, 미국 경제패권의 쇠퇴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한국경제의 변화를 진단하고 민중적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감소 원인, 고금리 고환율 실질소득 감소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역할,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속에서 핵심산업 자립화 전망 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미중 갈등과 세계화의 쇠퇴, 한국경제 복합불황의 원인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 이어 한국경제 대안을 모색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합니다.

쉽지 않은 전문 영역의 연구사업을 진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연구보고서가 민주노총 등 제 진보·민중운동 진영의 정책사업과 노동자·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11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김성혁

요약

요약

2장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배경이 된 최근 세계경제 위기는 종속과 제국주의라는 오래된 연구 주제의 귀환을 불러왔다. 오늘의 현실은 정세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고 미중 갈등을 배경으로 미국 패권주의 세력이 주도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전략적인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시급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유럽의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이 세계의 경제 분할과 영토 분할을 위해 자신의 국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등장했다. 레닌은 열강들 간 경쟁이 극도로 첨예화된 역사적 국면을 분석하면서 고전 제국주의론을 완성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유일 패권 국가로 등장한 것을 배경으로 고전 제국주의론, 특히 제국주의 5표지의 문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힐퍼딩의 논의에서 비롯된 은행자본 주도 금융과두제(표지 2)는 이후 전개된 역사적 현실과는 차이가 있었다. 자본수출(표지 3)도 역사적 국면마다 그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미국 일극 체제에서는 세계의 경제 분할(표지 4)도 면모가 과거와는 완전히 바뀌었다. 자주 역량의 결실로 구식민주의 체제(표지 5)가 붕괴된 변화도 있었다. 이와 같은 기존 5표지에 대한 현대 제국주의론 관점에서의 재구성과 새로운 이

론적 합의의 도출은 향후 진보정치의 진전을 위한 과제로 제기된다.

고전 제국주의론 외에 과거 종속 이론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면서 종속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종속은 저발전의 원인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그런 시각은 종속의 문제가 저개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 종속이 약화되고 궁극에는 종속적 구조가 저절로 해체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실상은 양적 기준으로는 성장했더라도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가 있으며 경제적 자립이 필연적으로 양적 성장을 포기하는 길인 것도 아니다.

한편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와 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 가치 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오늘날 제국주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충분하다는 인식 또한 문제가 많다. 제국주의론을 국제가치론으로 왜소화시키는 그와 같은 시각은 레닌의 5표지가 하나의 총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실천적으로는 반제국주의 운동의 주관적 해소로 귀결되고 만다. 오히려 관련 논의로부터 우리는 제국주의란 (신)식민지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될 때 그 의미가 온전히 회복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미국 제국주의는 군산복합체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결합에 기초해 있으며 '종이 금'을 만들어내는 특권으로부터 재무성증권 본위제라는 전무후무한 국제통화체제를 확립하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 제국주의는 점차 경제적 지배력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군사적 지배력을 중심으로 패권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신식민지 나라들에서 광범위한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는 배경이다.

3장

자본주의 국가의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틀은 크게 베버주의와 마르크스주의로 나눌 수 있다. 베버주의에서 국가는 권력 지위, 세계지배, 또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자율적인 행위자로 간주된다. 미국 주류 이론이라 할 수 있는 현실주의 국제관계론은 이러한 베버주의 틀에 따라 자율성을 가진 국민국가들 사이의 경쟁이라는 시각으로 미중 관계를 설명한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국가의 대외정책이 이윤율로 표시되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관계, 자본과 자본에 경쟁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마르크스주의의 틀을 따르는 연구자들은 미중 관계도 그러한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를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본과 자본의 경쟁 관계를 축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를 경우 미중 관계의 발전과 균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는 세계경제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세계시장은 그 이전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커졌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의 노동 분업 관계도 함께 발전했다.

새로운 노동 분업 관계는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으로 포착되었다. 세계시장이 커지고 노동 분업 관계도 발전하면서 상품 생산과 잉여가치의 생산도 증가했는데, 이는 저물가를 바탕으로 한 금융 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력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 이후 본격적인 금융 세계화 국면이 전개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금융화 현상은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를 떼놓고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의 배경에는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 하락과 또한 미국이 달러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과잉 달러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 과잉 달러는 수익성 있는 자본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미국의 기업들은 과잉 자본, 기술, 지식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숙련 노동력과 결합시켜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경영 방식을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미중 관계가 발전했다.

미중 관계는 발전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다. 먼저 산업 구조 면의 특징이다. 여러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글로벌 가치사슬에 들어감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는 전략을 선택했다. 미중 경제관계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지식을 중국의 값싼 잉여 노동력과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했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계를 보여주는 스마일 곡선상에서 부가가치 분배 몫이 큰 부분은 주로 미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거꾸로 부가가치 분배 몫이 낮은 단순 제조와 조립 공정은 중국에 소재한 기업들에 배치되었다.

다음으로 종속성 측면의 특징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 관계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미국에 대해 종속적인 형태의 발전 과정을 거친 라틴 아메리카와는 달리 중국은 그러한 종속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발전 과정을 거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와는 다른 발전 과정을 보이는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다. 중국은 경제 개방 속도를 조심스럽게 조절했고 국유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남겨놓았다. 무엇보다 중국은 금융을 직접 통제하면서 이를 지렛대 삼아 기업 정책에 영향력을 끼쳤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종속하는 것을 피하도록 해주었다.

미중 관계의 발전은 처음에는 두 나라에게 모두 이익을 주는 것처럼

비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순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나라 사이의 노동 생산력이 불균등하게 발전한다는 사실에서 나왔다. 세계시장에서는 노동 생산력이 위계를 이룬다. 그러한 위계의 변화는 국가의 대외정책 변화로 나타난다. 실제로 중국의 상대적인 노동생산력이 발전하면서 미국이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결국 중국이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후 한 세대 만에 미중 관계는 협력에서 갈등으로 바뀌었다. 미중 관계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중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논쟁이 전례 없이 뜨겁게 진행되었다. 논쟁에서는 구조갈등론, 제도갈등론, 국내 문제 수출론이라는 세 가지 갈래의 주장이 펼쳐졌다.

미중 관계의 갈등은 세계 경제 질서에 여러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 이후 새롭게 형성된 노동 분업 관계,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금융세계화 국면은 이제 달라질 것이다.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는 한국 경제의 미래나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중 갈등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중 관계에 생긴 갈등의 원인, 정도, 방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중 갈등이 한국경제와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끼칠 영향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중 관계에 대한 시각에는 여러 이데올로기들이 끼어든다.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 주류의 안보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파국론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중국의 경제적인 능력과 미중 갈등을 크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안보주의자들은 중국의 경제적 능력이 조만간 미국을 앞지를 것이며 미중 갈등은 현재도 심각한 수준이고 앞으로 전쟁으로까지 발전

할 수 있다고 예견한다. 이러한 파국론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미중 갈등이 노동자에게 끼칠 영향을 전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중 갈등을 주류의 지배적인 관점이 아닌 노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

4장

미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주도자로 지난 30년 동안 자유무역을 추진하였으나, 2023년 뉴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화의 종료를 선언하고 신냉전 경제블록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세계화 시대 비용절감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여, 자국 중심으로 핵심 기술과 생산설비를 재배치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 국제분업체제에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는, 미중 갈등과 신냉전으로 무역침체, 중국·러시아와의 교역감소 등으로 복합불황에 빠져들었다. 2022년부터 수출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중국 무역수지는 2018년 556억 달러 흑자였으나 2023년(1~10월) 21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인 1990~2008년 사이 한국의 수출증가율(평균)은 11.0%로 경제성장률(평균) 6.4%의 두 배로 성장을 견인하였다. 하지만 세계금융위기 이후 2009~2023년 사이 한국의 수출증가율(평균)은 3.1%로 경제성장률(평균) 2.7%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코로나 위기와 경제블록 등이 발생한 최근 5년을 보면,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0.4%로 경제성장률 1.9%보다 낮다. 세계화의 쇠퇴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 경제침체의 주요한 원인은 먼저 탈중국 정책으로 급격한 대중 수출감소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과의 동맹에 한국 경제를 종속시켜 나토에서 탈중국을 선언하고 대중국 경제제재에 앞장섰다. 그 결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018년 26.8%에서 2023년 8월 19.7%로 급락하였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 비중은 2015년 10.9%에서 2023년 8월 6.2%로 낮아졌다.

다음으로 신냉전은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경제블록과 경제제재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제약되어 교역이 침체되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둘째, 연준의 금리 인상과 주변국 경기침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수입물가 폭등과 환율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셋째, 고금리로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가계부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넷째, 정부는 신자유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공공서비스를 축소하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주의 경제블록을 형성하였으나 다수 국가들은 '평화', '공정한 국제질서', '다자 시스템'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는 '미국의 중국·러시아 경제제재 불참 국가들의 증가', '브릭스의 확장', '위안화와 지역통화 사용 증가' 등으로 미국 일극패권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신냉전이 진행되는 시대에, 세계경제 변화에 좌우되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으려면, 한국은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경제를 확대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진영 간 경제블록이 구축되는 시기, 한국

은 ‘핵심 산업의 자립화’, ‘확장적인 재정정책’, ‘중립적인 통상정책’, ‘자주적 통화정책’ 등으로 자립경제 기반을 강화해야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1장

KCTU

서론

최근 '코로나 창궐', '미중 무역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소련 몰락 이후 지속되어온 탈냉전 세계화 시대에서 신냉전 탈세계화 시대로의 전환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미국은, 탈세계화 시대 일극 패권이 흔들리는 가운데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거대한 부채 누적',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긴축재정' 등으로 달러·엔·파운드로 구축된 기축통화 동맹의 위기가 세계경제 위기로 전이되어 무역과 통화질서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혼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2023년 뉴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화의 종료를 선언하고 신냉전 경제블록을 구축하고 있다. 즉 미국과 서방의 가치에 도전하는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경제제재와 첨단기술 통제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차단하고, 세계화 시대 비용절감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여 자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핵심 기술과 생산설비를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가치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옹호하는 G7 등 국가들의 군사 및 경제동맹을 말한다.

미중 갈등과 신냉전 보호무역이 확산되면서 국제무역이 침체되고, 수출주도경제인 한국은 무역적자, 가계부채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장기침체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세계질서의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시기를 맞이하여 '달러 패권의 약화 추세',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과 전망', '미중 갈

등과 신냉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1장·4장은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이, 2장은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가, 3장은 임수강 경기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이 각각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2장은 현대 제국주의 문제를 재해석하였다. 세계가 신냉전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역사적 대전환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미국 패권주의 세력의 주도로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어 종속과 제국주의 문제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분석하고, 반전평화 및 경제자립의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의 신냉전 기도는 제국주의 체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나라를 종속시키는 신식민지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미국 일극체제', '재무성증권 본위제', '종속국의 경제성장' 등은 과거 제국주의 이론으로 접근하기에는 제한성이 있으므로 보완된 해석을 제시한다.

3장은 세계경제 big two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세계의 공장이 되어 고도성장을 이룩했고, 미국은 값싼 상품을 수입하여 저물가를 바탕으로 금융 세계화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중국이 기술 굴기와 시장 확장으로 미국을 추격하면서, 미국은 경제패권을 지키기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대중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미국 국내산업의 이해와 저렴한 중국 상품 사용으로 물가 억제 등의 이점을, 미국이 무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제한적인 경제봉쇄가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4장은 신냉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세계화 시대 국제분업체제에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는, 신냉전으로 무역침체, 중국·러시아 교역감소 등으로 복합불황에 빠졌다. 세계화 시대인 1990~2008년 사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1.0%로 경제성장률 6.4%를 견인하였다. 하지만 탈세계화가 진행되는 최근 5년을 보면,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0.4%로 경제성장률 1.9%보다 낮다. 세계화의 쇠퇴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냉전은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물가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 고금리로 가계부채 위기 고조, 실질소득 하락 등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화가 쇠퇴하고 있는 시대, 한국이 외부 환경에 좌우되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으려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경제를 확대해야 한다.

2장

KCTU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

Ⅰ. 머리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이은 경제위기는 종속과 제국주의라는 오래된 연구 주제의 귀환을 불러왔다. 그 연구 주제들은 그동안 학술 연구 영역에서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나 유례없던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제3세계 국가들과 그 나라 노동자들이 겪은 어려움이 진보적인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그렇게 종속과 제국주의의 문제는 다시 세계 경제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1)]

정세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고 미중갈

1) 예를 들어 발전경제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아프리카 정치경제학 리뷰』(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는 2021년 봄호(제48권 통권 167호)를 "사미르 아민과 그 너머: 급진정치경제학, 오늘날의 종속과 단절(delinking)"이라는 제목으로 편집하면서 종속 이론과 제국주의론의 재등장을 예고했다. 이듬해인 2022년 1월과 3월에는 또 다른 학술지 『라틴아메리카의 조망』(Latin American Perspectives) 제48권 1호와 2호에 "발전의 재평가: 과거와 현재의 마르크스주의 종속 이론과 주변부 논쟁"이라는 특집이 편성되어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여러 논문이 실렸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적인 학술 전문 출판사인 팰그레이브 맥밀런에서는 『현시대 라틴아메리카와 유럽의 종속 자본주의』(Madriana and Palestini, 2021)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2021년에 출간했다. 또 다른 학술 전문 출판사인 에드워드 엘가에서도 2023년에 『불균등경제발전』(Reinert and Kvangraven, 2023)이라는 논문 모음집을 출판했다. 2022년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적 제국주의(Economic Imperialism)'라는 제목이 붙은 전문서적을 출간했다(Cope and Ness, 2022). 국내 독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의 『슈퍼제국주의』(Super Imperialism) 제3판과 『문명의 운명』이 발간된 것도 2021년과 2022년의 일이었다.

등을 배경으로 미국 패권주의 세력이 주도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전략적인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민주노조운동으로서는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실천 과제가 제기되는 국면이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종속 문제와 그것의 원인인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인 이해를 변화된 현실에 맞춰 발전시키고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시대에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장은 바로 그와 같은 당면 목적을 고려하면서 기획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장에서는 먼저 제2절에서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에 의해 완성된 고전 제국주의론을 살펴보면서 현대 제국주의에 알맞게 재구성이 필요한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제3절에서는 과거 종속 이론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면서 종속 개념과 제국주의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한다. 이어지는 제4절에서는 금융 지배 자본주의(finance-dominated capitalism)를 배경으로 하는 마이클 허드슨의 금융제국주의론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평가한다. 제5절은 이 장 전체에 대한 소결 부분에 해당한다.

Ⅱ. 고전 제국주의론의 쟁점

1. 제국주의 5표지의 개관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대중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당시 벌어지던 열강들 간 전쟁의 배후에 작용하는 경제적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최후의 단계에 도달한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전쟁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폭로하고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실천을 조직하려는 기획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구체적 정세의 산물이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제국주의'란 말 자체는 실은 오래된 옛 용어였다. 그 용어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세계사의 특정 역사적 단계와 상관없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정복해 식민지로 관리하는 예속 정책 일반의 뜻으로 통용되었다. 정복을 일삼고 조공을 받던 과거 로마 제국이나 당 제국을 연상하면 된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던 역사적 국면에 형성된 새로운 독점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그런 옛 이름이 붙여진 것도 그 체제의 핵심 특징이 식민 정책에 있었기 때문이다. 레닌은 새로운 체제가 자본주의의 특수한 단계에 해당하는 경제적 질서의 산물임을 밝혔다. 당시 열강의 정복 정책과 식민 정책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발생한 변화에 따른 유기적 결과이고 그와 같은 변화를 배경으로 자본주의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점에서 레닌은 탁월했다. 제국주의는 한마디로

(신)식민지를 거느리는 독점자본주의인 셈이다.

19세기의 마지막 사반세기는 주요 자본주의 열강의 경제정책에 큰 전환이 일어난 시기였다. 서방 열강들은 그 기간에 제국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각국에서 축적과정의 모순이 심화되고 그 결과 독점자본의 지배가 확립되면서 열강들 사이의 경쟁은 격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전환도 이루어졌다. 1880년대가 되면 이미 일찍부터 제국이었던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외에 새로운 얼굴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그 사반세기가 시작될 무렵에는 아프리카의 10퍼센트만이 유럽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 사반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90퍼센트 이상이 식민지가 됐다.

레닌에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제국주의는 앗시리아나 로마, 당나라 같은 세계사의 여러 대목에서 출현했던 제국과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제국주의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하나의 특수한 단계로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레닌은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제국주의를 규명하기 위해 그것의 경제적 기초, 즉 당시 형성되던 새로운 생산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는 다음 진술에 담긴 5개의 표지로 요약된다. “제국주의는 독점체와 금융자본의 지배가 형성되고, 자본수출이 현저한 의미를 띠게 되며, 국제적인 트러스트에 의한 세계분할이 시작되고, 거대한 자본주의 나라들에 의한 지구상의 모든 영토의 분할이 종결된 발전 계제에 있는 자본주의이다(레닌, 1988: 122).”

20세기 초 레닌의 시대와 21세기 초 오늘날 자본주의 사이에는 한 세기만큼의 시간 거리가 놓여 있다. 그 둘이 같은 성격일 수는 없다. 특히 오늘날 제국주의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 일극 체제로 변모했기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여러 열강이 경합하며 식민지

전쟁을 벌이던 과거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의 본질이 오늘도 여전히 관철되고 있는지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점은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의 5개 표지가 곧 불변의 기준은 아니며 표지들 각각의 상대적 중요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레닌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20세기 벽두에 질적인 이행을 경험했다. 그 내용은 독점자본주의가 자유경쟁을 대체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는 일련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1860년대까지는 독점화가 초기 단계에 머물렀으나 1873년 공황을 거치면서 카르텔 형성이 활발해졌고 1900년~1903년 공황 이후에는 독점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2)]

마르크스-레닌주의 문헌에서는 "이 새로운 특수한 단계의 성격규정에서 결정적인 것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라는 사실"이며, "이 결정적인 특징으로부터" "다른 근본특성들도 결과하는 것"이라고 지적된다(자골로프, 1989: 186). 따라서 5개 표지 가운데 독점체의 형성으로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진입한다는 첫 번째 체제 표지가 가장 결정적이다. 첫 번째 표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제국주의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독점단계라는 첫 번째 표지는 어떤 나라가 제국주의이기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한다.[3)]

---

2) 독점화는 생산과정의 사회화로도 해석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은 그대로 온존해 있었다. 레닌에 따르면 "특정 산업부문들에서 생겨난 독점은 자본주의 생산 전체에 내재한 무정부 상태를 증가시키고 격화"시킨다. 반면 고전 제국주의론의 또 한 명의 주요 저자인 니콜라이 부하린은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 형태로 자본주의가 조직되고 나면 경쟁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 점에서 레닌은 부하린과 시각 차이가 있었다(Noonan, 2017: 75-76). 다만 레닌에게서도 부하린처럼 "모든 기업과 모든 국가를 예외 없이 흡수해 버릴 단일한 세계 트러스트"(레닌, 2018: 15)와 같은 단선적 인식이 발견되기도 한다.

20세기로 들어서면 경제의 거의 모든 주요 분야에서 독점은 지배적인 경제적 관계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산영역에서의 독점지배가 제국주의의 일차적인 특징이었다.[4] 금융과 무역을 비롯한 기타 분야에서의 독점체 형성은 생산에서의 독점체 형성을 그 기초로 했다. 경제력이 집중된 소수의 독점 대자본은 제국주의의 두 번째 표지인 금융과두제 형성으로 나아가며 국가권력과 유착했다.

제국주의는 자본의 집중이 일국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확장의 근본 동력은 자본 집중, 즉 독점화에 있었다. 자본 집중은 먼저 국내에서 일어났다.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었던, 더 정확히 말하면 순전히 지역적이었던 경제단위들을 더욱더 단일한 중심에 종속시키는"(레닌, 2017: 41) 국내적 과정이 선행했다. 그렇게 단일한 국민적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진 다음에 자본 집중의 범위는 세계경제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세계경제 차원에서 자본 집중이 일어나면서 독점자본으로서는 자국 국가와의 제휴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독점자본은 자국 국가를 대리인으로 삼아 국가의 힘을 이용해 세계시장

3) 그러나 이 표지 1을 제국주의의 충분조건으로 해석해선 안 될 것이다. 사회구성체가 독점자본주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제국주의가 되지는 않는다.

4) 레닌은 당시 자본주의 발전의 중요한 면모로 집중(concentration)과 결합(combination)을 제시했다. 집중은 자본의 독점화 경향을 뜻한다. 결합은 분리되어 있는 생산과정이 하나의 기업체 단위로 통일되는 것이다. 결합을 거치면서 상이한 업종이 단일 조직 밑에 묶이게 되었다. 부문별로 업황이 가변성을 보이더라도 결합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이윤율을 올릴 수 있었다(레닌, 2017: 21-22). 그러나 집중과는 달리 결합은 과거 독점자본의 한 양상이었을 뿐이며 현대 제국주의에서는 그것이 지배적 경향으로 관측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변화한 데 있다. 독점자본은 결합을 추구하는 대신에 국경을 넘나들며 공정을 재배치함으로써 비용 극소화를 실현했다. 그 과정에서 원하청 관계의 지리적 확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되었다. 20세기 초에 정립된 고전 제국주의론이 그와 같은 후대의 경제적 변화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터이다.

으로의 팽창을 추구했던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는 나라마다 자본의 축적과 독점의 진전에 따른 발전 정도가 상이해 불균등발전법칙이 관철된다. 이에 세계경제는 독점 단계에 접어든 일부 부유국과 다수의 빈곤한 나라로 분열된다. 제국주의의 세 번째 표지인 자본수출은 전자, 즉 일부 부유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정책이었다.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적으로 구매력 부족에 직면하므로 자신의 생산력을 기존 생산조건의 개선에 이용할 수 없어 '과잉' 상태에 놓인 자본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 과잉자본은 잉여가치를 착취할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옮겨간다. 그것이 자본수출이다. 우선 종속국으로 수출된 과잉자본은 제국주의 나라의 자본가계급을 불로소득 생활자로 만들었다. 반면 종속된 (신)식민지 경제는 정상적 발전 대신 기형적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세계는 대자본의 국제적 연결과 단절에 의해 경제적으로 분할되었다. 그것이 제국주의의 네 번째 표지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국에는 열강에 의한 전 세계의 영토적 분할로 이어졌다. 제국주의 전쟁은 불균등발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불균등발전을 강화시켰다. 그것이 제국주의의 다섯 번째 표지였다.

2. 표지체계의 비판과 표지 4 및 5의 검토

20세기 초에 들어서면 유럽에서 자본주의 자체가 변해 질적으로 다른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선 것이 확실해졌다. 체제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이 축적을 거듭하며 점점 더 소수에게 집중된 결과로 독점자본이 등장한 것이었다. 독점자본은 전통적인 경쟁시장 논리

를 걷어차고 먼저 국내 수요처를 자기들끼리 분할했으며 그런 다음에는 국가 권력의 지원을 받으며 해외 시장을 확보하고자 했다. 독점자본 간 경쟁은 식민지를 둘러싼 국가 간 정치적, 군사적 대립으로 이어졌고 그 절정이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독점자본은 각국 내부적으로 주요 생산 부문을 장악했다. 그것은 지배적인 형태의 자본이 되었다. 국민경제 내 다른 부문을 견인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다. 독점자본들은 상호 연계망을 형성하고 국가를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독점자본 이전 단계의 자유경쟁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했다. 독점자본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별 독점자본이 체제 전체의 동역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었다. 독점자본과 연결된 국가는 정치적 군사적 팽창주의를 추구하며 자국 독점자본에 유리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추구했다. 더 이상 전통적인 야경국가가 아니라 독점이윤의 획득을 위해 해외로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국가가 선택된 것이었다.

제국주의의 한 가지 불변의 속성은 세계분할의 멈출 수 없는 동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세계분할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표지 4로 개념화된 경제적 분할이었고 두 번째는 표지 5로 개념화된 정치군사적 영토 분할이었다. 경제적 분할의 대표적인 예로는 1907년에 맺어진 미국과 독일 간의 전기시장 분할 협정을 들 수 있다. 당시 독일의 지멘스 등은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터키, 발칸 반도 시장을 맡고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은 북미 시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협정이 체결된 다음 그 두 거대 트러스트 간에 경쟁은 사라졌고 각자는 자신의 시장을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지켜내는 데에 전념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들어서면서 국민적 자본 간 경쟁은 국가

를 매개로 이루어졌다. 국가들은 각자 국민적 자본의 대리인이 되어 서로 경제적 투쟁과 군사적 투쟁의 전선에서 마주하게 되었다. 자본은 국가를 이용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자본을 이용했다.

단, 제국주의 열강들 간 영토 재분할은 식민지를 둘러싼 갈등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자본 집중은 영국이 인도나 이집트를 점령한 것처럼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도 나타났지만 독일이 벨기에를 점령한 것처럼 산업화된 지역을 병합하는 '수평적' 집중도 함께 일어났다. 벨기에도 식민지 약탈을 일삼던 제국주의 나라였다. 독일에 점령된 벨기에는 제국주의 나라들 사이에도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주는 사례다.[5)]

그런데 이와 같은 레닌의 제국주의 5표지에 대해 안소니 브루어는 각각의 표지가 분리되어 묘사되고 있으며 그것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5표지로 정식화된 제국주의의 일련의 경향이 "동시에 일어난 역사적 우연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지, 아니면 "필연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본질적인 상호 연관성이 그 경향들 자체 내에 내재"하는지가 중요한데도 제국주의론의 서술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브루어, 1984: 131).

제국주의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려면 다섯 개 표지들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는 브루어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표지 간 연관성 문제에 대해서는 레닌의 서술에서도 제국주의의 여러 모습은

5) 레닌은 벨기에 외에 "국가 종속의 과도 형태"(레닌, 2017: 106)를 언급하며 포르투갈의 예를 든다. 포르투갈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외양을 갖추고 있고 자체 식민지도 거느리고 있지만 금융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영국의 보호국으로서 종속된 나라였다. 영국은 포르투갈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포르투갈의 식민지를 대상으로도 제국주의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벨기에나 포르투갈의 예를 통해 제국주의 나라들 사이에도 위계와 서열의 체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결국 독점자본의 발전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암시 정도가 제시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독점체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표지가 다른 표지들보다 더 본질적이라는 추론은 가능하지만 그 점에 대한 레닌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6)]

브루어는 더 나아가 첫 번째 표지를 제외하면 "레닌이 묘사한 그 경향들이 그가 예상한 대로 진전되지 않"(브루어, 1984: 131)았다고 평가한다. 독점의 진전은 레닌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심화된 반면 마지막 표지인 세계의 영토적 분할은 "탈식민지화로 실제로 역전되었다"(브루어, 1984: 132)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마지막 표지(표지 5)에 대한 브루어의 부정적 평가는 타당성이 없다. 탈식민지화 사례 중에는 구식민지가 신식민지로 전환되면서 식민지 지배 방식만 바뀐 경우가 더러 있다. 제국주의는 (신)식민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는 형용모순이다. "타국 영토의 정치적 지배를 추구하지 않는 제국주의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자골로프, 1989: 107)." 소위 탈식민지화는 제국주의적 지배의 소멸도 아니었고 식민지 체제의 해소도 아니었다.

브루어의 비판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현대 제국주의가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의 일극 체제로 재편된 사실을 간과하는 점에서도 틀렸다.[7)] 한때 대등했던 제국주의 열강 간 영토 분할이 종전 후 막을

6) 이처럼 레닌 논의가 일정 부분 피상적이라는 비판은 Howard and King (1989: 259)에서도 발견된다.

7)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 제국주의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고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이 하위 파트너로 결합되는 종속적 동맹관계의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후 변모된 제국주의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처럼 제국주의체계 내에 단일한 정점이 형성된 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기도 했다.

내리면서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압도적 강국인 미국에 의한 전일적 지배였다. 재분할의 결과가 바로 전일적 지배였던 것이다. 이를테면 영국이나 일본은 제국주의 나라이지만, 두 나라 모두 이젠 미국의 중심적인 하위 파트너라는 점에서 과거의 위상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미국 단극 체제에서는 제국 열강이 각자 자기 의지대로 영토 분할을 위해 경합하는 일은 최소화되며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국지적인 범위에 그치기 쉽다.

제국주의 전쟁의 물적 토대는 "한편으로 생산력 발전 및 자본축적과 다른 한편으로 금융자본의 식민지 및 영향권 분할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레닌, 2017: 122)에 있었다. 불균등발전은 식민지 및 영향권의 기존 분할 양상을 불합리한 것으로 만든다. 제국주의 전쟁은 따라서 재분할을 위한 전쟁이다.[8)]

제국주의 간 경합이 필연적으로 전쟁을 낳는다는 레닌의 예견에 대해서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레닌이 전쟁의 불가피성을 주장함으로써 20세기 후반 미국의 헤게모니 하에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장기간 평화가 유지된 것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Howard and King, 1989: 261). 제국주의 간 경합의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일어난 사건을 자본주의 세계화의 불변의 법칙으로 승격시켰다는 비판도 있었다(Panitch and Gindin, 2004: 5).

그러나 제국주의 간 경합의 결과로 절대 강국이 지배하는 일극 체제가 형성되고 나면 전쟁은 당분간 불필요해진다. 전쟁의 물적 토대가 잠정적

8) 여기서 '영향권' 개념이 식민지와 나란히 등장하는 점에도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영향권이란 것은 영토를 지배당하지 않았고 외형적으로는 주권이 부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식민지 기능을 하는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등장한 신식민지와 공통점이 있다.

으로 해소된 상태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다가도 만약 그 절대 강국의 지배가 흔들리는 조건이 된다면 재분할을 위한 전쟁은 다시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제국주의 각국의 경제력이 그들 사이에 (신)식민지 및 영향권이 분할된 양상과 괴리가 생기면 제국주의 전쟁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 만약 세력 균형이 부분적으로 바뀌더라도 그 괴리가 충분히 크지 않거나 조율 가능한 정도라면 평화 국면도 잠정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그 경우에도 물밑으로는 쉼 없는 긴장이 이어질 것이다. 제국주의 체제에서 평화는 전쟁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Howard and King(1989)이나 Panitch and Gindin (2004)의 레닌 비판이 충분히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레닌에 따르면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세계분할은 1900년경이면 거의 완료되었다. 그때쯤이면 식민주의 권력에 의해 점령되지 않은 지구상 영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1840년과 1860년 사이 기간에 영국이 식민 정책에 반대(레닌, 2017: 98)한 사실은 흥미롭다. 당시 영국 제조업은 세계경제를 지배했다. 이처럼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기간에는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자유무역 옹호와 식민 정책 반대가 대세가 된다. 유사한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일극 체제의 황금기 자본주의에서도 재연되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는 불균등발전이 철의 법칙으로 관철된다. 따라서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기존의 시장 분할은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올 뿐이고 재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언젠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레닌의 관점은 확실히 탁월했다. 반면 카우츠키는 이른바 초제국주의론을 역설하며 세계시장의 평화적 분할로 제국주의 강국들 간에 평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했다.[9)]

9) 당시에 강력한 독점체들로 세계시장이 나누어진 모습은 최근 들어 보호주의와 블

독점자본이 출구를 찾아 해외 시장으로 향할 때에는 국제정치 환경이 중요하다. 시장 점유를 늘리기 위한 각국 독점자본의 전략은 상호 충돌하기 쉽다. 그 경우 경쟁하는 각국의 독점자본 사이에 세력 균형을 고려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일종의 국제적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면 평화로운 시장 분할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은 그와 같은 국제적 카르텔의 가능성을 필연성으로 둔갑시킨 데 따른 잘못된 결론이었다.

그러나 각국 독점자본의 세력 균형에 근거한 국제적 카르텔은 그 중 어느 한 세력이라도 위반을 통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게 되면 순식간에 와해될 수 있다. 일종의 조정 실패(coordination failure)로 인해 그 카르텔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는 반드시 성립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세력 균형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불균등하게 발전하며 세력 균형은 반드시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조건은 현실성이 없다. 두 번째 조건은 세력 균형이 부분적으로 바뀌더라도 각국 독점자본의 이해를 조율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절대 강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10]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현대 제국주의 체제에서는 지금까지 미국의 패권 하에 두 번째 조건이 성립했다.[11]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록화 경향이 재연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과도 닮은 구석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블록화는 과연 어떤 역사적 귀결로 이어지게 될까. 이번에도 레닌이 맞을까. 아니면 이번에는 카우츠키가 맞을까.

10) 이 두 번째 조건은 고전 제국주의론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다만 일극 체제에서도 세력 균형이 부분적인 변화의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 재편으로 이어진다면 카르텔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의 두 번째 조건은 카우츠키의 초제국주의론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과는 전혀 다르다. 일극 체제는 초제국주의 상태가 절대로 아닌 것이다.

11) 중국을 독점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자본주의 체제로 보지 않는다면 최근 미중 갈등을

까지 확립된 제국주의 체제에서는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성립할 수 없었다. 따라서 카우츠키가 기대했던 국제적 카르텔은 조직될 수 없었고 설사 조직되었더라도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표지 5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늘날과 같은 미국 일극의 신식민지 체제에서는 그 타당성이 다소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레닌의 문제제기는 현상적 관찰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팽창적 속성을 직시했다. 제국주의 간 평화가 아무리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그것은 전쟁의 물적 토대가 구축되면 즉시 깨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레닌이 "식민 정책과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근 단계 이전에도 존재했고 심지어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다"(레닌, 2017: 102)고 지적한 점도 관심을 끈다.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 독점이 형성되고 금융자본의 지배가 작동하면서 식민 정책이나 제국주의의 성격에도 변화가 수반되었다. 식민 정책과 제국주의의 형태와 성격은 근본적으로 경제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제국주의 자체는 비록 더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가질지라도,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는 독점화되고 금융화되었으며 다른 나라에 경제적 정치군사적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자본주의 국가로만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독점자본 간 국제적 연계와 분리로 세계경제가 블록화된다는 네 번째 표지(표지 4) 역시 현대 제국주의 체제에서는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 일극 체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과 여러 자본가 단체들의 금융적 수단에 기초해 뒷받침된 측면이 있다. 이들 국제기구와 단체는 실제로는 철저하게 미국 제국주의를 위해 복무하는 지배 도구일 뿐이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 체제가 일극 체

본문의 두 번째 조건이 성립하지 않게 된 사례로 간주할 수는 없다.

제인 경우라면 더 이상 세계경제는 독점자본가 단체 간 경합으로 분할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에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나라들을 제외하면 이미 세계경제가 미국 제국주의의 지배 체제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이다.

3. 표지 2의 검토

이제 레닌의 제국주의 5표지 가운데 두 번째 표지(표지 2)에 해당하는 금융과두제(financial oligarchy)에 대해 검토하자. 제국주의의 중심에는 금융적 이해를 중시하는 소수 과두 세력이 있었다. 제국주의는 국내적으로 금융과두체제였다. 영국에서 제국주의 정책을 주도하며 금융과두제를 뒷받침한 세력은 생산적 활동과는 거리가 먼 금리생활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자본가계급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했다. 제국주의는 그렇게 금융과두제를 이끄는 일부가 국가 전체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기도 했다. 그들은 국내에는 더 이상 없는 안전한 고수익 투자 기회를 해외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이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국주의적 팽창은 해외에서 바치는 공물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들 소수 금융세력한테는 이득이었지만 대다수 시민은 징병과 징용의 대상이 되었고 제국의 영광을 위해 전쟁 비용을 부담하는 등 희생을 강요당했다.

당시 존 앳킨슨 홉슨으로 대표되는 일부 자유주의 개혁가들은 제국주의를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각국이 임금 인상으로 국내 수요 원천을 강화하고 금융자본에 특혜를 주는 제도를 시정해 산업자본의 이익을 지킬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리생활자와 금융자본의 동맹에 대해 산업자본과 노동조합의 동맹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같은 홉슨의 제국주의 이해는 경제학의 역사에서 '과소소비론'[12]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케인스 경제학이 등장하기 전에 미리 케인스 경제학적인 결론을 선취한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레닌이 직접 인용을 하지는 않았으나 『제국주의론』에는 홉슨의 선구적 연구결과로부터 받은 영향이 배어 있다. 후대의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그와 같은 영향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레닌의 제국주의 해석에 과소소비론을 비롯한 홉슨의 영향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다만 홉슨과 레닌은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는 타협이 불가능했다. 홉슨에게 제국주의가 정책 개념이었다면, 레닌에게 제국주의는 정책이 아니라 체제 개념이었다. 정책은 바꿀 수 있는 것이지만, 체제는 정책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레닌은 제국주의 반대는 혁명적인 체제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레닌의 정치적 입장은 제2인터내셔널을 지도했던 칼 카우츠키와도 대립했다. 카우츠키는 금융자본이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가를 팽창주의적인 도구로 변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카우츠키는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는 산업자본의 이해관계와 상반된다고도 주장했다. 산업자본한테는 자유무역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제평화가 유리한 반면 금융자본은 제국주의 정책으로 국가 간 전쟁에 앞장서는 점에서 둘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것이었다. 카우츠키는 제국주의가 당시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가능한 유일한 모습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국주의가 아닌 자본주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카우츠키의 입장은 산업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독점체를 형성함으로써 금융자본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결과였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변증법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립하

12) 대중의 구매력 한계로 인해 소비가 생산에 미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경제가 불황에 빠진다는 이론이다.

는 관계로만 이해한 것이었다. 그 둘은 실제로는 서로 단순히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전자가 후자로 발전하는 개념인데, 마치 그 둘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제국주의 전쟁이 발발한 것처럼 착각한 것이었다. 이렇게 제국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카우츠키처럼 사회주의 운동이 산업자본과 연대연합을 구축해 국제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식의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점에서는 홉슨도 카우츠키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금융자본은 전쟁에 친화적이고 산업자본은 평화에 친화적이라는 카우츠키의 이분법은 근거가 없다. 금융자본도 국제적으로 개방된 자유로운 금융시장을 선호할 수 있다. 산업자본도 전략적 경쟁을 위해 블록화된 세계경제를 선호할 수 있다. 홉슨과 카우츠키는 금융 세력, 특히 은행자본과 금리생활자 계층이 제국주의를 이끈 결정적인 힘인 것처럼 주장했다.[13] 분명한 사실은 제국주의 자체는 탈산업화에 대한 지향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은행은 회사 설립이나 투자, 인수, 합병 등 다양한 기업 활동에 금융을 제공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주식회사들이 창업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증권의 발행과 판매를 주도했고 그로 인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그런데 하나의 은행은 대개 여러 기업과 동시에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은행으로서는 기업들이 서로 전면적이고 격렬한 경쟁에 돌입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은행은 경쟁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일환으로 자본의 집중과 독점화를 적극 지원했다. 그와 같은 은행자본의 역할은 19세기 말 이래 산

13) 크리스 하먼에 따르면 레닌 역시 금융자본의 기생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홉슨이나 카우츠키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하먼, 2009: 30). 다만 금융자본의 기생성에 대한 지적이 틀렸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 점에서는 홉슨도, 카우츠키도, 레닌도 옳았다고 평가해야 공정하다.

업자본의 독점화가 촉진된 또 하나의 배경이었다.

제2인터내셔널의 경제학자 루돌프 힐퍼딩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그와 같은 긴밀한 관계에 주목했다. 힐퍼딩은 이들 사이의 제휴에 있어 은행자본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산업자본은 은행자본에 종속된 것으로 기술했다.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된 금융자본은 은행자본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네오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폴 스위지는 힐퍼딩이 "자본주의 발전의 한 과도적 단계를 지속적인 경향으로 잘못 인식"(스위지, 2009: 372)했다고 비판했다. 힐퍼딩이 주목한 시대는 주식회사의 설립과 합병에 따른 기업결합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한창때였고 따라서 은행의 전략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업결합이 항구적으로 늘어날 수만은 없는 법이다. 힐퍼딩의 시대가 지난 뒤로는 실제로도 그 빈도가 줄었다. 은행의 위치도 재조정되었다. "은행자본은 전성기를 누린 뒤에 다시 산업자본에 대해 종속적인 위치로"(스위지, 2009: 374) 돌아갔다. 기존의 은행과 산업 간 관계가 복원된 것이었다.

당시 관측되던 은행자본의 지배는 독점자본주의 단계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은행 지배의 과도기적 성격을 부인하면 종전 후 최근까지 자본주의 역사에서 경험된 사실들을 설명하기 힘들어진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패턴이 변화하면서 은행자본보다 내부 자금 조달이 우선시되고 있고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커지고 있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그 점만 보더라도 힐퍼딩 시대의 은행 지배는 어디까지나 역사적으로 특수한 한시적 현상이었던 셈이다.

그 점과 관련해 미국에서 1933년 은행법인 글래스-스티걸 법을 통해

은행업과 증권업이 분리된 사실도 거론될 수 있다. 동 법은 은행의 주식 취급을 금지해 은행-산업 간 제휴나 은행의 산업 지배를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차단하는 것이었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신자유주의와 함께 다시 금융화가 진전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무력화되었고 20세기 마지막 해인 1999년에 최종 폐기되었다. 그러나 1934년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금산분리가 강제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힐퍼딩이 보고한 것과 같은 은행 지배는 절대로 영속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정성진 (2003: 114)의 지적대로 오늘날의 금융세계화가 생산과 금융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점도 문제다. 만약 생산과 금융의 융합이 금융자본이라는 용어로 표상되는 제국주의 체제의 불변의 본질이라면, 제국주의는 이미 사라진 과거의 것이 되고 만다. 정말 제국주의는 사라졌는가.

은행의 산업 지배를 독점 단계 자본주의의 일반적 원리로 과잉 해석한 힐퍼딩의 오류가 금융자본이라는 용어에 반영되어 있는 점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동일한 용어를 레닌도 사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차이는 있다. 레닌은 산업에서의 독점체 형성이야말로 금융자본이 형성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힐퍼딩의 금융자본 정의가 “극히 중요한 사실, 즉 독점에 달했거나 달할 정도로 생산과 자본의 집적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침묵”(레닌, 1988: 77)한다고 비판했다. 스위지도 인용했던 “생산의 집적, 이로부터 생겨나는 독점체, 은행과 산업의 합병 혹은 유착, 이러한 과정이 바로 금융자본의 발생사이며 금융자본이라는 개념의 내용”(레닌, 1988: 77)이라는 레닌의 진술에서는 은행의 산업 지배가 직접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좀 더 공정하게 따진다면, 레닌이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

이 예민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레닌의 힐퍼딩 비판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레닌은 이를테면 "은행업무가 발전하고 소수의 수중으로 집적됨에 따라, 은행은 중개자라는 소극적인 역할로부터 탈피하여, 거의 모든 자본가와 소경영주의 화폐자본 및 한 나라 혹은 여러 나라의 생산수단과 원료자원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강력한 독점체가 된다"(레닌, 1988: 59)고 진술한다. 여기서 독점체는 산업자본과 유착된 금융자본을 뜻한다. 이 진술은 금융자본이 어디까지나 은행의 진화 결과이며 은행의 주도로 창출되는 것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레닌은 더 나아가 "산업과 금융계 사이의 밀접한 연관은 은행자본을 필요로 하는 산업회사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레닌, 1988: 70)한다거나 "은행과 산업 사이의 밀접한 연관에 대해서 말한다면, [중략] 산업자본가는 보다 완전하게 은행에 종속당하는 것"(레닌, 1988: 70)이라고도 언급한다. 다른 저자로부터 "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금융기관"(레닌, 1988: 73)이라는 표현을 재인용하기도 하고 "대은행이 [상공업계에] '명령'을 내리고 있"(레닌, 1988: 73)다고도 진술한다. "대은행의 이사들 자신도 국민경제의 새로운 조건들이 창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레닌, 1988: 74)다고도 밝힌다. 은행의 달라진 역할과 관련된 유사한 진술은 그밖에도 더 많다. 이들 진술은 대체로 레닌이 은행자본에 대해서만큼은 힐퍼딩에 현저히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14]

14) 자본 집중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는 등 은행자본이 독점화 과정에 밀접히 관련되었고 그 과정에서 은행 자신도 독점화를 겪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레닌도 힐퍼딩처럼 독일의 경험을 특권적으로 일반화하고자 했다. 레닌의 인용에 따르면 당시 거대 기업들은 "베를린에 있는 거대 은행 여섯 곳의" "지시를 받"았다(레닌, 2017: 22). 그 은행들은 "은행 업무의 연계성, 당좌계정, 여타 금융 업무 등을 통해 우선 다양한 자본가들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고, 신용을 제한·확대·촉진·방해함으로써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레닌, 2017: 43). 레닌에게 있어서도 금융자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 5표지 가운데 두 번째는 금융자본, 그리고 소수 금융자본에 의한 지배 체계를 뜻하는 '금융과두제'라는 두 용어로 집약된다. 그만큼 금융자본은 제국주의론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며 따라서 변화된 오늘날의 현대 제국주의에서 그 용어가 갖는 의미는 정확히 평가될 필요가 있다. 금융과두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제국주의의 필요조건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 스위지는 "'금융자본'이라는 용어에서 힐퍼딩이 부여한 은행자본의 지배라는 함의를 떼어내는 것이 가능할는지는 의문(스위지, 2009: 376)"이라고 지적한다. 그가 "그 용어를 아예 폐기하고 '독점자본'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스위지, 2009: 376)" 할 것을 제안했던 이유다.

그러나 20세기로 진입하던 당시 힐퍼딩이나 레닌이 주목했던, 은행이 수행한 역할은 어쩌면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금융 지배 자본주의에서는 금융 업종 전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법하다. 은행은 한때 뉴딜 국가의 제도화된 규제망 안에 있었지만, 신자유주의는 다시 금융 업종 전반에 걸쳐 규제 완화를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금융의 지배적 지위가 뚜렷해졌다. 은행이 아니더라도 각종의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투자기금들이 기관투자자로서 금융적 이해의 실현을 위해 산업을 지배하는 현상은 오늘날에 다시 관철되고 있다. 그 점에서는 독점자본주의의 금융 지배 특성에 달라진 바가 없다.

레닌에게 있어 금융과두제는 금융자본을 통제하는 소수의 상위 계층이

본은 어느 정도는 은행의 지배적 역할을 전제로 한 개념이었던 셈이다. 다만 제국주의 나라마다 독점화 진행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는 그의 지적은 충분히 타당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신흥 제국에서는 보호관세가 국내 자본 집중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반면 영국에서는 기업 간 경쟁 격화로 주요 경쟁 업체의 수가 줄어들면서 시장 집중이 진행되었다는 관찰 결과가 그랬다. 그와 같은 국가별 차이를 감안하면 독점화 자체도 상당히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볼 법하다.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대를 누리게 된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 금융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의 경영 원리 자체가 금융적 가치 중심으로, 즉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단기 수익성 중심, 현금흐름 중심으로 변모된 것과도 관련시킬 수 있다. 금융적 지대를 누리는 자산계층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점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스위지는 금융자본의 의미가 힐퍼딩에 의해 오염된 측면을 우려하면서 금융자본과 금융과두제의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두 번째 표지는 그 합리적 핵심이 독점체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첫 번째 표지에 이미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이 옳다면 두 번째 표지는 없어도 된다. 스위지는 두 번째 표지를 제거하는 대신에 "몇몇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산업제품의 세계시장을 놓고 대등한 수준의 경쟁관계를 형성(스위지, 2009: 427)"하는 것을 새로운 표지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스위지의 새 표지 역시 오류다. 그것은 그가 힐퍼딩을 비판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자신이 역사적 특수성을 보편성으로 오해한 결과다. 왜냐하면 새 표지의 내용은 열강들 사이의 대등한 수준의 경쟁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단일 패권에 의해 지배되는 제국주의 체제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현대 제국주의가 미국의 단일 패권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임은 부정할 수 없다. 스위지의 서술이 1942년이므로 미국의 단일 패권이 역사적으로 확립되기 전이라고는 해도, 적어도 그 시점에는 스위지 정도의 경제학자라면 미래 미국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충분히 내다볼 수 있었을 것이다.

4. 표지 3의 검토

이번에는 레닌의 제국주의 5표지 가운데 세 번째인 표지 3, 즉 자본수출 표지에 대해 검토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점자본은 가격을 설정하고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초과이윤을 누린다. 여기서는 공급 제한과 맞물린 만성적인 유휴설비의 존재로 인해 독점자본이 초과이윤을 자신의 설비를 확장하는 데에 쓰려는 유인이 크지 않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레닌은 "농업의 후진성과 대중의 빈곤"에 비하면 "자본주의가 과잉성숙"되어 "유리한 투자영역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레닌, 1988: 94).[15]

결론은 독점자본한테는 새로운 출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투자처는 둘 중 하나다. 하나는 국내에서 독점자본이 직접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 비독점 부문이다. 전통산업처럼 노동생산성이 낮아 독점자본이 흡수하지 않고 남겨진 영역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그런 영역이 당장 새로운 투자처가 되기는 어렵다. 국내 비독점 부문 중에는 국영 부문도 있다. 제도적 제한 때문에 독점자본이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면 독점자본은 끊임없이 민영화를 요구한다.[16] 남아 있는 또 하나의 출구는 해외 시장이다. 독점자본 입장에서 국내 비독점 부문과 해외 시장은 대체 관계에 있다. 기대수익률에 대한 판단에 기

15) 레닌이 자본주의의 '과잉성숙'을 언급한 맥락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농업이 후진적이라고 해서 혹은 대중이 빈곤하다고 해서 이윤율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브루어, 1984: 133). 대중의 빈곤이 문제라면 결과적으로는 유효수요 부족으로 국내시장이 제한된 사정이 자본수출의 원인이 되는 셈이다. 이 대목에서 레닌의 제국주의 해석이 홉슨의 과소소비론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드러난다.

16) 이와 관련해서는 데이비드 하비에 대한 보론의 논의를 참고할 수도 있다.

초해 투자 비중을 조정한다. 다만 위험을 고려해 둘 모두에 분산 투자를 시도할 것이다.

독점자본이 국내 비독점 부문 말고 두 번째 투자처인 해외 시장으로 향할 때 그 해외 투자가 바로 자본수출이다. 자본수출의 기본 형태는 해외에 직접 설비를 두고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하겠다. 국가 간에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장벽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국내 생산물의 해외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런 경우 직접투자는 독점자본에게 유리한 선택이 된다. 당나라가 과거 주변국들이 바치는 조공을 누렸듯이 현대의 독점자본은 그렇게 직접투자한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윤을 송금 받고 투자수익을 올린다.

다만 무역 장벽이 제거되고 자유무역이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면 독점자본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자회사 운영에 따른 영업위험을 추가로 감수해야 하는 직접투자보다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투자(FPI, foreign portfolio investment)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국주의의 본질적 속성을 직접투자나 차관 공여 형태의 자본수출로만 제한해서는 안 될 일이다.

기실 고전 제국주의론은 그 점에 있어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아 보인다. 직접투자나 차관 공여가 자본수출의 지배적 형태처럼 당시에 이해되었던 것은 어쩌면 고전 제국주의론이 정립되던 시기의 역사적 특수성을 보편적 특성처럼 인지한 결과일 수도 있다. 실제로 금융화가 진전되면서 주요 자본주의 나라의 해외 투자에서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비중도 직접투자 못지않다.[17]

17)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 해석에서는 자본수출을 차관 및 채권투자와 관련된 대부자본수출과 산업자본수출(기능자본수출)로 구분했다. 그런 다음 산업자본수출을 다시 자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직접투자로 해외에 대한 자본수출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포트폴리오 투자로 해외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는 특징이 관측된다. 예를 들면 2022년의 경우 직접투자로 382억 달러가 순 유출되었고 포트폴리오 투자로 4,377억 달러가 순 유입되었다.[18] 포트폴리오 투자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은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 즉 재무성증권을 안전자산 내지는 준비자산으로 매입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해외 부문의 미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엄격하게 따지자면 해외 나라들이 미국에 자본수출을 시행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는 직접투자로 자본수출이 이루어지면서도 자본수지가 흑자인 점을 특별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독점자본은 자본수출을 시작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다. 그러면서 해외의 잠재적인 경쟁자로부터 국내 시장에서의 자신의 영역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에도 동시에 직면하게 됐다. 독점자본의 선택은 자신이 속한 국가와 긴밀하게 유착하는 길이었다. 또한 독점자본으로서는 자신과 유착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편이 유리하기도 했다. 이제 독점자본의 국가는 정치적 지배 영역의 지리적 팽창을 추진함으로써 제국으로 변해갔다. 원재료의 공급처이자 생산물의 수요처가 될 식민지를 점령하고 병합함으로써 독점자본에게 독점적 초과이윤의 원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는 것이 제국주의 국가의 역할이 되었다.

자본수출은 우선 후진국으로 향했다. 후진국은 원료가 싸고 토지가격

본참여와 증권투자로 나누었다(자골로프, 1989: 87-88). 직접투자는 자본참여로,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 투자)는 증권투자(와 대부자본수출)에 해당한다고 볼 법하다.

18) U.S. International Transaction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Department of Commerce.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3-09/trans223.pdf)

이 낮으며 임금이 낮아 이윤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영국이 자본수출을 본격화한 시기는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 상품과 자본을 수출했다. 인도는 영국을 국제수지 흑자로 만들어주었다. 영국은 인도에서 벌어들인 부를 세계 다른 지역에 투자했다. 단, "자본수출은 수많은 후진국들이 이미 세계 자본주의적 교역에 편입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가능(레닌, 1988: 94)"했다. 자본수출이 이루어지는 후진국에서는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창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후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수출에는 제한성이 있었다. 독일의 벨기에 점령처럼 영토 분할이 식민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듯 자본수출 역시 식민지로만 향했던 것은 아니다. 영국 자본의 많은 부분은 인도 외에도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에 투자되었다. 나중에는 더 많은 자본수출이 식민지 후진국이 아닌 선진국을 향했다. 왜 이윤율이 높은 후진국 대신에 이윤율이 낮은 선진국으로 자본수출이 몰리게 되었을까? 그 문제는 이후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잠정적인 결론은 선진적인 기술은 수준 높은 인적자원과 결합할 때 제대로 구현된다는 것이었다. 기술과 인적자원 간에 일종의 보완성(complementarity)이 존재한다는 것이다.[19] 후진국은 인적자원의 한계로 기술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낮은 소득수준 탓에 구매력이 부족해 수요처로서도 제약이 작지 않았다.

자본수출은 레닌이 제국주의 5표지 가운데 세 번째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그것은 제국주의의 본질적 특성 가운데 하나로 이해된다. 그런데 자본수출은 실제로는 식민지가 아닌 나라로도 향하고 제국주의 나라들

19) 현재 문맥에서 보완성은 수준 높은 기술이 수준 높은 인적자원과 결합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사이에서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수행되기도 한다. 그런 자본수출을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 관계에 고유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먼에 따르면 자본수출에 대한 레닌의 강조는 심지어는 "레닌이 글을 쓰던 당시 상황에도 맞지 않았다."(하먼, 2009: 31) 이를테면 당시 미국과 러시아는 자본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반대로 유럽 선진국들로부터 자본을 도입하는 나라였다. 19세기의 마지막 사반세기 동안 미국과 러시아도 영토의 세계적 분할에 참여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러시아는 레닌의 제국주의 5표지 중에서 세 번째 표지 기준으로는 제국주의가 아니고 다섯 번째 표지 기준으로는 제국주의가 맞는 셈이다.[20]

레닌의 시대에 주요국은 자본수출에 있어 서로 상이한 경로를 밟았다. 영국은 주로 자신의 식민지를 대상으로 자본을 수출했던 것에 비해 프랑스는 유럽, 특히 러시아에 집중했다. 레닌 이후 시대에는 자본수출 양상의 시기적 변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재산업화 흐름, 자본수출과 자본도입이 선진국 사이에 주로 나타나는 점, 뉴딜과 황금기 동안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가 신자유주의 국면에 들어 다시 중요성이 커진 점 등은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전후 1950년대까지 기간만 보더라도 미국의 자본수출은 군비 지출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에 그쳤다. 1930년대 대공황시기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자본수출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감소했다(하먼, 2009: 59)." 국제

20) 토니 클리프 역시 "1860~1914년에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이 외국에 투자한 자본의 양은 거의 끊임없이 증가한 반면, 제국주의가 성숙기에 접어든 1914년부터는 외국에 투자한 자본의 양이 결코 1914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이하로 감소"(하먼, 2009: 32)했음을 강조했다. 소련을 미국과 같은 또 하나의 제국주의로 평가하는 하먼이나 클리프의 관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레닌의 5표지와 관련된 평가에는 참고할 점이 없지 않다.

무역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식민지를 경험한 후진국에 대한 자본수출은 더욱더 줄어들었다. 자본수출은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선진국 간의 관계로 국한되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레닌이 글을 쓰던 당시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과 이후 냉전 기간에 걸쳐서도 레닌의 5표지 가운데 자본수출 표지가 현대 제국주의론의 한 부분으로 적합한지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나라 자본가들이 누리는 투자 이익의 일정 부분은 자본수출의 결과로 실현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본수출은 제국주의 나라가 식민지를 수탈하는 유력한 방법이다. 해외 투자 수익을 누리려면 자본수출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규모나 중요성이 시기마다 달라졌다고 해서 자본수출이 제국주의의 기본 속성이 아닌 것처럼 간주할 일은 아니다.

크리스 하먼은 금융과두제, 자본수출 두 표지와 관련해 "금융자본과 해외투자 명제는 맞지 않았다(하먼, 2009: 57)"고 단언했다. 좌파들 다수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제국주의의 본질적 규정은 어디까지나 산업의 독점자본이 국가와 유착해 세계시장을 재분할하는 데에 있는데, 레닌의 금융과두제 표지나 자본수출 표지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등장했던 제국주의의 역사적 특성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돌아보면 금융과두제 표지나 자본수출 표지는 역사적 현실의 끊임없는 변화를 정확히 예견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제국주의 체제의 항구적 진실을 포착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으며 따라서 그와 같은 하먼의 비판에는 과도한 감이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해 20세기 말 본격적인 세계화 국면에 접어든 이후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흐름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달러 자금이 유럽 자산의 매입에 나서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자본수출이

늘었다. 해외 직접투자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세계 국내총생산의 9%였다가 1950년에는 4%로 줄었고 2000년에는 16%까지 다시 커졌다. 다만 되살아난 자본수출의 압도적인 부분은 이번에도 저발전국가가 아닌 다른 선진국으로 향했다. 미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약 절반이 유럽을 대상으로 했다.

5.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은 고전 제국주의론의 타당성을 시험대에 올린 사건이었다.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 해석에 따르면 1930년대의 축적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 열강들이 다시금 세계 시장의 재분할에 나선 것은 고전 제국주의론의 타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역사적 필연이었다. 달라진 점은 무역 블록으로 세계가 분할되면서 상품 무역과 자본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한 현상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놓고 제국주의가 보호무역에 더 친화적이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는 국내 독점자본이 외국 독점자본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환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지만, 종전 후에는 자유무역과도 대체로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유무역은 제국주의 나라가 단골 메뉴처럼 활용하는 노골적인 수탈 수단이 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은 파시스트 국가가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중공업 중심으로 자본축적을 주도했다. 경제의 군사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별 독점자본은 국가의 요구에 복종했다. 두 나라는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병합해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고 그들의 산업 기반을 자신들의 군국주의적 목적에 종속시키는 팽창주의의 길을 선택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 제국을 건설한 독일에 맞서 처음에는 세력 균형을 통한 공존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망상임이 곧 드러났다. 독일과 일본은 미국과 영국이 이미 제국으로서 세계 각지에 가지고 있던 부를 빼앗기 위해,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제국주의 열강의 이해관계는 심지어는 같은 연합군 진영 내에서도 대립을 피할 수 없었다. 전쟁이 한창인 중에도 영국과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두고 경합을 벌였다. 결과는 영국이 미국에 무기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해외 투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독일의 위협 하에 영국은 미국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제국주의 시대에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는 곧 독점자본과 유착된 국가의 이해관계였다. 이에 각국 독점자본 사이의 경쟁은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적대로 발전했다. 경쟁하는 자본가들의 집단이 국가를 이용해 세계를 영토적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는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이 중요해진다.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 국가가 경제의 군사화로 나아갔던 배경이다. 경제의 군사화는 방위산업과 철강, 조선 등 연관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극적으로 키웠다. 해당 업종에서 독점자본의 지배도 함께 강화되었다. 규모가 커진 군수산업 독점자본은 국가와 유착하며 공격적인 팽창 정책을 추구했다.

특히 제국주의 체제가 경쟁하는 열강들로 구성되었던 시기에는 각 열강마다 적극적인 군사적 행보가 필수적이었다. 한 지역을 직접 지배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패권을 행사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 더 이상 경쟁하는 열강들의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것이 오직 미국 한 나라한테만 허용되었다.

미국은 종전 후 자신의 손에 들어온 지구 절반을 지키기 위해 군비 지출을 늘렸다. 전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두 세계(two world)로 확연히 분리되었다. 미국 제국주의는 두 세계 중에 한 쪽인 자본주의 세계에서 유일한 패권적 지배자가 되었다. 미국은 그 세계에서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의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비 지출과 원조 제공으로 소련을 봉쇄하고자 했다.

체제 경쟁은 미국과 소련 양국에게 있어서는 단기적인 경제적 득실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만큼 군비 지출 규모는 막대했다.[21] 특히 미국은 40년 넘게 지속된 냉전 기간에 소련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구 곳곳에서 전쟁을 주도했다. 내전 개입의 역사적 시발점은 한국전쟁이었다.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현대 제국주의에서도 경제의 군사화는 지속되었다. 군비 지출은 필수 조건이 되었다. 군수독점자본과 국가기구 및 군부가 유착된 '군산복합체'가 그 특징적 단면이었다.

현대 제국주의에는 고전 제국주의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설명이

21) 미국 제국주의의 군비 지출과 소련 봉쇄는 큰 비용을 치른 것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동기가 지배했을 법하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는 고려하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단기적인 득실만 고려했다면 당시 미국 제국주의는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군사적 패권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당장은 손해인 듯 보여도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실현에 유리하다고 인식했을 것이다. 군사적 패권을 경제적 득실과 대립하는 것처럼 볼 일은 아니다.

힘든 특징들이 있다. 전후 수십 년간 자본주의 열강은 직접적 식민지배로부터 후퇴했다. 과거의 식민 정책은 큰 변화를 겪었다. 서방세계에서 제국주의 열강 간 갈등은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뜻을 거슬렀던 1956년 수에즈 전쟁이 사실상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는 열강 간 충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구식민주의의 역사적 퇴장은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 성립 및 사회주의와 비동맹 중립 세력의 대두를 주요 배경으로 했다. 식민지에 대한 직접 지배에 수반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신식민주의의 등장을 제국주의 체제의 해소로 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제국주의 열강은 직접 지배 방식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신식민지로 부를 만한 체제를 조성해 막대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했다.[22)]

그러나 고전 제국주의론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독점자본이 자신의 활로를 식민지 분할에서 찾아 세계대전까지 불사했던 시대가 지난 다음 서유럽의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은 식민지를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은 식민지 없이 자본주의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영광의 30년 동안 그 나라들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과 가장 평등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했다.

다만 식민지 상실 여부를 떠나 황금기 자본주의의 성공은 그것 자체의 내재적 요인도 따지면서 평가하는 편이 옳다. 여기서 내재적 요인이란

22) "새로운 지배의 방법 및 형태의 총체, 경제영역으로 중점을 옮긴 억압과 착취는 이른바 신식민지주의의 기초를 형성한다. [중략] 신식민지주의는 제국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구식민지에서 착취의 규모와 강도의 증대를 가능하게 했다. 신식민지주의의 정치경제학적 본질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발전도상국의 경제적 종속성과 낙후성을 독점적으로 수탈하는 것에 있다. 신식민지주의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의 적응형태이다(자골로프, 1989: 107-108)."

대체로 케인스주의 정부와 노동조합에 의해 독점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력이 형성되고 복지국가가 제도적으로 안착되면서 유효수요 부족이 완화된 사정을 일컫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본국에서 생산된 잉여를 흡수해 과소소비에 따른 침체를 막을 식민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과거 홉슨의 정책 제안이 현실화됨으로써 제국주의 체제가 실질적으로 막을 내렸다는 진단이었다.

이에 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입장은 전후 황금기의 원인을 케인스주의와 복지국가의 성공에서 찾는 것은 일면적 평가라는 비판에서부터 출발했다. 서방의 사민주의나 복지국가란 것도 결국 신식민지 수탈과 그것을 가능케 했던 미국의 군사적 팽창주의에 힘입은 것이라는 시각이었다.

전후 성립된 현대 제국주의 체제의 경제적 실체는 어디까지나 국가독점자본주의[23]였다. 그것은 미국을 위시한 각국 내부적으로 국영 부문 확장과 정부의 경제개입을 통해 축적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다시 미국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본령은 군사적 팽창주의를 주도하는 군산복합체에 있었다.

군산복합체는 군수독점자본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국가기구를 종속시키는 특수한 독점자본 지배체제라고 할 수 있다. 군산복합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오늘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팽창된 군수경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한편 국내경제와 관련해 군수산업은 국내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모순을 제어하면서 유효수요 제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축적의 위기를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해

23)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인 것은 아니다. 다만 레닌 시대의 제국주의가 당시 초기적인 독점자본주의를 물적 기반으로 했다면 제2차 세계대전 후 현대 제국주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물적 기반으로 하며 그 점에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법이기도 한 셈이다.

그렇게 주요국에서 독점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발전하면서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종속적인 제국주의 연합이 구성되었다. 식민 정책은 과거와는 달리 개별 국가에 의한 영토 분할 대신에 제국주의 연합 전체가 지배하는 집단적 신식민주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황금기에 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해석은 그와 같이 변화된 현실의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제국주의의 직접 지배에서 벗어난 과거 식민지 나라들은 이후 경제발전의 양상이 서로 크게 달랐다. 극히 일부 나라에서는 제국주의 선진국들이 구성해놓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동에 성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양적 성장의 길로 접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더 많은 나라들에서는 저발전이 대세였다.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나아진 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제국주의 나라에 의해 (신)식민지를 상대로 수행된 자본수출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자본수출 덕에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세계 구석구석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자본수출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자본축적을 진전시켰다. 이와 관련해 레닌은 "자본수출은 그것을 수입하는 나라의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발전을 크게 가속화"시키는 반면 "자본수출국의 발전을 어느 정도 정체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했다(레닌, 1988: 96). 자본수출은 경제적으로 제국주의에 불리하고 (신)식민지에 유리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전 제국주의론의 주장은 실망스러운 것이다. (신)식민지 후진국들이 역사적으로 겪었던 기형적 경제발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때문이다.[24]

24) 이후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 해석에서는 제국주의 지배가 식민지 경제의 저발전

Ⅲ. 종속 이론의 평가

1. 종속 이론의 문제의식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체와 후퇴를 경험하면서 경제종속에 대한 고전 제국주의론과는 분명 다른 설명이 필요해졌다. 바로 그 공백을 채운 것은 네오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폴 바란의 『성장의 정치경제학』(바란, 1984)과 그 영향 하에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이 발전시킨 종속 이론이었다. 레닌의 고전 제국주의론도 종속 이론의 틀 내에서 재해석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중심부 제국주의 나라가 아니라 주변부의 종속된 식민지 나라의 시선에서 문제가 다루어졌다.[25)]

(신)식민지 나라의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이 저발전으로 귀결되고 만다는 인식은 바란 이후 종속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시각으로 자리 잡았다. 그것은 고전 제국주의론과는 엄연히 다른 접근법이었다. 저발전국가들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이 선진국들의 과거 역사와는 크게 달라 저발전국가

을 가져왔다는 인식이 명확해졌다. "제국주의에 대한 경제적 종속은, 과거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 오늘날 겪는 경제적 낙후상태를 야기했다. 장기간 계속된 제국주의에 대한 종속이 그들의 본질과 구조를 기초지었다(자골로프, 1989: 108)."

25) 종속 개념이 분석적 목적에 유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종속되지 않은 중심부 경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주변부 경제만의 특성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단 여기서는 그와 같은 개별적 특성들의 존재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그보다는 그런 개별 특성들이 모여 하나의 구별되는 총체적 상태로서 국민경제의 종속 상태가 논의될 수 있는지가 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은 종속 상태의 특성들이 종속된 주변부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의 경제발전을 그것 자체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한 점만으로도 바란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기여는 작지 않았다.

종속 이론의 기본 입장은 주변부 나라에서는 자립적인 완전한 산업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요약되었다. 따지고 보면 (신)식민지 후진국을 대상으로 한 자본수출이 해당 (신)식민지 후진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투자는 철도와 같은 기반시설이나 자원 개발에 집중되어 제국주의 본국의 경제발전이라는 원래 목적에 보다 충실했다. 본국의 이해관계를 해칠 수 있거나 조금이라도 경쟁할만한 요소가 있다면 싹부터 잘려나갔을 것이었다. 오히려 자본수출은 식민지 경제를 왜곡되고 편중된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 과정에서는 선진국으로 이윤 배당 형식의 잉여 유출도 함께 이루어졌다.

문제를 정치적으로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신)식민지의 후진적 경제구조를 개선시킬 의향이 없는 지주계급 등 국내 기득권 세력과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긴밀한 유착이었다. 바란은 외국 자본에 빌붙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내 자본을 '매판자본'이라고 불렀다. 외국 독점자본과 그 배후에 있는 제국주의 국가야말로 저발전국가의 발전을 질식시키는 요인이라는 생각이었다.

종속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적 자립의 조건이 아주 명확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개 ① 생산이 주로 국내 시장을 지향해야 하고, ② 투자 재원이 주로 해외에서 조달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③ 국내 산업구조가 다양화되어 있어야 하고, ④ 기술도 자립적이어야 한다는 네 가지로 추려졌다. 그러나 이 경제적 자립의 조건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었다. 매판자본이 아닌 자립적인 민족자본의 형성이 관건이라면, 왜 해외

도입 기술이나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통해서는 자립적 민족자본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인지 해명이 안 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었다. 다만 민족자본의 존재 여부보다는 그것의 국내 경제에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따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논쟁 과정에서 더 명확히 인정되었어야 했다.[26]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신)식민지 경제가 균형 잡힌 발전을 경험한 사례는 정말 찾기 어려웠다. 산업화는 대개 본국 산업구조에 종속된 양상으로 진행되었고 그나마도 속도가 더뎠다. 예외도 있었지만 토착 산업의 성장은 대체로 쉽지 않았다. 본국과 (신)식민지 저발전국가 사이에 무역은 보통 저발전국가가 저렴한 1차 산품에 특화하고 본국은 공산품에 특화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졌는데, 본국으로부터 값싼 수입품이 수입되면서 자체적인 공업 기반은 파괴되었고 본국과의 사이에 새롭게 창출된 산업연관에 근거하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불균형적인 발전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신)식민지 경제는 자신들이 경험하는 경제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역량도 부족했지만 종속적인 경제구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도 없었다.

종속에 대한 그와 같은 인식은, 과거에는 자본주의 발전이 중심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조건을 창출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 발전의 결여가 주변부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조건을 창출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전일적 지배 속에 제국주의 중심부의 갈등 요인이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어 더는 중심부 국가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대중적 저항이 조직되기 어려워진 현실도 그와 같은 인식에 어느 정

26) 애초부터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 형태로의 발전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민족자본의 형성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수조건도 아니었을 터이다.

도 작용했을 법했다.

(신)식민지 사회에서 제국주의와 그것에 유착된 기득권 세력에 맞서는 정치적 대항력은 '민족국가'와 '민족해방'의 이름으로 조직되었다. 민족국가는 원래 자본가계급이 봉건적 질서에 도전하면서 영토 내적으로 경제를 통합하고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내세운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였는데 그 성격에 질적인 변화가 초래된 결과였다. (신)식민지 경제의 정체와 저발전을 배경으로 지주계급과 소수 부역자들을 제외하면 (신)식민지 민중의 거의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즉 민족해방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집결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자리를 잡아갔다. 민족주의적 반대 세력은 그와 같은 대중적 기반을 토대로 형성될 수 있었다.[27] 제국주의 체제에서 민족은 억압받는 (신)식민지 민중에게 해방을 상징하는 자기 정체성이 되었다. 민족주의는 자결권에 대한 자기의식이었다. 그것은 다시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는 세계화 반대의 깃발도 되었다.

2. 폴 바란과 성장의 정치경제학

바란은 경제학적으로는 스위지처럼 과소소비론의 시각에서 자본주의

27) '종속 = 저발전'의 등식이 현실에서 깨진 오늘의 관점에서 그간에 민족주의적 반대를 조직해온 물질적 기초가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지 않다. 기존에 종속 = 저발전 등식이 반제국주의 세력과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세력 간에 일정한 타협을 가능케 했던 반면, 그 등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면서 그 두 세력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토대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제국주의 운동을 새로운 토대 위에 재조직하는 과제를 제기하는 것일 뿐, 반제국주의 운동 자체의 물질적 기초가 해소된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 반제국주의 운동은 반자본주의 지향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그 동력을 노동자계급 중심성과 내부 통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의 특징이 노동자계급의 구매력 제한에 따른 유효수요 부족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출로 이어지지 못한 저축을 '경제잉여'로 정의한 다음 경제발전은 경제잉여의 규모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독점 이전의 단계에 비해 투자 부족이 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유효수요 부족이 만성적인 현상이 되면서 정체 경향이 뚜렷해지기 때문이었다.

바란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독점자본은 그 대안으로 생산적 투자를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낭비를 통해 경제잉여를 '흡수'(해소)하기에 이르렀다. 그 예로는 광고를 비롯한 비생산적 경제활동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독점자본이 자신들의 해외 활동에 대해 국가적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낭비였다. 단연 군비 지출이 그 목록의 맨 앞에 있었다. 바란은 임금 인상이나 복지 강화로 노동자계급의 구매력을 증대시키면 될 것이라는 케인스주의적 처방에 대해서는 레닌처럼 그런 처방 자체가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바란에게 있어 잉여의 재분배는 세계적 차원에서 불평등을 낳는 구조적 원인이었다. 세계경제는 잉여가 저발전국가로부터 선진국으로 유출됨에 따라 부자 나라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을 겪는다. 한 지역의 발전이 다른 지역의 희생의 결과라는 인식이었다. 구체적으로 바란은 후진국에서는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경제잉여의 규모 자체가 작고 더욱이 선진국으로 유출되어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제발전을 떠받칠만한 수준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진국 스스로도 투자 유인 결핍으로 인해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저발전 국가의 저임금도 투자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기반시설에 투자하더라도 그 결실이 주로 수출 기업이나 외국 자본에 쏠림에 따라 막상 국내 경제발전에는 큰 도움이 못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여러 복합적인 어려움이 후진국의 저발전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바란의 궁극적인 의도는 자본주의가 일정 단계까지는 성장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당시 이미 그런 단계는 넘어섰으며 따라서 선진국의 독점자본이 선진국과 저발전국가 모두에게 정체와 후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28)]

3. 라틴아메리카 구조주의 전통에서의 종속 논의

역사적으로 종속이론은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 사무총장에 임명되어 제3세계 행동주의를 이끌었던 아르헨티나의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의 영향 하에 라틴아메리카 구조주의 학파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학파의 기본적인 인식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주변부 나라들은 구조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중심부의 선진국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주류경제학이 적용될 수 없으며 제국주의 때문에 불균등발전이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프레비시 가설'은 주변부 나라는 중심부 나라와의 교역에 있어 수출품이 수입품보다 상대가격이 저렴해져 교역조건의 악화를 겪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중심부 나라와 주변부 나라의 시장조직 차이가 그와 같

28) 대신에 그는 사회주의가 경제성장의 과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업의 잉여가 먼저 중공업 발전에 이용되고 그 다음에는 소비재 공업 발전에 이용되는 발전 모델을 지지했다.

은 교역조건 변화를 초래하는 측면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중심부 나라의 제조업 생산물은 독과점 기업이 공급하는 반면 주변부 나라의 1차 산물은 영세 사업자들이 주로 공급하니까 주변부 입장에서는 국제시장에서의 상대가격이 불리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었다.

프레비시는 중심부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이 강하므로 경제가 호황이 되면 임금 인상으로 호황의 결실을 누리고 경제가 불황이 되면 임금 인하를 저지할 수 있지만, 주변부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해 세계체제 차원에서 불황에 따른 소득 손실 위험을 주변부 나라 노동자들이 교역조건 악화라는 형태로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무역이야말로 불균등발전을 조장하는 유력한 통로라는 것이었다.

정말로 교역조건이 주변부 나라들에게 불리하게 변해 왔는지는 실증연구로 따질 만한 대상이다. 일례로 Caraballo and Jiang (2016)에서는 1995년-2008년 기간 국제투입산출모형 분석을 통해 수출품 가치에 있어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 몫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분석하면서 그 원인을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해외로의 가치 유출에서 찾았다. 이와 관련해 UNCTAD (2016)는 수출품목 구성의 차이가 아니라 주변부 나라의 경제제도와 구조에서 교역조건 악화의 원인을 찾았다. 현재의 세계 무역 체제에서 주변부 경제는 제조업도 마치 1차 산업처럼 구조적 열위의 또 다른 원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UNCTAD, 2016: 130).[29]

29) 최근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종속 문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은, 종속에 대한 연구를 단일한 통일적 이론 체계에 가둘 필요가 없다는 데에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Kvangraven, 2021; Madriana and Palestini, 2021; Alami et al., 2023). 그보다는 종속이라는 연구 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적 접근법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연구 프로그램이나 프레임워크(사고 틀)로 발전시키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종속 연구의 틀이 갖추어야 할 원칙은 분명히 존재한다. Kvangraven (2023)에 따르면 그 원칙은 네 가지로 집약된다. 첫 번째 원칙은 개별 민족사보다는

4. ‘종속 = 저발전’ 등식의 검토

종속 이론가들은 선진국의 독점자본은 저발전국가의 산업발전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며 선진국 정부는 저발전국가의 집권 정부가 외국 자본에 끌려 다니며 자율적인 정책을 추구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내재적 발전의 꿈을 꾸지 못하게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았다.[30] 그런 인식이 옳다면 중심부와의 고리를 끊어낼 때 비로소 주변부 나라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볼 일이었다.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로 미화되어온 중심부와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중심부의 자본수출과 불평등교환에 따라 잉여가 지속적으로 외부로 유출되므로 저발전의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전망은 간단치 않은 여러 문제에 부딪혔다. 실제로 이후 전개된 현실은 종속된 주변부 혹은 반주변부 나라 중에서도 극히 일부 사례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경제의 충분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진 경우가 출현했기 때문이었다.

종속 이론은 독점자본주의 정체 경향을 이론화한 점에서나, 저발전국에서도 유효수요 부족이 나타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서 긍정적인 기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종속 = 저발전’ 등식을 고수한 것이 문제였다. 제국주의와 종속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

세계사적 접근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계 자본주의의 양극화 추세에 대한 이론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에, 그리고 주변부 경제가 직면하게 되는 특수한 제약조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는 새로운 종속 연구가 이들 네 가지 요소의 결합을 고유한 특징으로 해야 한다는 일종의 방향 제시인 셈이다.

30) 물론 그와 같은 인식의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혹시 입증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누군가는 정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는 그 등식의 논리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했다. 이 대목에서 전통적인 오해를 확실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종속은 기존에 저발전의 원인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그런 시각은 종속의 문제가 말 그대로 저개발국, 후진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 종속이 약화되고 궁극에는 종속적 구조가 저절로 해체될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종속은 저개발국이나 후진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양적 기준으로는 성장했지만 경제적, 정치군사적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가 있다. 반대로 저개발국이나 후진국도 경제성장의 양적 수준을 떠나 자주적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주변부 경제에서 자주적 발전의 길이 아예 막혀 있다고 단정부터 할 일은 아니다. 경제적 자립이 필연적으로 양적 성장을 포기하는 길인 것도 아니다. 종속된 경제만이 성장한다고 볼 일도 물론 아니다.

그런데 종속 이론에 대한 비판들도 대개는 '종속 = 저발전' 등식을 고수하는 잘못된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양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주변부 나라가 출현했다면 그런 경제는 종속이 해소된 것이고 따라서 식민지가 더 이상 아니라는 식의 비판이 바로 그렇다. 종속 이론을 비판한다면서 '종속 = 저발전' 등식을 당연한 듯 전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우리는 주변부 나라들의 산업화 진전을 종속 해소 과정으로 봐도 좋은가.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종속이란 무엇인가.

진보적인 관점의 경제학에서 종속 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몇 가지로 간추려질 수 있다. 그것은 먼저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는 중심부(center)와 주변부(periphery)가 구분되며 전자는 체제 질서로부터 이득을 누리고 후자는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종속에 대한 잘 알려진 (그러나 썩 만족스럽지 않

은) 하나의 학술적 정의는 “어떤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의 발전과 확장에 따라 조건 지어지는(conditioned) 상황”이라는 것이다(Dos Santos, 1970). 그리고 종속에 대한 진보적 관점은 지구적 범위에서의 경제 발전을 균등화나 수렴의 과정이 아니라 양극화 경향이 관철되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일차적으로 종속은 제국주의에 지배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경제적 종속은 제국주의 지배로 인해 경제구조가 편파적이고 자기완결성이 결여된 특성을 갖게 되는 관계로 파악된다. 독자적인 재생산이 불가능한 편중된 경제구조가 종속의 징표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중개 무역 중심의 나라는 어떤가. 그런 나라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나라는 제국주의에 지배당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분명 그 나라의 경제는 다른 나라 경제의 발전과 확장에 따라 조건 지어진다. 그 물음에 대해서는 중개 무역 중심의 나라는 경제적으로 특정 제국주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경제구조에 종속된 나라라고 답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는 제국주의에 지배당하는 나라는 아니라고 답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 종속이란 제국주의-식민지 관계를 필수적인 전제로 삼는 관계는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Dos Santos (1970)의 종속 정의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어떤 자본주의 나라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유럽 선진국들의 경제 상황은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기 마련이고 유럽 내에서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독일과 영국의 경제 상황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미국 경제도 유럽의 경제 상황에 의존한다. 어떤 나라도 그런 의존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은 나라는 없는 셈이다. 우리에게 그

런 무익한 종속 개념이 필요하긴 한가.

한편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와 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 가치 이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오늘날 제국주의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충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불평등 교환(unequal exchange)에 대한 국제가치론 자체가 바로 제국주의론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국주의론을 그렇게 국제가치론으로 왜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레닌의 제국주의 5표지는 종합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표지 5는 왜 존재하는가.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 관계가 결국 정치군사적 지배-종속 관계로 현상한다는 것이 표지 5의 결론적 의의가 아니겠는가. 왜 고전 제국주의론의 저자들은 20세기 초 독점자본주의를 제국주의라고 불렀는가. 그것이 가진 식민 정책의 특성 때문 아니었는가. 그런데 국제가치론에 따라 경제적 가치의 이전 관계에만 주목하게 되면 체제 표지의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는 근본부터 부인되고 만다. 더욱이 국제가치론 분석에서는 어떤 나라든 일부 나라들에 대해서는 종속국이면서 동시에 다른 일부 나라들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나라가 되고 만다. 그런 접근법으로는 반제국주의라는 실천 과제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제국주의론을 국제가치론으로 해소시키는 이론적 해석의 실천적 효과는 반제운동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만다.

어떤 연구자는 '경제적 제국주의'를 체계적인 가치 이전으로 잉여가 중심부로 유출되는 체제로 정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국주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와의 보통의 교역 관계에서도 가치 이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프랑스의 저명한 종속 이론가 아르기리 엠마누엘에 따르면 두 나라 사이에 상대임금 격차만 존재해도 잉여 유출이 일어난다.[31] 만약 제

국주의와 (신)식민지 사이에서 잉여 유출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수탈의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와 (신)식민지 관계가 아닌 두 나라 사이에서 가치 이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두고 경제적 수탈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은 단지 생산의 국제적 분업 체계에서 두 나라가 차지하는 위치의 차이를, 그리하여 둘 중 어느 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는지를 반영할 뿐이다.

이상 논의로부터 제국주의는 (신)식민지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될 때에만 그 의미가 온전히 회복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가치 이전은 제국(들)과 제국(들)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 제국주의는 국내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추종하면서 국가 권력이 해외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비록 경제적 동기가 출발점에 있다 해도 제국주의 체제에서는 정치적, 군사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제국주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제국주의 나라(들)와(과) (신)식민지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만 제대로 정의될 수 있다. 현대 제국주의의 집단적 신식민주의 체제에서라면 미국 제국주의 및 그 종속적 연합국들을 한쪽으로 하고 신식민지 나라들을 다른 한쪽으로 하는, 그 둘 사이에서만 제국주의 개념이 의미를 갖는 것이다.[32]

---

31) 엠마누엘의 불평등 교환을 둘러싼 논의는 최근 Ricci (2018, 2021) 등의 국제가치론 분석에 의해 발전되었다.

32) 주목할 점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계 구조를 지탱시키는 경제적 힘은 정치적 군사적 힘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종속 관계는 정치적 군사적 종속 관계에 의해 일정 부분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주변부 나라에 있어서는 국민경제 내에서 토착적인 내재적 동력이 작동하기에 앞서 역사적으로 먼저 정치적 군사적 종속 관계가 국내 지배 계급의 특성을 규정해온 점, 그리고 그 지배 계급이 국내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해당 사회의 경제적 사

무역 관계에서 한 나라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가치를 이전받지만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가치를 이전하는 관계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무역 관계 전체에 걸쳐 가치 이전의 순 합계를 계산한 다음 그것이 양(+)인지 음(-)인지 따지는 것도 그 나라의 세계경제에 있어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그런 숫자를 기준으로 해당 나라가 제국주의 나라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뿌리부터 부정하는, 완전히 잘못된 접근법이다. 특정 나라의 (신)식민지성을 가치 순유출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닌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경제적 종속을 그런 방식으로 다루어 왔지만 애초부터 그렇게 분석될 수 있는 관계는 제국주의-(신)식민지 관계와는 거리가 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독점자본의 국내적 영향력이 지배적이고 자본 순수출국이면서 자본 순수출에 따른 이득이 양(+)인 나라여도 제국주의 나라가 아닐 수 있다.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해석을 버리고 순수하게 경제적 관계에만 주목하면 어떤 나라든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제국주의는 (신)식민지와의 관계에서만 정의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제국주의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식민지이기도 한 그런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제국주의는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는 제국주의 나라와 아닌 나라를 구별할 수 없다. 그런 태도는 반제국주의 운동을 실천적으로 무력화시킨다.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중심부나 반주변부 나라에 속해도 제국주의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례로 동아시아의 일부 공업국가 중에는 199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중심부에 가깝게 진입해온

회구성체 성격이 확정되었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다.

것으로 평가되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미국에 대한 완전한 군사적 종속, 미국의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 분단체제 지속에 따른 사회의식의 왜곡과 극우적 낙후성 등 전형적인 신식민지적 속성을 드러낸다. 그와 같은 신식민지적 속성은 세계경제가 위기적 상황에 처할 때마다 미국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종속이 강화되는 모습으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이 국가권력의 지원을 받아 해외 (신)식민지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제국주의 체제에서 어떤 나라가 제국주의 나라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먼저 집단적 신식민주의 체제 내에서 그 나라가 차지하는 위치부터 따지는 것이 순서다. 단 그 과정에서는 고전 제국주의론의 표지 다섯 개 중에 1표지와 5표지를 중심에 놓되, 특정 표지에 집착하지 말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제국주의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옳다.[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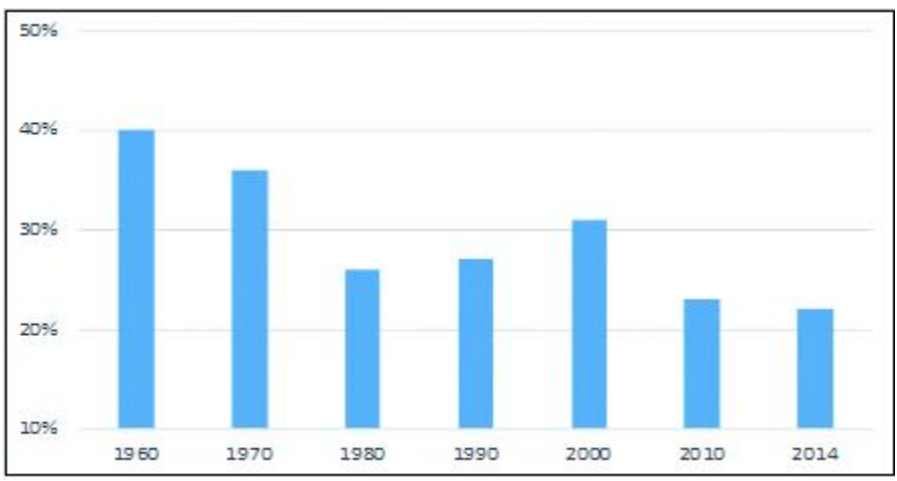
33) 유사한 이해방식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23: 33-5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Ⅳ. 달러 헤게모니와 금융제국주의

1. 경제적 균형의 변화

냉전 시대 자본주의 서방 세계에서는 미국을 정점으로 한 패권적 지배 체제가 유지되었고 열강들 간 통제 불가능한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경제적 균형의 큰 변화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미국의 경제적 위상 하락을 수반했다. 미국의 산출량은 1945년에 세계 산출량의 절반에 달했는데 1980년대가 되면 그 수치가 1/4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림 2-1] 세계 GDP 중 미국 비중



* 자료 : Patton (2016)

군비 지출은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수요처였다. 그런데 미국의 내수 경기가 군비 지출로 유지되면서 일본과 서독은 대미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군비 지출은 자국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 전체를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 반면 일본과 서독은 미국의 군비 지출 덕에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었고 생산성 측면에서도 미국을 앞지를 수 있었다. 일본의 제조업 수출은 1960년대 초에 미국의 1/3에 그쳤지만 1980년대가 되면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늘었다.

해외 직접투자가 늘면서 초국적 기업의 중요성이 커졌다. 초국적 기업은 생산의 세계화를 상징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편되었다. 해외 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화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20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 과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세계화 흐름은 확대되었다. 세계 최대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하면서 초국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국민국가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자본축적의 국민경제적 차원이 미약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세계화 과정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국민국가의 지원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초국적 기업들은 여전히 “어느 한 나라의 자본가들이 확고하게 통제”(하먼, 2009: 84)하고 있었다. 독점자본이 자국의 제국주의 국가와 지속적인 상호연관을 맺으면서 거대 초국적 기업으로 무대에 재등장한 것이었다.

일본과 서독의 도전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균형의 변화는 미국의 절대 패권에 상처를 남겼다. 베트남전 패배와 이어진 데탕트 국면의 군비 축소도 같은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자국의 지배력 약화를 배경으로 당시

만 해도 달러 헤게모니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브레튼 우즈 체제를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상황은 곧 변했다. 레이건 신자유주의 정부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군비 지출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 차세대 무기 도입을 강요하고 자국의 의제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신식민지 나라들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IMF를 동원해 고강도 긴축을 강제하기도 했다(초스도프스키, 1998).

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에 들어선 뒤로도 군사 개입이나 군비 지출은 오히려 1980년대보다 더 늘었다. 1990년대 말이 되면 세계 군비 지출의 35%를 미국 한 나라가 차지하게 되었다. 나토의 동진도 거침없이 추진되었다.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보호령인 유럽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견제가 이면에서 이어졌다. 그러나 보스니아 전쟁과 코소보 전쟁에 미국이 개입한 것을 계기로 유럽 열강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은 더욱 분명해졌다.

미국에서 재정 적자와 무역수지 적자의 이른바 쌍둥이 적자(twin deficit)는 골칫거리였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누적된 군비 지출에 있었다. 쌍둥이 적자는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웠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에 의해 메워졌다. 21세기의 첫 10년간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약 40퍼센트는 아시아가 원천이었고 약 25퍼센트는 유럽이 원천이었다. 아시아와 유럽의 투자자들이 미국에 자금을 빌려주고 미국은 그 자금을 군비 지출과 상품 수입에 쓰는 패턴이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와 같은 자금 흐름이 급격히 반전될 때 미국 경제가 궁지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것은 만약 미국에 투자하는 일부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달러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해외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수도

있으리라는 비관적 시나리오였다. 미국으로서는 자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자금에 의존하게 된 상태가 불안정한 균형임은 틀림없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와 같은 취약해 보이는 균형이 바로 달러체제의 논리였다. 그 균형의 안정성에 대한 판단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제국주의는 전체 지구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에 의해 지배된 조건에서의 제국주의인 점에서 레닌이 분석했던 제국주의와는 엄연히 다르다. 모든 나라가 이미 사실상 자본주의 나라가 된 점에서 과거 '반제-반봉건'의 맥락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대신에 반제국주의의 과제는 본격적으로 반자본주의의 과제와 직결되게 되었다.

미국은 일극 체제의 정점에 선 제국주의 국가로서 군사적 해법과 시장적 해법을 동원해 세계경제를 자신의 이해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는 전통적인 군산복합체의 힘의 논리에 초국적 금융자본의 금융적 가치 및 시장원리주의가 중첩된 특징을 가진다. 단, 미국은 더 이상 특정 국가를 과거 식민지처럼 직접 지배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세계경제 전체를 언제 어디서나 지배"(정성진, 2003: 114)한다.[34]

유일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힘은 그 근원이 군사력이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부동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제기구를 동원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정책을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독점자본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한다. 다시 1950년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미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근거로 틀림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34) 그러나 영토 지배가 자본의 순수한 축적 동기 덕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영토 지배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다. 신식민주의는 영토 지배가 자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결코 아니었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경제적 지배력이 어느 때보다도 취약하다. 그런데 미국은 그럴수록 더욱더 맹렬히 전쟁을 추구하고 내전에 개입한다. 패권 유지를 위한 사실상 남은 유일한 수단이 군사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미국 제국주의의 호전성과 군국주의적 성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어 왔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 흐름 속에서도 미국이 개입한 군사적 충돌의 사례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35)]

2. 종이 금의 시대: 미국 재무성증권 본위 체제의 확립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겪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에 별다르게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는 없다. 각국 중앙은행은 달러가 유입되어도 과거처럼 금으로 태환할 수 없다. 그래도 주요 미국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산유국은 없으며 미국에 해외 투자를 매각해 빚부터 갚을 것을 요구하는 아시아나 유럽의 대미 무역 흑자 나라도 없다. 미국은 과거 192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개전 초기까지만 해도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십분 활용해 당시 영국에게 해외 투자를 매각하지 않으면 더 이상 빚을 못 구할 것이라고 윽박질렀지만 말이다.

35)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세계적 보편화"로서만 파악하고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이미 그 방법론적·역사적 한계가 분명해"졌기에 폐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시각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런 접근법으로는 이를테면 표지 5와 연관된 정치군사적 식민지배와 민족자결의 현실 문제에 대해 마치 그런 문제 자체가 없거나 사라진 것처럼 주관적으로 해소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 논의에서 이미 밝혔듯이 고전 제국주의론은 역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한 가장 명확한 시각을 제시한다고 보는 것이 공정한 해석일 것이다.

1940년대 미국은 과거의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자유무역을 전면에 내걸고 하나된 세계경제를 창출하는 데 여념이 없었지만 영국에 대한 빚쟁이 역할만큼은 톡톡히 했다. 실제로 1941년 무기대여법(the Lend-Lease act)과 1946년 앵글로 아메리칸 조약에 따른 미국의 영국에 대한 대출에서 미국은 영국으로 하여금 제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스털링 지역을 청산할 것을 종용했다. 당시 영국은 미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에서는 미국에 굴복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랬던 미국이 이젠 채무국이 되고도 다시 한 번 세계경제를 윽박지르는 형국이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체 체계가 미국의 누적된 무역 적자에 의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무역 흑자를 보던 채권자로부터 무역 적자를 보는 채무자로 바뀌면서 전후 세계경제는 착취적인 성격의 이중 잣대로 특징지을 수 있는 체제 면모를 드러냈다. 1971년 미국이 금 태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국제통화체제는 사실상 '미국 재무성증권 본위제(the Treasury-bill standard)'로 바뀌었다. 이 통화체제에서 미국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다. 그러나 빚에 찌든 보통 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보유한 자원을 얼마든지 가져다 쓰면서 패권을 구가하는 독특한 채무자다.

달라진 국제통화체제에서는 과거의 금을 대신해 미국 연방정부의 빚증서가 준비자산의 역할을 한다. 대미 무역 흑자인 나라들은 수출로 유입된 달러를 그냥 방치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비교한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해 무역 흑자가 줄어들 수 있고 국내 통화량이 의도치 않게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음을 우려하게 된다. 그 경우 해당 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는 달러를 매입해 중앙은행 내부에 준비자산으로 쌓아놓는 것이 가장 손쉬운 선택이었다. 다만 달러 자체는 화폐여서 수익이 없

으므로 대신에 달러로 미국 국채인 재무성증권을 사 놓으면 이자수익을 벌 수 있었다. 꿩 먹고 알 먹는 결과가 될 것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미국 재무성증권은 점점 더 확실하게 현 국제금융체제의 기초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는 국제통화체제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 미국 재무성증권 본위 체제는 우선 국제금융의 고전적 규칙들을 미국한테만 유리하게 거꾸로 뒤집는 것이었다. 오늘의 이 체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누구도 미국처럼 그 규칙을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내팽개칠 수는 없었다. 채무국으로 지위가 전락한 나라라면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 것은 당연했다. 때로는 경제적 자율성이 희생되는 수모도 감수해야 했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를 겪은 신흥국이라면 미국이 조종하는 국제기구 때문에 국내 정책이 발이 묶여 정책의 재량적인 운용이 제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국내 공공 자산의 소유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실제로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는 지금도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을 방도가 없다.

미국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주로 해온 국제금융 규칙들을 과거 한때 지지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철저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편으로 미국은 제3세계나 구 공산권 국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권국가로서의 권리를 앞세운다. 채무국을 상대할 때 미국은 가차 없다. 국제기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신자유주의적이고 친미적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따를 것을 강요한다. IMF가 동원된다. 긴축과 민영화가 단골 정책이다. 동아시아 나라들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희생양이었다.

[표 2-1] 달러 헤게모니 (단위:%, 배)

	2000	2005	2010	2015	2020
세계 GDP 중 미국 비중	31%	28%	23%	24%	25%
세계 준비금 중 달러 비중	71.1%	66.5%	62.2%	65.7%	58.9%
미국 GDP 대비 달러 준비금 배수	2.29	2.38	2.70	2.74	2.40
국경을 넘는 은행 사무에서 달러표시 청구권(자산) 비중	57.2%	55.8%	56.4%	62.1%	60.8%
미국 GDP 대비 달러 표시 은행 청구권(자산) 배수	1.85	1.99	2.45	2.59	2.43
국경을 넘는 은행 사무에서 달러표시 부채의 비중	53.9%	53.0%	54.2%	63.9%	57.0%
미국 GDP 대비 달러 표시 은행 부채 배수	1.74	1.89	2.40	2.66	2.28
외화표시 채권발행 중 달러 비중	72.7%	73.4%	66.0%	65.8%	64.7%
미국 GDP 대비 달러 표시 채권발행 배수	2.35	2.62	2.87	2.74	2.59

* 자료 : Palley (2022: 464).

그런데 미국은 다른 한편으로 채권국을 상대할 때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금융 권력을 이용해 자신이 채무국임에도 불구하고 채권국의 양보를 얻어낸다. 더 나아가 그들한테서도 부를 수탈한다. 미국의 진보적인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은 이와 관련해 각국 중앙은행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금융제국주의(monetary imperialism)라는 용어로 개념화했다. 미국 금융제국주의의 세계경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가 과거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와는 달리 민간 다국적기업이나 민간 금융자본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인 점은 독특했다(Hudson, 2021: 430).

각국 중앙은행이 준비자산으로 달러를 사 모으자 미국은 달러를 넘치게 공급함으로써 해외 자원이나 기업을 얼마든지 제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해외 군사 기지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었고 원하는 만큼 해외 재화를 수입해 소비할 수 있었다. 그 대가로 국채, 즉 재무성증권을

발행해서 손에 쥐어주면 그만이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 현실은 사실상 미국이 달러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 전 세계경제로부터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채무자로서의 지위는 약점이기보다는 세계 통화금융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Hudson, 2021: 430)."

그 점과 관련해 역설적인 결과이지만 아시아와 유럽, 중동의 무역 흑자 나라들이 미국의 팽창주의적 군사 외교에 돈줄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인 다음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본의 아니게 미국의 군비 지출에 기여해 왔는데 그렇게 미국이 쓰는 군비가 중동 지역을 전쟁의 불구덩이로 만들어왔음을 그들이 알았을까.

이와 같이 강력한 금융 권력에 기초해 미국은 국제관계에서 편파적 혜택을 누려왔다. 미국은 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나라들이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나 자본 투자 필요에 맞춰 위성국가처럼 변할 것을 요구했다. 군사적 종속도 강제했다. 최근에도 가치동맹을 명분 삼아 종속적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한 궁핍화 전략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군사 관련 기술이나 첨단 기술 영역에서는 오직 자국만 독점적 지대를 향유하겠다고 국제적 분업의 재편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무역 제국주의'라는 모순적인 표현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과거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의 가장 열렬한 전파자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미국은 제3세계 국가들이나 유럽, 일본 등을 대상으로 이념적인 자유 시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강제적 경제 조치들을 단행한 바 있다.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늘 중상주의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해온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충복이자 마름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력한 하위 파트너 역할을 해온 '중소 제국주의' 국가 일본은 미국의 금융제국주의가 강제하는 일방적 요구에 희생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일본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자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강제로 엔화의 평가는 절상시키고 달러의 평가는 절하했다.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의도였다. 미국이 정말 자유 시장을 신봉하는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지만 실제 역사가 그랬다.

그러나 플라자 합의로 달러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전략을 바꿔야 했다. 달러가치가 더 떨어지면 미국 경제 입장에서도 불리했기에 중단했다. 그 대신에 1987년에는 서독과 일본을 불러 새로운 합의를 강제했다. 그것이 루브르 합의였다. 당시 억지로 합의된 내용은 서독과 일본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는 국내 경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플라자 합의나 루브르 합의는 미국이 자신의 협력 국가인 중소 제국주의 나라들을 어떻게 강압적으로 통제해왔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창출된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일극 체제는 이와 같이 미국과 미국 아닌 나라 사이에 비대칭적인 질서를 강제했다. 미국과 미국 아닌 나라는 다르게 취급되었다. 미국은 유일 패권국가로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었다. 국제기구에 가입할 때에도 미국 자신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억지 조건을 전제로 내걸고 가입했다. 미국이 아닌 어떤 다른 나라도 미국처럼 국내 정치를 핑계로 국제 협정을 자기 마음대로 파기할 수는 없었다. 오직 미국만 예외였다. 국제기구들은 명목상으로는 다자간 기구였지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관철시키는 도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나라도

없었다.

이와 같이 미국 재무성증권 본위 체제는 미국이 구조적인 무역 적자를 통해 전 세계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한 없이 공짜 점심(free lunch)을 누리는 점에서 수탈적인 특징을 가진 것이었다. 아시아와 유럽, 산유국의 채권국가 중앙은행들은 무역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를 거의 반자동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쓴다. 그렇게 미국에 끊임없이 돈을 가져다 바친다. 미국 국채 본위제 체제는 그렇게 작동된다.

과거 미국은 자본수출로 해외의 주요 산업을 매입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채권국들은 달러를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요 산업의 인수 여부를 고민하지 않는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비우호적인 것이라고 명확히 해놓았기 때문에 무역 흑자 나라들의 미국에 대한 자본수출은 미국 재무성증권 투자라는 제한된 범위로만 이루어진다(Hudson, 2021: 429). 그런 식으로 미국은 과거 채권국 지위를 이용해 누릴 수 있었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채무국으로서 누린다.

3. 미국 금융제국주의의 특징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얼마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었다. 각국은 달러 확보에 혈안이 되었다. 미국이 국제수지 흑자를 누리면서 세계경제는 달러 부족을 겪었다. 만일 미국이 계속해서 국제수지 흑자를 시현했더라면 닉슨이 금 태환 중지를 선언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미국이 유일 패권국이 되기 어려웠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국제수지 흑자를 봤다면 아마 세계 다른 나라들에는 금이나 달러 잔고가

점점 더 부족해졌을 터이다. 그렇게 되면 무역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미국 산업의 영향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는 교역이나 자본수출의 위축을 피할 길이 없다. 지속가능한 패권이 유지되기 힘든 구조였던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오늘까지 미국의 금융제국주의가 확립되고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세계적으로 달러 공급이 넘쳐나면서부터였다.

미국이 세계경제를 수탈하는 새로운 금융적 방식은 국제통화체제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금융제국주의가 그것이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더 심해져서 달러 외환이 더 많이 유입되면 그렇게 달러가 늘어나는 대로 각국은 준비금 보유를 늘렸다. 늘어난 달러는 재무성증권에 투자하는 데 쓰였다. 세계 각국의 저축은 미국이 무역 적자로 모자라게 된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재무성증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도 골치 아픈 문제가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 미국은 원하는 만큼 해외 상품을 수입해 소비해도 괜찮았고 그렇게 빚이 늘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것은 금융제국주의에 기초한 미국의 무임승차였다.

요컨대 미국은 차용증을 얼마든지 써서 그 돈으로 세계 곳곳의 생산물을 원하는 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다 쓰는 나라가 되었다. 그것은 아이러니였다. 미국이 제3세계에 재무성증권을 팔아 마련한 돈은 때로는 그 나라 민중들의 민주적 요구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데에 쓰였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미국 패권이 금융제국주의에 기반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제국주의가 미국 패권의 새로운 물적 토대가 되기도 했다. 미국이 냉전 기간을 거치면서 늘려온 전비 지출은 미국을 채권국이 아닌 채무국으로 전환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늘어난 달러

공급은 각국 중앙은행 준비금의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달러 리사이클링(recycling)' 구조가 안착되면서 오늘날 국제통화체제의 기초가 형성되기에 이른 것이었다.

우리는 미국이 전통적인 과거의 규칙을 깬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주류경제학 원리에 따르면 군비 지출 등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본 나라는 자국이 보유한 해외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아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긴축 정책으로 자본 유출을 막는 편이 순리에 가깝다. 그러니까 정부지출을 줄이고 금리를 올려서 경제성장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제수지 균형을 회복할 수 있어서다. 적어도 그것이 주류경제학의 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원리주의 주류경제학자들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책임을 맡은 미국만큼은 정작 그 교리를 무시했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지출을 줄이지 않았다. 무역 적자 폭이 아무리 커져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식이었다. 미국 경제학이 가르쳐온 조정 메커니즘이 미국한테만 통하지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달러가 기축통화로 확고히 자리 잡은 이상, 무역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바로 그만큼 해외 중앙은행들이 자동적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리라는 것이 파악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정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해외 중앙은행들은 재무성증권을 사 준다. 그렇다면 골치 아프게 증세를 할 이유도 없고 자국 내 국채시장의 유동성을 걱정할 이유도 없다. 미국은 재정 적자를 무역에서 적자를 봄으로써 벌충하는 구조다. 재정에서 적자를 본 것 이상으로 무역에서 적자를 보면 된다는 뜻이다. 미국이 무역수지와 재정에서 적자를 보면 실제로는 그 적자 규모에 상응하는 만큼의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부담해서 메꿔주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제3세계에서 미국의 은밀하거나 때로는 노골적인 군사 개입이 끝을 모르고 이어질 수 있는 것

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어느 정도 규모까지 적자를 봐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른다. 미국은 어느 정도의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경제적인 한계는 사실상 없다고 볼 일이다. 금융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화폐이론(MMT)의 이단적인 상상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진리의 일면을 포착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현대화폐이론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액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전후 직후 달러 리사이클링은 해외 원조나 전비 지출로 유출된 달러가 수출을 통해 미국 내로 돌아와 '환류'가 일어나는 구조였다. 그러나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달러 리사이클링은 무역 적자로 유출된 달러가 해외 중앙은행의 미국 국채 매입으로 환류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한편 국제수지 조정 메커니즘의 미국식 변형은 금리에 대한 상이한 영향에서도 드러났다. 원래 주류경제학에서는 국제수지가 적자가 되면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조정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새로운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에서는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해외 각국의 미국 국채 매입 증가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시장 실세금리가 떨어졌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미국의 세계경제 지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제3세계 순 채무국인 신흥국들에 대한 수탈이다. 달러가 부족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과거 채권국의 모습 그대로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해 워싱턴 컨센서스를 강요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그것이다. 그 경우 순 채무국들은 어쩔 수 없이 긴축을 선택하게 된다. 자국의 산업화는 방해받는다. 공공부문이 축소되고 민영화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다. 구조조정과 매각이 자연스러운 수순이

되고 만다. 미국에 근거를 둔 초국적 자본이 금융 투자자로서 광물자원 개발권과 공공 기반시설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 자급화도 저지당한다. 긴축과 함께 미국에 대한 산업적 종속이 사실상 강제된다. 원자재 및 노동력의 저가 공급이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로 남는다. 요컨대 자립적 발전의 전망이 가로막힌다.

두 번째 방향은 미국에 대해 순 채권국인 산업경제 강국들에 대해 그들이 저축해둔 금융 재원을 구조적으로 흡인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달러가 넘쳐나는 순 채권국과 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대미 무역 흑자국인 동아시아나 유럽 일부 나라들, 그리고 산유국들은 달러 리사이클링 체제에 편입되어 구조화된 강제 저축을 수행하게 된다. 그 나라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달러로 표시된 미국 자산의 매입에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얽매여 있다. 수출 늘린다고 임금 깎고 저임금 유지한다고 곡물가격 억누르는 식으로 국내적으로는 민중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번 돈을, 그렇게 저축한 재원을 홀라당 미국에 가져다 바치는 형국이다. 자칫 여러 나라들이 달러 자산 매입을 중단하기라도 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준비자산의 가치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로부터 이탈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빨아들인 다른 나라의 저축은 결과적으로 제국의 군비 지출을 돕고 금융 지배 자본주의의 상부구조를 공고히 해 자산 가격 거품을 곳곳에 만들어낸다.

이것은 레닌의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국주의의 모습이다. 본래 레닌의 제국주의가 자국 내 잉여의 처분을 위한 수요처를 해외에서 찾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면, 미국 단극체제의 세계경제 현실은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에 가깝다. 유일한 제국으로서 미국이 자국 스스로 상품의 수요처가 되면서 그 수요의 재원을 자체 신용 창출을 통해 무한정 장

만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 점에서 그렇다.

제국주의의 장기적인 이해관계는 세계시장에서의 권력 강화에 있다고 볼 법하다. 그런데 그것은 단기주의 편향이 강해지는 독점자본의 사적 동기만으로는 보장되기 어렵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독점자본의 사적 이윤동기에 의해 추동된 현상만은 아니었고 세계 여러 나라를 미국의 위성국처럼 만들려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국의 정치권력과 그 배후에 놓인 지배자들의 힘에 의해 정교하게 통제된 것이었다.

워싱턴 컨센서스와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미국 이외의 나라가 미국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늘렸다. 초국적 자본과 지대 향유 계층에 봉사하는 금융 부문이 가져가는 몫이 커진 것이 그 한 요인이었다. 다양한 외관을 띄며 진행된 해외의 민영화는 미국 금융 부문이 해외에서 독점적 지대를 '뽑아먹는' 것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해외 나라는 자국 경제 내에 고비용 구조가 고착되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주택가격과 주거비용의 상승은 그 한 단면이었다.

미국 제국주의가 세계 각국에 이식한 고비용 구조는 산업 활동에 있어서도 지장을 초래했다. 미국 자본의 진출로 금융 부문이 팽창하면서 역으로 자국의 산업 부문이 짓눌리는 경향도 감지되었다. 미국계 주주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기주의와 고배당, 자기주식 매입에 따른 유보재원 소진이 문제였다. 그로 인해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국내 장기 혁신 투자는 가로막히기 일쑤였다. 금융화가 초래한 금융 지배 자본주의에서는 경제 내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새로운 계획 단위로서 소수 금융 센터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오래전 레닌이 제국주의의 다섯 가지 표지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금융과두제가 그렇게 부활했다. 다만 이번에는 미국

계 금융자본이 주연을 맡았다.

허드슨의 금융제국주의론에는 지대를 향유하는 자산가들이 등장한다. 고전 제국주의론과 비슷한 지점이다. 일찍이 레닌은 금융과두제 하에서 자본수출로 이익을 남김으로써 식민지 노동자들 덕에 먹고 사는 기생적 계층의 존재를 지적했다. 그런데 오늘날 미 재무성증권 본위제의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에서 미국은 무역수지는 적자이고 자본수지는 흑자이다. 자본수지 흑자는 자본수출보다 자본도입이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자본수출의 정반대 현상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금리생활자들의 지대 향유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달러 리사이클링에서 해외 중앙은행은 수익률이 낮은 미국 재무성증권에 투자하는 반면 미국의 자본수출은 해외 고수익성 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가능하다. 비록 절대 규모에서는 해외 중앙은행에 의한 재무성증권 투자가 미국의 자본수출을 압도하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미국은 자본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 순 투자에서 양(+)의 이익을 누린다. 더불어 달러 리사이클링 구조 자체가 미국의 자본수출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달러 자산 취득에 투자할 자금을 미국으로부터의 자본도입으로 쉽게 조달할 수 있어서다.[36]

36) 정성진(2003: 114)은 “자본수출을 제국주의의 핵심 특징으로 설정하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으로 오늘 세계 최대의 자본수입국인 미국 제국주의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수지가 흑자이면서도 자본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해외 투자로부터 순 이익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4.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란

허드슨이 제시한 이와 같은 국제통화체제 특성은 기존에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논의였기도 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와 같은 구조적 불균형을 근거로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문제 삼기도 한다. 그것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구조화될수록 달러가치 하락 위험이 점점 더 커질 것이기에 유사시 채권국들이 미국 재무성증권을 매도하고 나선다면 체제 자체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리고 체제가 무너지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패권 상실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달러 리사이클링의 현 체제는 정말로 위험 요인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무역 적자로 인해 세계적으로 넘쳐나게 된 달러는 금융시장과 상품시장에서 투기를 부추기고 자산 가격 버블을 키울 위험이 있다. 이는 실제로도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금융 지배 자본주의의 파괴적 영향은 그 과정에서 증폭될 수 있다.

다만 미국이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든 현 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비용이 제법 드는 선택이기도 하다. 우선 미국으로서는 현 체제가 공짜 점심을 누릴 수 있는 구조이기에 불균형을 바로잡고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자진해서 옮겨갈 리는 없어 보인다. 균형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군비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된 배경에는 막대한 해외 군비 지출이 도사리고 있다. 군비 지출로 수입 증가가 유발되면서 무역 적자가 커진 것이었다.

그런데 군비 지출이야말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패권 유지를 가능케

하는 힘의 기반이다. 미국 내 군산복합체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군비 축소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다. 더욱이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 미국 국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해 수출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방향은 현 체제 하에서 미국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소지가 없지 않다. 최근 관측되는 재산업화 움직임도 첨단 전략 부문 중심으로 제한적으로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불공정한 현 체제가 붕괴되면 치러야 하는 비용이 적지만은 않다. 그 점은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라는 경제학의 유명한 이야기와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다. 이 딜레마의 한 축은 준비자산인 달러를 공급하는 미국이 무역에서 흑자를 보면 준비자산의 세계적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무역에서 적자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딜레마에는 모순을 야기하는 다른 축도 함께 존재하는 법이다. 딜레마의 다른 축은 그렇다고 미국이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보면 달러가치가 하락해 세계경제가 이번에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가급적이면 무역 적자를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한 축에서는 미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봐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축에서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면 안 된다고 말하니 딜레마가 맞다.

그런데 그 딜레마는 미국이 적자를 계속 보면서도 달러가치가 하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딜레마가 아니게 된다. 모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러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떠받치는 힘들이 있다. 첫 번째는 금융위기다. 금융위기는 설령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 월가인 경우라도 발작처럼 달러가치를 높여왔다. 따라서 각국 중앙은행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달러 표시 준비자산을 보험처럼 보유한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른다는 이유로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미국을 따라 금리를 같은 속도로 올리는 길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 비해 천천히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를 올리지 않는 길이다. 그 경우 달러값, 즉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결국 국내 물가가 오른다. 상황이 악화되면 외국 자본이 갑자기 떠나갈 수도 있다. 달러 값이 너무 많이 올라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길이 두 번째 선택에 해당한다. 둘 다 가기 싫은 길이다.

달러가치 하락을 막는 세 번째 힘은 미국을 제외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외환시장 개입이다. 이들은 자국의 수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기에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심초사한다. 달러가치를 미국이 아닌 해외 중앙은행들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드는 셈이다.

끝으로 미국 밖의 해외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달러가치를 떠받치는 요인이 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달러는 미국이 발행하지만 전 세계의 화폐다. 무역에서는 달러가 결제자산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미국 밖 해외 나라들의 경제성장은 교역의 증가를 수반하고 그 과정에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늘어나게 되어 있다.

1971년 달러의 금 태환이 중지된 이후 달러가치가 폭락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개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무역 적자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미국은 그 점에서

도 예외적이었다.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서도 적자의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막상 미국 재무성은 당장의 결정적인 위험 요인으로 여기지는 않는 듯하다. 그 배경에는 아마도 앞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이미 지속가능한 구조처럼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무역 적자가 늘어날수록 해외 중앙은행들에 의한 미국 국채 매입으로 달러가 '리사이클링'(미국 국내 경제로 돌아옴)되는 규모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서였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 적자는 재정 적자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와 같은 쌍둥이 적자는 미국 국채가 금을 대신해 준비자산으로 확립된 현 국제통화체제의 내재적 작동 원리에 해당한다. 분명한 사실은, 쌍둥이 적자처럼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동시에 체제의 작동 원리가 되고 있는 점에서 현 체제는 진정 모순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그간에 체제의 외관상 안정적 재생산은 모순적인 그 체제가 결국 군산복합체와 월가 금융자본을 지원하는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에 궁극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패권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쌍둥이 적자가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패권을 지탱해온 요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재앙은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국제관계가 과거에 때로는 균열을 불러오기도 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미국 단극 체제의 폭력에 맞서는 자기보호 성격의 지역 블록화 경향은 수면 아래에서 이어져왔다. 유럽의 경제통합이나 산유국간 협력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오늘날 미국과 그 하위 파트너인 일본 및 유럽 열강으로 구성된 제국주의 중심부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미국이 강제로 질서

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현 체제의 안정성이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5. 탈산업화와 재산업화

미국은 해외 군비 지출 부담이 초래하는 무역 적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자본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외국 경제에서 가장 알짜인 고수익 부문을 쏙쏙 매입해서 본국인 미국으로의 송금을 늘린다는 의도였다. 그렇게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꾸려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다국적기업으로 변모했다. 멕시코와 같은 해외 생산 기지에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에 고용되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했다. 미국이 중국을 세계경제에 편입시킨 이후 생산과 고용, 설비투자의 중심지는 자연스럽게 아시아로 옮겨갔다.

미국에서는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이 점점 더 뚜렷하게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아갔다. 공동화된 국내 제조업 지역은 금융자본의 부동산 개발로 재탄생했다. 자본수출의 이면으로 국내에서는 금융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미국은 군수산업을 제외하면 점점 더 많은 제조업 제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국제통화체제가 미국 재무성증권 본위제로 안정된 덕택으로 미국의 제조업 제품 수입도 큰 어려움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무역 흑자인 나라들은 말하자면 미국한테서 국채를 받고 그 대가로 제조업 제품을 미국에 넘겨주는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쯤 되면 질문이 자연히 떠오른다. 탈산업화를 겪고 있는 미국은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다른 나라들을 지금처럼 '등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말이다. 다만 미국이 순전히 자신들의 필요로 세계경제 무대에 끌어들였던 중국을 이제 '전략적 경쟁' 관계로 일방적으로 재설정하고 공공연하게 협력 관계에서 배제하는 최근 흐름을 보면,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힌트란 것은 다름 아니라 미국 내 지배세력 스스로도 변하지 않으면 더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반도체를 위시한 전략 산업 영역에서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의 생산 기지를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고 종속적 동맹국들의 생산 거점 또한 미국 내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변화는 기실 그간의 자본수출을 정확히 거꾸로 뒤집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제국주의 표지 가운데 하나인 자본수출이 아니라 그것의 정반대 현상이 지금 제국주의 나라 미국의 주도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스스로 가치사슬의 국내 집중과 리쇼어링을 통해 재산업화를 추진하는 최근 흐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와 같은 최근 흐름을 1960년대와 70년대 이후의 추세를 역전시킬만한, 다시 한 번 찾아온 큰 변화로 볼 것인지 여부부터가 문제다. 그것이 새로운 축적 양식의 한 단면인지, 아니면 미국의 과도기적인 세계경제 재편 전략의 일환인지도 따져볼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최근 정책 변화를 두고 제국주의 체제 성격에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해할 일은 아니다. 실제로는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늘 가장 선진적인 생산 부문을 석권해 왔다. 유일무이한 경쟁자가 한때 소련이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미국 정부가 다시 정치적 힘을 이용해 첨단 전략 부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소련 말고 중국이 유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것뿐이다. 미국은 차제에 세계경제의 지도를 재구획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설계함으로써 첨단 분야에 대한 지배력을 보다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어디까지나 기존 미국 산업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예측 가능한 변화라는 뜻이다.

진짜 문제는 그와 같은 미국 산업정책이 가진 제국주의적 성격이다. 미국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자본수출 대신에 거꾸로 타국의 생산 기지를 자국 내로 집중시키려는 것도 변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모습의 제국주의적 수탈이다. 그것이 가치동맹에 편입된 나라들의 국내 산업 기반을 공동화시키고 그 나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미국이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무역 적자폭을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와 같은 최근 변화도 어디까지나 첨단 전략 분야에 국한된 것이기에 전반적인 국제수지와 자본 이동 패턴이 기존과 본격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미국 금융제국주의가 작동하는 구조적 틀인 국제통화체제의 미국 재무성증권 본위제 특성이 흔들린다면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 지배세력부터 발 벗고 반대에 나설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이어지는 현재의 제조업 부흥 전략 자체는 미국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미국 금융제국주의가 품고 있는 내적 모순이 더욱 격화되는 현실을 드러낼 뿐이다.[37] 미국의 보수 정치는 제조업 부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존의 축적 전략과 충돌하고 있다. 따

37) 미국이 외견상 자본수출의 정반대인 종속국으로부터의 자본도입에 열중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 국내 경제의 활로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런 정책은 미국 금융자본과 지대 향유 계층의 이해를 중심에 놓고 보면 일종의 자해라고도 할 법하다. 달러 헤게모니를 스스로 위협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서 제조업 부흥은 기득권을 대표하는 금융자본 세력에 의해 제한된 규모로만 허용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본수출의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 제국주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다. 고전 제국주의론을 애초부터 폐기의 대상으로 여겼거나 아니면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는 성서로 여겨왔다면 오늘의 이와 같은 현상을 노동자계급 관점에서 제대로 평가하거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논의했던 것처럼 자본수출이나 금융 지배의 특정한 양상 자체는 제국주의 체제의 특정 시기에 관측되는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고전 제국주의론의 다섯 지표가 항구적으로 타당한 절대불변의 금과옥조인 것만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고전 제국주의론의 기존 5표지에 대한 현대 제국주의론 관점에서의 재구성과 새로운 이론적 합의의 도출은 향후 진보정치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연구 과제로 제기된다고 하겠다.

6.평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허드슨의 금융제국주의론에 대해 간략한 평가를 시도한다. 허드슨의 논의는 금융화로 상징되는 변화된 경제 환경과 금융 지배 자본주의의 체제 동역학을 제국주의 분석의 중심 주제로 설정한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미국 재무성증권 본위제라는 국제 통화체제 성격 규정에도 탁월한 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허드슨의 연구는 진보진영 내에서는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 금융자본의 운동을 중심으로 미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헤게모니가 재구축되는 흐름을 정확히 읽

어낸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였다.

경제적 지대를 수탈하는 계층이 금융제국주의를 떠받치는 국가장치 배후의 지배세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경제적 지대를 수탈하는 계층은 군산복합체와 월가의 초국적 금융자본으로 대표된다. 허드슨의 이와 같은 이해 방식은 기존의 자칫 고루해 보일 수 있는 계급 분석에 갇히지 않은 것으로서 그 덕분에 생동감 있는 현실의 포착이 가능해진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허드슨 논의에서 강점은 또한 약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생산과정에서의 착취 문제가 논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자본주의는 분명히 제조업이 공동화되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지배하는 경제적 사회구성체이다. 상대적으로 탈산업화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미국을 두고 산업자본과 노동자계급의 직접적 적대관계를 지우고 볼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허드슨은 미국 자본주의를 사회구성체 단위로 분석하지 않는다. 고전 제국주의론은 그와는 반대다. 그 점이 고전 제국주의론의 강점이자 허드슨의 논의에서는 누락된 약점이다. 허드슨 논의의 그와 같은 한계는 다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간 대립을 강조하면서 바람직한 발전 전략에 있어 전자를 옹호하고 후자를 부정하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금융자본의 지배에 맞서는 산업자본과 노동자계급 간 연대연합의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홉슨이나 카우츠키에게서 발견된 편향을 그대로 답습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허드슨은 사회주의와 산업자본주의의 구분보다도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구분을 강조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적어도 노동자

계급의 관점은 될 수 없다.[38)]

레닌과 바란의 한 가지 공통점은 제국주의를 전복시키는 정치의 기획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은 달랐지만) 반자본주의의 관점을 명확히 한 데에 있었다. 그러나 허드슨은 그렇지 못했다. 그 결과는 산업자본주의의 회복이라는 복고적이고 개량주의적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허드슨 논의에서 발견되는 계급적 관점의 부재는 분석 방법론에서도 확인된다. 특징적으로 허드슨은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주류경제학 담론을 미국 금융제국주의의 체제 원리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그 구조는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순을 담지한 것임은 이미 앞에서 밝혔다. 그러나 설명 틀 자체는 방법론적으로 주류경제학의 그것을 그대로 차용한 것일 뿐이다.

주류경제학 방법론을 차용하다보니 결과적으로 허드슨의 논의에서는 금융제국주의 체제가 항구적으로 작동 가능한 것처럼 이해되기 쉽다. 체제의 이행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재무성증권본위제의 이행 내지는 체제 전환이 가능할지 우리는 허드슨의 논의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다. 만약 허드슨의 의도가 이행의 동학을 산업자본주의의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승리에서 찾는다면 그런 점이야말로 대단히 실망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산업과 금융 간에 잘못된 대당을 설정한 탓에 노동자계급의 주체적 관점이 체제 전환의 동학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 또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그리고 산업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사이에 대

38)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금융자본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고전 제국주의론과 허드슨 논의에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본래 제국주의론에서 금융자본은 은행자본과 유착된 산업자본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허드슨 논의에서는 일상적인 용어 사용법을 따라 은행자본과 비은행자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금융산업에 투하된 자본이 금융자본으로 지칭된다.

립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레닌의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레닌은 그 둘을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거꾸로 서로 유착하는 관계로 인식했다. 힐퍼딩에 따르면 그 둘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관계였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발전적 계기 속에서 융합되고 상호 작용하는 관계라고 보는 편이 변증법적 유물론 관점에서 타당하며 그 점이야말로 레닌이 카우츠키를 비판했던 논점 중 하나였다. 그러나 허드슨은 또 다시 홉슨이나 카우츠키의 한계에 갇혔고 그 둘 사이의 형식적 대립 관계를 일면적으로 가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V. 소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유럽의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이 세계의 경제 분할과 영토 분할을 위해 자신의 국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등장했다. 레닌은 열강들 간 경쟁이 극도로 첨예화된 역사적 국면을 분석하면서 고전 제국주의론을 완성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유일 패권 국가로 등장한 것을 배경으로 고전 제국주의론은 한쪽에서는 한 글자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절대 불변의 고정된 진리로 신성시되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국 없는 제국주의',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의 이름으로 이론적 파산이 선언되었다. 제국주의론의 발전은 그렇게 봉쇄되었다.

하지만 전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실천에서 제기되는 실제 과제는 고전 제국주의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폐기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었다. 노동자계급의 과제는 변화된 체제 환경에서 고전 제국주의론이 안고 있는 난제를 진단함으로써 현대 제국주의론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는 그동안 진전이 뚜렷하지 않았다.

여러 문헌에서 산발적으로 고전 제국주의론의 약점을 논의했지만 그런 논의가 제대로 평가되거나 종합된 시도는 별로 없었다. 따라서 그 약점이란 것도 극복되기 어려웠다. 특히 금융자본과 자본수출의 역할을 비롯한 제국주의 5표지의 문제는 해결 못한 고민거리처럼 남아있던 것이 사실이다.

힐퍼딩의 논의에서 비롯된 은행자본 주도 금융과두제(표지 2)는 이후

전개된 역사적 현실과는 차이가 있었다. 자본수출(표지 3)도 역사적 국면마다 그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미국 일극 체제에서는 세계의 경제분할(표지 4)도 면모가 과거와는 완전히 바뀌었다. 자주 역량의 결실로 구식민주의 체제(표지 5)가 붕괴된 변화도 있었다. 고전 제국주의론은 적어도 기존의 내용 그대로는 이와 같이 변화된 체제 환경을 담아내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현대 제국주의 체제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제국주의 5표지를 비롯한 고전 제국주의론 전반은 이와 같은 현대 제국주의의 특징을 반영해 적절히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독점자본은 늘 자신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분업을 신식민지에 강요한다. 종속의 형태는 직접투자와 차관 제공, 포트폴리오 투자를 비롯한 자본수출의 다양한 방식과 연결된다. 그것이 곧 개별 신식민지 나라가 제국주의 체제에 편입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둘째, 제국주의는 열강들 사이의 자체 모순을 재생산한다. 미국이 유일패권 국가인 단극 체제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중심 하위 파트너인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서는 세력권의 재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물밑에서 이어지곤 한다. 심지어는 그들과 미국 사이에도 잠재적인 이해 충돌이 감지된다. 미국 제국주의는 군산복합체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결합에 기초해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동맹국들을 압도하지만 경제적 지배력 측면에서는 한계를 노정하는 상태이다.

셋째, 미국은 '종이 금'을 만들어내는 특권에 기초해 재무성증권 본위제라는 전무후무한 국제통화체제를 확립했다. 그와 같은 금융제국주의 체제 하에서 미국은 예외적이고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세계경제를 대상으로 경제적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 체제는 미국의 금융적 지대 향유 계층

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되며, 자국 내 제조업 공동화를 배경으로 해외 산업자본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허드슨, 2023: 299-328).

넷째, 오늘날 미국 제국주의는 군사적 지배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신냉전 기도에도 불구하고 약화된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제국주의 체제는 바야흐로 전환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프라샤드, 2022). 미국의 패권이 점점 더 폭압적 수단에 의존하면서 신식민지 나라들에서는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신식민지 시민은 노동자계급이건 소생산자계급이건 격변기 쇠락하는 제국주의의 경제 침탈에 일차적인 희생양이 되기 쉽다. 더욱이 동북아시아는 국제정치적으로 대립이 첨예한 최전방이다. 정세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대중조직과의 연대연합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 노동자계급의 선진적인 전위 부대와 폭넓게 조직된 인민대중의 결집이야말로 기존 제국주의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주체 역량이 된다.

[보론]

이 장의 보론에서는 마이클 허드슨의 금융제국주의론 외에 대표적인 관련 연구로서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제국론, 그리고 데이비드 하비의 신제국주의론에 대해 간략한 개요 수준에서나마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1.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론

구 식민지 체제의 붕괴, 현실 사회주의권의 몰락, 그리고 그 후 밀어닥친 세계화를 배경으로 자본주의의 세계적 지배구조는 큰 변화를 겪었다. 네그리·하트 (2001)에 따르면 국민국가의 틀에 갇혀 있던 제국주의는 이제 국민국가의 틀에서 벗어난 '제국'으로 대체되었다. 네그리와 하트는 제국은 영토적인 권력 중심을 만들지 않으며 지구 전체가 하나의 제국이고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전 지구적 착취 체제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초국적 자본이 전 지구를 장악했다는 의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네그리와 하트의 관점은 더 이상 제국은 국민국가의 팽창을 통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과거 로마처럼 제국은 지구 전체를 네트워크로 조직하고 있으며 모든 곳에 존재하면서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비로운 설명이었다.

고전 제국주의론의 시각에서 세계화는 미국 제국주의의 지배가 확장되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네그리와 하트는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심지어 미국을 제국의 중심으로 보지도 않는다. 제국에는 어떤 중심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그들한테는 미국 제국주의란 없다. 그들한테는 민족이나 민족국가도 진보정치에서 버려져야 하는 개념에 불과하다. 그들은 주권국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인식(제르바우도, 2022)을 해로운 것으로 비난한다. 제국의 시대에 국가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네그리와 하트의 초현실적 인식은 지적 유희일 뿐이다. 제국주의의 역사 일체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국가 개념을 해체하고 미국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눈앞의 현실마저 부정하는 점에서 그들의 제국론은 실천적으로는 오히려 반동적이다. 그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을 거론하며 구름 위에서 탈자본주의와 탈근대를 논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폄하할 때, 구름 밑 차가운 바닥에서는 오늘도 제3세계 노동자들이 소외된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내몰리며 제국주의의 착취에 희생물로 내던져지고 있다. 저자들은 '다중'이라는 정체 모를 변혁 주체가 끝없이 이주하고 출몰하면서 제국에 대항해 새로운 공간을 구성할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그것은 익명의 네티즌들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계급분석이 불가능한 유령일 뿐이다.

2. 하비의 신제국주의론

하비 (2016)에 따르면 제국주의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이며 이 중 경제적 요소는 자본주의적 권력을 뜻하고 정치적 요소는 영토적 권력을 뜻한다. 하비는 그 두 요소 사이에 모순이 내재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힘이 성장해온 역사를 고찰했다. 이와

같이 자본축적의 동학과 영토적 경쟁을 종합적으로 사고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하비의 논의에서는 '탈취(dispossession)에 의한 축적' 개념이 중요하다. 그것은 민영화, 규제 완화, 복지 축소, 금융사기 등을 일컫는데, 하비는 신자유주의가 축적의 위기에 대해 탈취에 의한 축적으로 대응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마치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통해 축적 위기를 해소하듯이, 자본주의가 자신의 외부에 있는 비자본주의 부문 및 자신의 내부에서 자본 관계에 포섭되지 않은 부문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과잉축적을 해소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탈취에 의한 축적은 가치를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착취의 결과로 생산된 가치를 재분배하는 과정일 뿐이다. 문제의 근원은 탈취가 아닌 노동 착취에 따른 축적 자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비가 탈취에 의한 축적을 강조한 것은 반자본주의 관점을 불분명하게 하는 효과마저 있다고 하겠다.

한편 하비는 뉴딜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가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미국 민주당의 제국주의에 대한 지지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더 나쁜 제국주의인가 아니면 덜 나쁜 제국주의인가가 아니다. 그와 같은 하비 논의의 약점은 그가 저항 운동의 주체로서 노동계급 중심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게 되는 한계로 이어졌다.

3장

KCTU

미중 갈등과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

Ⅰ. 머리말

에릭 홉스봄(Eric Hobsbaum)은 1991년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생각했다. 그 해에, 러시아 혁명에서 시작하여 소련의 해체로 마무리를 짓는 역사의 한 시기가 막을 내렸다. 홉스봄은 그 시기를 '단기 20세기'라고 이름 붙였다. 1991년은 한 시기가 끝나는 종착점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기가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그 무렵부터 중국(스스로 시장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하는)이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에 참여했는데, 이를 계기로 세계경제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계시장은 이전 시기에 비해 폭이 훨씬 넓어졌고 깊이도 더욱 깊어졌다. 중국의 본격적인 세계시장 참여는 세계경제의 진정한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글로벌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대규모 시장, 과잉자본, 선진 기술을 중국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결합시킴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영 체제를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낮아지고 있던 미국 거대 기업들의 이윤율 추세에 어느 정도의 반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시기부터 세계시장으로 공급하는 중국의 상품 공급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기업들 사이에서 가격 경쟁이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를 근거로 미국의 연준을 비롯한 주요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자산 계층에 유리한 금융정책을 펼 수 있었다. 그 결과

금융자산의 급속한 팽창으로 표현되는 금융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물론 거기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본 분파는 금융자본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소비자들도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은 상품을 사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소비자들은 자국의 달러가 갖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저축을 최저 수준 줄이면서 소비를 최대 수준으로 높일 수 있었다.

미국이 이끄는 세계질서에 참여한 중국은 국가 주도로 미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자본, 기술, 지식을 숙련도 높은 저임금 노동력과 결합시켜 '세계의 공장' 자리를 확실하게 굳혔다. 특히 2001년의 WTO 가입은 중국의 수출주도 성장 체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중국은 세계시장 편입 이후 과거 일본이나 동아시아에 버금가는 경제 성장세를 지속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급속한 증가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수치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2001년에 미국 경제 규모의 1/8에 지나지 않았다(World Bank, 2021). 2010년에 이르면 중국은 GDP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제2위의 국가가 된다. 현재 중국의 명목 GDP는 미국의 70% 수준에 이르러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중국 경제가 라틴아메리카 경제와 달리 종속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발전을 이룩한 사실이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시장 원리를 맹목적으로 신봉하지만은 않았다. 중국은 경제정책을 펼 때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했고, 더욱이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정책을 활용했는데, 그러한 사실이 중국을 라틴 아메리카와는 다른 길로 가도록 이끌었다(McNally, 2020).

미국과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거기에서 얻는 이익도 컸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미국의 경상수지를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떠받치는 구조가 비록 불안정했지만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비쳤다. 차이메리카[39]라는 용어는 그 불안정성이

당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표현한다. 2008년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도 양국 관계에는 큰 흔들림이 나타나지 않은 듯했다. 2009년 7월에는 두 나라 사이에 '제1차 미중 전략 경제대화'가 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대화의 환영사에서 "미국과 중국이 21세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를 담은 전략적 차원의 노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김흥규 2009).

그러나 미중 관계는 처음부터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으로 표현되는 두 나라 사이 거시경제 관계 안정성이 문제였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품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국민화폐인 달러로 대금을 지급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지속으로 달러 발행량이 늘어날 경우 그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가 문제였는데, 이는 국제적인 논쟁거리였다. 미중 관계가 기본적으로 브레턴우즈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논자들이 있었고(브레턴우즈 체제 II[40]) 거꾸로 달러의 가치가 어느 순간에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논자들도 있었다. 이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발전 속도가 불균등하다는 사실에서 나

39) 차이메리카는 차이나와 아메리카의 합성어로 니얼 퍼거슨, 모리츠 슐라릭(Niall Ferguson&Moritz Schularick)의 2007년 논문에서 사용되었다(Niall Ferguson&Moritz Schularick 2007). 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에 벌써 차이메리카의 위기를 얘기한다.

40) 브레턴우즈 체제 II 개념은 2000년대 중반에 도이체방크의 이코노미스들이 만들었다(Dooley, Folkerts-Landau and Garber 2004). 이들은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이 적자를 내고 독일과 일본이 이를 떠받치는 중심부-주변부 구조가 브레턴우즈 체제 II에서도 반복된다고 본다. 다만 흑자를 내는 주요한 주변부 국가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로 변했을 뿐이라고 이들은 설명한다.

왔다. 중국으로서는 세계시장 참여가 자국의 생산력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였다. 중국은 세계시장 참여를 통해 자국 노동력의 숙련도(노동 생산성)를 높일 수 있었고 기술력 면에서도 많은 부문에서 미국의 수준을 따라잡을 정도에 이를 수 있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마저 중국은 기술력 면에서 미국과 격차를 좁혀나갔다. 이런 면에서 미중 관계는 처음부터 생산력 격차의 축소와 그에 따른 불균등 발전의 모순을 내포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발전 속도의 불균등으로 세계시장에서 위계가 바뀌면 미국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중국의 생산력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미 오바마 정권의 후기인 2015년에 이르면 그러한 움직임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러한 움직임은 행동으로 구체화한다. 미국은 과잉 달러와 저임금 노동력을 결합하는 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중국과 기술력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첨단 기술산업을 떨쳐내는 전략을 펴기 시작했다.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관여(Engagement)에서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으로 이행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미중 디커플링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를 비롯한 몇몇 첨단 기술산업 부문에서 중국 기업들을 밀어내고 미국 기업주도의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들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여기에는 국무부를 비롯한 무역통상대표부, 재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 여러 관련 부처가 동원되어 역할 분담을 했다. 무역통상대표부는 기술이전, 지적재산, 혁신 분야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보고서로 만들어 관세 인상의 근거를 마련했고,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상무

부는 합동으로 수출, 투자, 기술유출을 규제했다. 법부무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를 적극적으로 적발하면서 한편으로는 부정 기술이전 대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 기업들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들이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는 자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들고 나왔다. 그런데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런 종류의 산업정책을 줄곧 폐기할 것을 주장해왔다.

미국의 전략 변화는 세계경제 질서에 큰 변화와 균열을 가져올 것이다.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 이후 글로벌 생산의 분업 방식으로 굳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도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걸린 첨단산업 분야에서 교역 관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이어진다면 여태껏 이어져 온 세계적인 저물가 상황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미중 관계의 발전 속에서 금융의 성장을 불러왔던 조건에서도 변화가 생김에 따라 금융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중국경제의 급속한 상승과 미국경제의 상대적인 지위 저하에 따른 미국 패권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상호 의존적인 미중 관계가 갑자기 위기에 빠져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미중 관계의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두 나라 사이의 패권 경쟁으로 나타난다. 국제정치학의 패권 전이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 바탕을 둔 투키디데스 함정론, 신냉전론, 그리고 현실주의 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41] 등은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를 패권 경쟁으로 이끄는 좀 더 본질적인 힘은 자본들 사이의 경쟁, 대자본과 중소자본의 관계, 이윤율로 표현되는

41) 현재의 미국 대외 정책을 가장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은 중국 봉쇄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John J. Mearsheimer 2014).

자본과 노동 관계, 그리고 두 나라 사이의 상대적인 생산력 수준 등에서 나온다. 국내의 여러 이해관계는 국민국가 수준에서 총괄되어 대외 경제 정책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한 나라의 대외 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중 관계의 긴장이 높아진 데에는 무엇보다 노동 생산성의 상대적인 격차 변동이라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시장에서는 노동 생산성이 위계를 이루고 있는데, 만약 생산성이 불균등하게 발전한다면 그 위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중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생산성 면에서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는 가치사슬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중국의 특정 산업의 경우 이미 상위 단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가 미중 갈등을 키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시장의 불균등 발전과 그에 따른 위계 변화의 정치적인 표현이 미중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분배 관계의 악화 때문에 생긴 계급 갈등은 이를 대외 정책을 통해 '수출'해야 할 필요성을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상황이 대외 긴장을 높이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미중 관계의 발전으로 미국의 기업들은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그렇지만 그 이득의 대부분은 다국적기업의 주주, 금융업자 등 상위 계층에게 돌아갔다. 노동자들은 미중 관계에서 생기는 이득을 전혀 분배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계급 사이 분배 갈등이 증폭했는데, 그 갈등은 정치적으로 '수출'되어야 했다. 국내 문제를 수출할 필요성은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드러났다[42].

미중 대립의 이면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42) 중국의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미중 갈등의 원인으로 미국 내 갈등을 외부로 수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Li Wei 2019).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된다. 미중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미국은 1970년대에, 약해진 달러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금융세계화를 추진했는데(에릭 헬라이너 1994), 그리하여 금융 부문이 크게 성장했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중국의 저임금, 고숙련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고 중국도 생산자본 중심의 발전전략을 선택하면서 중국에서는 제조기업들이 성장했다. 이를 반영하여 미국에서는 금융의 성장과 탈제조업 현상이 나타났고 중국에서는 세계의 제조업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노동자들의 잉여가치를 짜내는 데서는 이해를 같이 하지만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한편으로는 협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 대체로 잉여가치율이 높아서 분배해야 할 몫이 풍부할 때는 협력관계가 우세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립 관계가 두드러진다. 현재의 국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미중의 정치적인 대립의 이면에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대립이라는 본질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Michael Hudson 2023). 미중 대립의 본질을 국가 주도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 대립의 이면에도 사실은 금융과 산업의 대립이 가로놓여 있다.

미중 관계가 불러올 세계경제의 변화는 당연히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포함된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미중 관계가 변화하면서 '중국 효과'의 크기가 줄어들 것이다. 우리 경제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삶의 조건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에 대응한 대

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중 관계의 본질적인 측면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미국 중심의 주류 시각과는 달리 미중 갈등을 이윤율로 표현되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본들 사이의 경쟁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연구내용은 1절 머리말, 2절 미중 경제관계의 발전, 3절 미중 갈등과 그 영향, 4절 미중 관계 이데올로기들과 소결로 구성된다.

Ⅱ. 미중 경제관계의 발전

1.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 배경

애널리스트로서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지낸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예일대 교수는 1990년대 이후 미중 관계의 발전이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글로벌 다국적기업(특히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주체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외국의 자본, 기술, 지식을 필요로 했던 중국 쪽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 바 있다(Stephen Roach 2014).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하여 미국에 기대고 미국이 성장의 주요한 원천을 중국에서 찾는 상황을 상호의존(Co-Dependence)이라 정의했다. 사실 그 이전에 퍼거슨&슐라릭(Fergson&Schularick 2007)은 미중 관계를 공생(symbiosis)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차이메리카(Chimerica)라 일컬은 바 있다. 틀림없이 미중 관계의 발전에는 세계시장의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려 했던 중국의 의도도 작용했을 터이지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질서에 중국이 참여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미국 기업의 이해가 우선했다고 봐야 한다.

〈미국 기업들의 이윤율 하락〉

기업의 목표는 이윤율을 높이는 데에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이해란 다름 아닌 이윤율을 높이는 것에서 생겨난다. 기업 이윤율의 동향은 국가

경제정책의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세 번의 세계화 물결이 있었음을 확인한다(Michael Roberts 2023). 그는 무역과 자본이 빠르게 팽창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세계화를 정의하는데, 1850년~1880년, 1944~1970년, 1980년대 중반~20세기 말이 그러한 시기라고 본다. 이 세계화 시기는 다시 무역과 자본의 흐름에 장벽을 쌓는 쇠퇴기로 이어진다.

마이클 로버츠에 따르면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힘은 자본 수익성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대체로 세계화 물결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요 경제에서 이윤율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윤율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자본주의 경제는 무역과 자본수출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이윤을 얻으려는 시도를 한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대외 교역의 확대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이윤율의 하락 경향을 상쇄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적 이윤율이 낮아진 나라의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덜 발전하고 값싼 노동력을 가졌지만 이윤율이 높은 나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980년 중반부터 시작한 세계화의 물결은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를 거치면서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주요 경제권의 장기적인 자본 수익성 하락에 대응한다. 미국의 이윤율 추이만을 보면,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 패권의 '황금기'에는 일반 이윤율이 19.3%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 일반 이윤율이 15.4%로 떨어진다. 그러다가 신자유주의가 전개된 1990년대에는 일반 이윤율이 16.2%로 회복된다. 2000년 이후에는 일반 이윤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난 20년 동안 일반 이윤율은 역사적 최저치인 14.3%에 다다른다(Sergio Cámara Izquierdo 2023).

[표3-1] 미국 기업의 이윤, 축적, 생산성(1950-2021) (단위: %)

	1950~1972	1972~1993	1993~2000	2000~2010	2010~2021
일반이윤율	19.3	15.4	16.2	14.2	14.3
이윤몫	29.8	26.5	26.6	27.0	29.7
세후이윤율	7.4	6.9	7.4	6.5	7.5
축적률	3.7	3.2	3.7	2.4	2.1
자본생산성	0.66	0.58	0.61	0.53	0.48

자료: Sergio Cámara Izquierdo(2023)에서 정리.

장기적인 이윤율 하락 추세 속에서 미국의 기업들은 이윤율 하락 경향을 상쇄하기 위해 자본수출과 대외 교역의 확대를 꾀했다. 1970년대에 미국 기업들은 상품자본의 실현위기와 그 결과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었다(쉬잔느 드 브뤼노프 1992). 또한 세계시장에 형성된 과잉 화폐자본을 수익성 있는 자본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미국 기업들을 압박했다. 수익성이 떨어진 미국 기업들은 수익성 회복 전략 차원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했던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처음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아 나섰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나타난 이른바 '이상 엔고 현상' 때문에 일본 기업들도 동아시아에 대한 투자와 교역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신흥국 경제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시장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선진국(특히 미국) 기업에게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을 가진 자본투자 호조건의 국가였다.

이처럼 미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근본 조건은 미국 자본의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점, 따라서 외부에서 수익성 개선의 길을 찾아야 했는

데, 중국은 그 가장 훌륭한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사실, 미국의 안보주의자들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시킴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미국 기업들 이익의 크기는 안보주의자들의 우려를 압도했다. 결국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돈으로 중국에 직접투자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요구가 미국의 대중 정책을 규정했다. 홍호펑은 『제국의 충돌』에서 1990년대 초반, 중국을 세계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미국 대기업들의 로비 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펼쳐졌는가를 잘 보여준다(홍호펑 2022)

〈항상적인 세계시장 과잉 달러의 존재〉

다음으로, 1970년대 초반의 금-달러 교환 정지와 주요 나라들의 변동환율제 이행 이후 세계시장의 달러 유통량이 항상적인 과잉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도 미국이 중국을 세계시장으로 끌어들인 중요한 요인이었다. 달러의 가치가 금으로 보장되지 않는 달러 체제에서는 달러 유동성이 항상적으로 과잉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 나라 안에서 화폐 발행량이 과대하여 그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그 나라는 불리한 국제수지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때문에 외환 준비금이 감소하면 그 나라 화폐의 대외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금융의 긴축정책으로 국제수지의 전환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만큼은 예외였는데, 국민 화폐인 달러가 국제 화폐로 사용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미국의 예외적인 지위는 미국으로 하여금 불리한 국제수지를 긴축이 아니라 달러 발행량의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사실 금-달러 교환 정지 이전부터 과잉 달러가 대규모로 존재했다. 달러의 과잉 상태는 미국의 달러 패권 행사를 반영한다. 굴리엘모 카르체

디(Guglielmo Carchedi) 외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제국주의는 국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수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Guglielmo Carchedi&Michael Roberts 2019).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날 경제적 제국주의가 가치를 수탈하는 네 가지 방식을 구분한다. 첫째, 직간접적인 외국 투자를 통해서 기업들이 얻는 이익과 그 이익의 본국 송금, 둘째, 외채에 대한 이자 지급, 셋째, 국제무역에 깃든 불평등한 교환, 넷째, 패권국의 화폐를 국제화폐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점인 시뇨리지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수탈해 왔는데, 네 번째 방식을 통할 때 달러의 과잉 발행 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은 달러 헤게모니를 수립하는 바탕을 이룬다(Ramaa Vasudevan 2009). 다음의 지표들은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52년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은 선진국 생산의 거의 60%, 기업 자본 스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950년 기준의 인구 1인당 총생산의 경우 미국을 100으로 잡을 때 영국은 55, 독일은 37, 그리고 이탈리아는 25였다. 석탄 산업에서 미국의 생산성은 프랑스의 두 배, 영국과 독일의 4~5배였다. 제조업에서 미국의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은 영국의 두 배, 독일의 두 배 이상이었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 격차가 더욱 컸다. 1957년에 세계 50대 기업 가운데 48개가 미국 국적의 기업이었다(필립 암스트롱 외 1993).

이러한 경제력의 격차 속에서 전후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외환 부족을 겪고 있었다. 전쟁으로 생산력이 심하게 파괴된 탓에 서유럽, 일본과 같은 공업국은 전후에 필수물자 구입을 위한 대외 구매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세계 재생산 구조가 파괴된 상황에서 전쟁 참가국들의 외환(달러) 부족은 거의 필연이었다. 전후 세계의 상황은, 과잉 생산 능

력을 가진 미국과 거대한 잠재적 수요를 안고 있었지만 구매력 부족에 빠져 있는 나머지 국가로 나뉘어 있었다. 미국은 달러(신용)를 제공하여 잠재적 수요를 유효 수요로 전환하는 길을 선택했다. 미국이 달러를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일대일 협상을 통해 달러를 빌려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었다. 미국은 일대일 협상을 통해 달러를 빌려주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를 통해 세계적인 달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세계가 달러를 강력하게 필요로 상황은 미국을 특권적인 지위로 올려 놓았다.

미국이 세계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법은 국제수지 적자를 통해서가 아니었다. 미국이 1950에서 1967년 사이에 상품 무역에서 7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이자와 배당금으로 6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에 300억 달러의 준비금이 쌓였는데, 이는 미국의 차관, 원조, 군사지출이 국제수지 흑자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은 달러 발행을 늘려서 외국의 기업체를 샀고(450억 달러), 외국 정부에게 차관이나 원조를 제공했으며(500억 달러), 또는 외국에서 군비 지출을 조달(440억 달러)했던 것이다(필립 암스트롱 외 1993). 발행된 달러 가운데 일부는 유통을 거듭하다 유럽에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축적된 달러가 유로 달러 시장으로 발전했다. 이는 과잉 달러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1971년 금-달러 교환 중지 선언으로 이제 달러는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화폐로 변하면서 과잉 달러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달러 발행에 대한 족쇄가 풀리면서 달러 발행에 대한 미국의 재량이 오히려 더 커졌기 때문이다. 금-달러의 교환 중지 선언 직후에는 달러의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그러한 전망은 기

우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달러가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의 경제국이라는 사실에 더해서 달러가 국제 화폐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적인 수단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발행된 달러가 계속 유통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었다.

첫째, 유로달러 시장은 미국 바깥의 달러 유통 확대에 기여했다. 미국은 유로 시장이 모습을 드러내던 초기에 한때 유로달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후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폈다(에릭 헬라이너 1994). 이 유로달러 시장이 달러 유통을 세계시장으로 확대하는 기능을 하면서 달러 지배체제 유지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유로달러 시장은 주로 미국의 초국적 은행들을 경유해서 석유 수출국의 잉여 자금을 개발도상국, 특히 라틴 아메리카로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했다.

둘째, 모든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 상품인 석유 거래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달러 지급수단과 거래 준비금에 대한 수요를 늘렸다. 미국은 금-달러 교환 중지 선언을 할 무렵 아랍국가들을 설득하여 석유 대금을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하는 약속을 받아냈다. 대신 미국은 석유수출국기구의 석유 가격 인상을 눈감아 주었다. 당시 석유가격의 상승은 달러 가치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왜냐하면 석유 가격이 네 배가량 상승하면서 석유 대금 결제를 위한 그만큼의 지급수단, 곧 달러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셋째, 금융자산(부동산을 포함하여) 거래와 같은 가공자본 거래의 필요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달러는 국제 교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거래를 위한 유통수단, 지급수단, 축장수단 기능을 한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그것이 갖는 가공적인 성격 때문에 실물 자본의 축적 규모를

훨씬 넘어서 성장할 수 있다. 실제로 1980년에는 세계 총생산(GDP) 규모와 금융자산 규모가 엇비슷했는데, 2000년 무렵에는 금융자산 규모가 세계 총생산보다 네 배가량 큰 규모를 나타낸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성장은 이 금융자산의 거래를 위한 달러 수요를 만들어낸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한중, 한일, 한중일 사이 통화스왑과 달러화를 통하지 않고서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방안이 달러의 유통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미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넷째, 셋째와 관련된 것으로서 미국은 가공자본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상대국의 자본, 금융, 외환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세계은행이나 IMF를 동원하기도 했다. 자본, 금융, 외환시장을 개방한 신흥개도국들은 무역흑자를 올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외환위기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방을 확대한 국가들은 수출주도 경제정책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또한 거기에서 얻은 달러를 위기에 대비해서 보유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 바깥의 여러 나라들이 달러 축적을 확대하는 것은 지구적 차원의 달러 수요를 키움으로써 달러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달러 지배체제의 위기를 이연시키는데 기여한다.

다섯째, 미국이 가진 이러한 정책 능력 외에도 세계경제 성장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달러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교역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 교역을 위한 준비금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것, 교역과 관련된 여러 금융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국제 화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당장은 달러를 대체할만한 국제 화폐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세계경제 성장에 따른 국제 화폐 수요의 큰 부분은 달러 몫이다. 여기에 미국은 달러 유통을 확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달러 유통 범위에 포함시키려 했

다. 1980년대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리고 1990년대에는 중국이나 동유럽 국가들이 그 대상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달러 패권 행사와 관련하여 경향적으로 과잉 발행된 달러는 세계시장 곳곳에 축적된다. 문제는 이러한 달러와 달러로 표시된 자산이 가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달러 자산은 팽창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본으로서 투자되어야 하고 이윤을 생산해야 한다. 과잉의 달러가 생산적으로 투자되지 못하면 점진적으로 가치를 잃거나(인플레이션) 아니면 금융위기의 형태로 드러난다. 따라서 과잉의 달러는 항상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여기저기를 누벼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에 들어서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면서 과잉 달러 문제는 더 커졌고 그 결과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자본의 요구도 그만큼 강해졌다. 말하자면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과잉 달러의 요구에 들어맞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2. 미중 경제관계의 특징

미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늘어나고 중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중국이 무역수지 흑자액을 미국 자산에 투자하면서 미중 경제관계는 상호 의존적인 발전의 길로 접어든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는 미중 경제 관계의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미중 경제관계가 발전을 거듭해 가는 가운데 미중 경제관계는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먼저 산업구조 면에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산업구조 면의 특징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자본이

새로운 이윤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과정을 여러 개로 나누고 그 나뉜 서로 다른 과정을 국제 노동분업 원리에 따라 서로 다른 나라에 배치함으로써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산업조직을 말한다(Deborah Winkler& William Milberg 2013). 이것을 가능하게 한 조건은 신자유주의 시기 자본, 상품, 화폐의 흐름에 대한 규제완화와 교통, 정보통신의 발전이다. 이 특수한 형태의 산업조직은 공급자 시장을 확립한 거대 기업들이 구매에서도 과점력을 확보했을 때에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글로벌 가치사슬은 자유무역, 자본유동성, 주요 대기업의 강력한 힘을 전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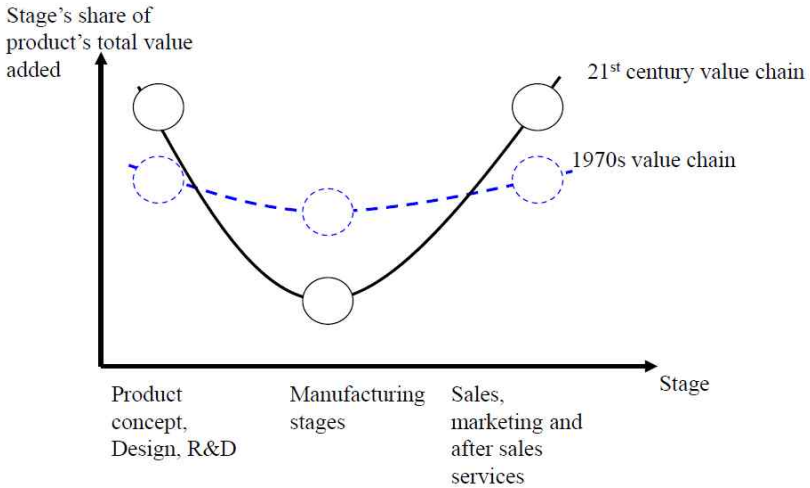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기업과 기업의 의존관계이지만, 산업과 금융의 관계, 자본과 노동의 관계, 시장 구조,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글로벌 가치 분석이 주는 함의의 하나는 각 나라의 경제발전 전략의 선택에 대한 것이다. 나라들은 글로벌 가치분석을 통해 새로운 생산구조를 채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에 들어가 산업화를 이룩한 다음,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지위 향상은 어렵고 따라서 흔치도 않다. 더욱이 산업적인 지위 향상이 고용과 임금 상승과 같은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은 선진국의 영향력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사회적 결과들에 주는 영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ibid.).

일반적인 기업의 업무 흐름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먼저 생산물의 연구와 디자인에서 시작하여 원료와 부품조달을 거친 다음, 조립 공정으로 이어지고, 마케팅과 브랜드 관리로 넘어간다. 글로벌 가치사슬에는 서로 다른 생산력, 산업구조, 제도 배열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기능에 배치된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선진국의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은 국내에서 마케팅, 금융, 연구·개발(R&D), 디자인과 관련된 핵심 역량에 집

중하기 위해 나머지 기능들은 개발도상국으로 아웃소싱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제조업체로 시작한 많은 회사는 대부분의 생산을 개발도상국의 공급업체 네트워크로 이전했으며 이제는 이른바 '핵심' 활동에 기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정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형성되면서 생산의 세계화가 진전되었다. 개발도상국들도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장됨에 따라 거기에 편승해서 산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산업의 업그레드는 경제발전 전략과 거의 동의어가 되었다.

길게 이어진 가치사슬에서 여러 기업이 함께 생산한 부가가치는 참여기업들에게 분배되는데, 그 분배 몫은 가치사슬상의 기업의 위치, 기업들의 경쟁력과 협상력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뒤랑과 밀버그(Cédric Durand&Wiliiam Milberg)는 스마일곡선(Smile Curve)을 활용하여 가치가 분배되는 양식을 설명한다.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 사이에서 가치가 분배될 때, 부가가치 분배 몫이 큰 곳은 공정의 앞쪽과 뒤쪽이고 작은 곳은 중간 부분이다. 공정의 앞쪽에는 제품 개념, 연구개발, 디자인 공정이, 그리고 뒤쪽에는 마케팅, 사업서비스 등이 놓여 있다.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배받는 이 공정은 지식집약적 성격을 갖는데, 중심부 국가들이 '핵심' 역량으로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다. 공정의 중간 단계에는 단순 가공과 조립 부분이 놓여 있다. 이 공정은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가지며 중심부의 기업들이 주변부, 반주변부 국가들로 아웃소싱을 하는 부분이다(Cédric Durand&Wiliiam Milberg 2019). [그림3-1]에서 보듯, 고부가가치 공정과 저부가가치 공정의 상대적인 분배 몫의 크기는 1970년대에 비해 2000대 들어서 훨씬 커졌다.

[그림3-1] 글로벌 가치사슬의 스마일 곡선



자료: Cédric Durand&Wiliiam Milberg 2019)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은 실제로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들은 가치사슬에서 독점적인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활동을 분할하고, 공급업체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고, 경제적 위험은 공급업체에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이익을 증가시킨다(ibid.).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발달한 관리기법들이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전체적인 비용이 줄고 이는 이익의 증가로 이어진다[43]. 이렇게 증가한 이익이 기업들에게 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이 저숙련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노동자들에게까지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에 따라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급여와 고용 측면에서 노동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44].

43) 냉철한 추산에 따르면 외국 아웃소싱으로 인한 비용 절감액이 원래 비용의 40~60%에 이른다(Deborah Winkler&William Milberg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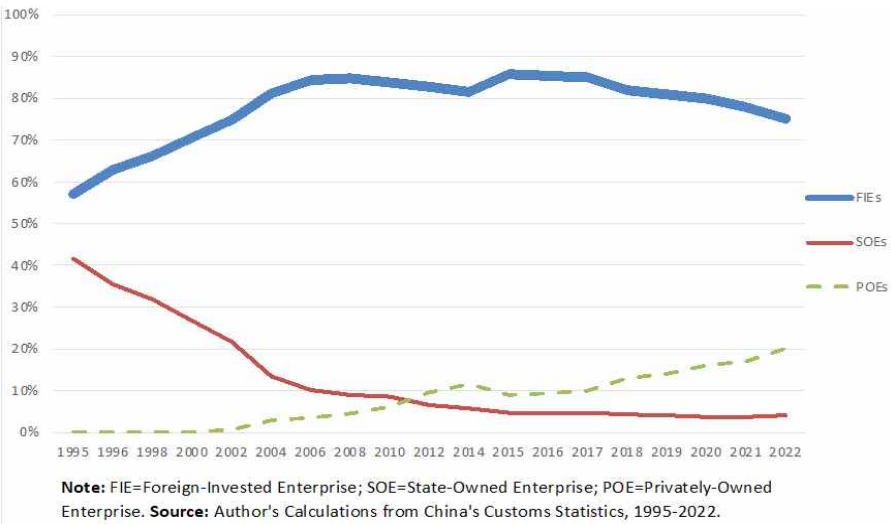
44) 밀버그&윙클러는 외국 아웃소싱 강도가 10% 증가하면 생산 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감소한다고 추산한다(Milberg&Winkler).

여러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글로벌 가치사슬에 들어감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루는 전략을 선택했다. 미중 경제관계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지식을 중국의 값싼 잉여 노동력과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했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계를 보여주는 스마일 곡선상에서 부가가치 분배 몫이 큰 부분은 주로 미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거꾸로 부가가치 분배 몫이 낮은 단순 제조와 조립 공정은 중국에 소재한 기업들에 배치되어 있다. 이처럼 글로벌 가치사슬은 시장 권력의 내재적 비대칭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중국이 저부가가치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중 경제관계의 발전에서 특징적인 면으로 드러난다. 물론 미중 경제 관계에서 이러한 가치사슬의 연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적 노동 생산성의 수준, 과학기술 발전 수준 등의 상대적 격차의 변화는 가치사슬의 위계에서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 위계의 변화는 미중 관계 긴장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구본우 2020). 실제로 미중 경제관계의 발전 속에서 중국의 평균적인 노동 숙련도와 과학기술의 상대적인 수준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정책 등에 힘입어 크게 높아졌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연계가 보여주는 미중 경제 관계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특징으로 중국 수출의 주요한 형태가 수입 원자재의 가공형태를 갖는다는 점도 드러난다. 중국 수출의 많은 부분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제품이 차지한다. 그러한 방식의 수출을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들이 주로 차지한다. 그 때문에 중국의 상위 수출기업을 보면 대부분 외국기업들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의 수출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7개 기업은 외국 국적이었다. 션 켄지 스타스(Sean Kenji Starrs)가 1995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에 원자재 가공 방식의 수출 점유율을 계산한 결과는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이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작은 부분을 중국 민간기업과 국영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 중국 기업들 가운데서는 국영기업의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고 반면 민간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Sean Kenji Starrs 2023).

[그림3-2] 중국의 기업 형태별 수입 원자재 가공 수출(1995~2022)



자료: Sean Kenji Starrs(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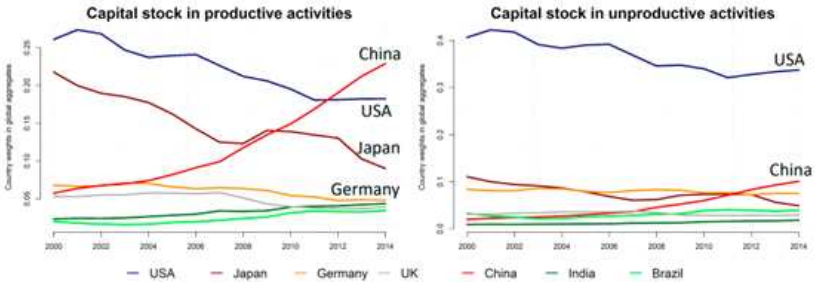
이것은 중국의 수출로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묻게 한다. 산업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중국에 배분되는 이익의 비율은 매우 낮다. 포브스 글로벌과 세계무역기구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의 제조업 수출 3대 분야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 통신 장비의 경우 세계수출 금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이지만 중국이 배분받는 이익이 자지하는 비율은 5.5%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세계수출 금액에서 미국이 자지하는 비율은 6.3%에 지나지 않지만 미국이 배분받는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61%에 이른다. 의류와 직물의 경우에는 세계수출 금액에서 중국이 차지

하는 비율은 36%,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1%이지만 분배된 이익의 비율은 중국이 8.4%이고 미국은 22%이다. 화학과 제약의 경우에 세계 수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중국은 9.5%, 미국은 9.7%이지만 분배된 이익의 비율은 중국이 4.4%, 미국이 47%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수출을 외국인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공정 단계상으로는 가치 분배 몫이 작은 제조와 가공 공정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Sean Kenji Starrs 2023).

미중 경제관계의 발전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는 자연스런 결과인데, 미국의 과잉 달러와 기술을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결합시키는 형태로 미중 경제관계가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대외 투자에서 만들어낸 이윤을 생산에 다시 투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금융자본 논리의 관철을 강화한다. 거대 기업들은 이윤 가운데 많은 부분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생산이 사실상 이윤과 분리된다는 사실, 비금융 경제가 금융화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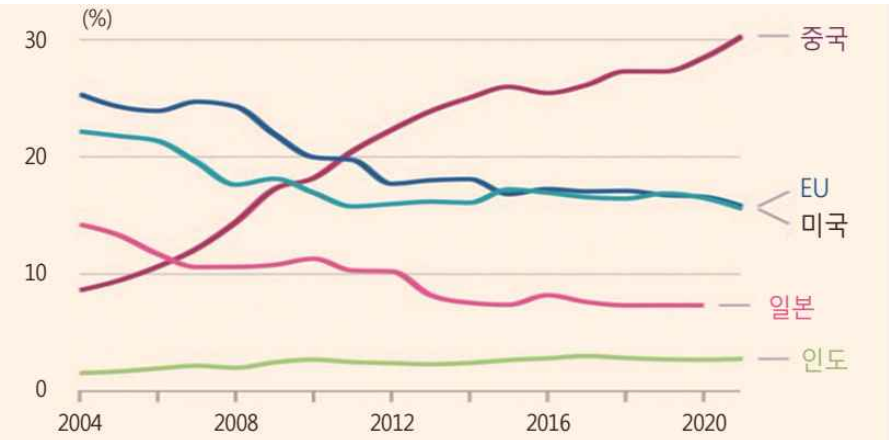
다음으로 생산적인 활동과 비생산적인 활동 측면에서 미중 경제관계의 특징을 살펴보자. 토마스 로타와 리쉬 쿠마르(Tomas Rotta&Rishi Kumar)는 WIOD(세계 입출력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43개국의 생산적 부문과 비생산적 부문에 대해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에 걸친 기간에 글로벌 수준의 생산적 활동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를 반영하여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생산적 활동은 비생산적 활동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그림3-3].

[그림3-3] 생산적 부문과 비생산적 부문의 수준 변화



자료: Tomas Rotta&Rishi Kumar(2023).

[그림3-4]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주요국의 비중



자료: World Bank, 강두용(2023)에서 가져옴.

국가별로 보면 2000년 이후 생산적인 활동과 관련된 자본량 면에서 중국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은 급속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세계의 부가가치 생산과 생산적인 자본량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졌다[그림3-4]. 비생산적인 활동과 관련된 자본량 면에서는 미국은 약간 감소하고 중국은 약간 상승했지만 큰 변화는 아니었다.

여기에서 생산적인 활동이란 이윤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비생산적 활동이란 잉여가치를 이전받는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금융 활동처럼 생산 활동을 지원한 대가로 잉여가치 가운데 일부를 이전받는 활동은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분류된다. 토마스 로타와 리쉬 쿠마르 연구에 따르면 2014년에 이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자본을 보유한 국가였고 생산 활동 부가가치를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국가였다. 제조업만을 따로 떼 내서 부가가치의 주요국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인 이미 2012년부터 세계 1위로 올라서 있었다.

다음으로 미중 경제관계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속성 측면의 특징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관계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미국에 대해 종속적인 형태의 발전 과정을 거친 라틴 아메리카와는 달리 중국은 그러한 종속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발전 과정을 거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와는 다른 발전 과정을 보이는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역할과 관련된다.

중국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경제의 라틴아메리카화를 끊임없이 경계했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이 서방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급속한 개방을 한 결과 나타난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중국은 늘 참조했다. 그리하여 중국은 경제 개방 속도를 조심스럽게 조절했고 국유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남겨놓았다. 무엇보다 중국은 금융을 직접 통제하면서 이를 지렛대 삼아 기업 정책에 영향력을 끼쳤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종속하는 것을 피하도록 해주었다. 이러한 점이 경제관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다(McNally, 2020).

Ⅲ. 미중 갈등과 그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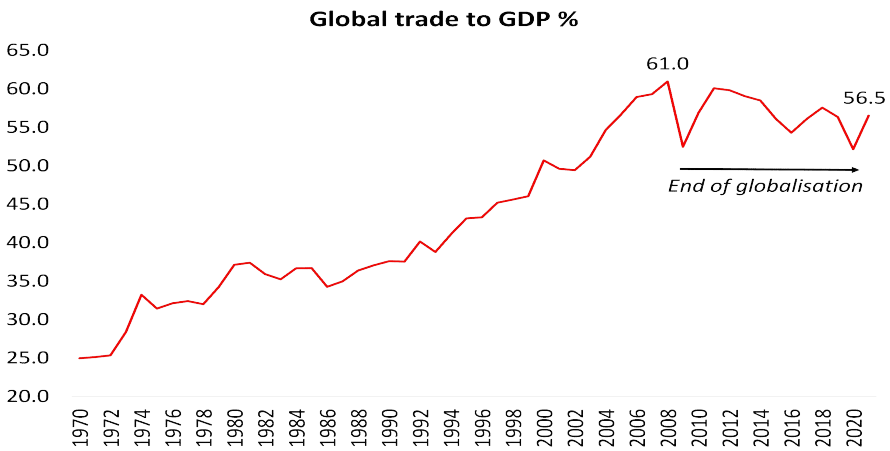
1. 미중 불균등 발전과 상호 의존성의 위기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는 세계화의 물결이 중국을 세계시장으로 끌어들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그는 그 세계화의 물결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이윤율이라고 덧붙인다. 세계경제가 낮은 이윤율로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그 출구를 세계화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의 경제관계가 위기를 맞게 된 원인도 기업 이윤율의 변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이윤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세계화가 후퇴한다. 그러다가 이윤율의 하락하는 국면이 길어지면 다시 세계화 흐름이 생겨난다. 세계화로 어느 정도 이윤율이 회복되지만 다시 이윤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세계화의 흐름은 세계화의 후퇴 흐름에 자리를 내준다. 마이클 로버츠에 따르면 세계화를 만들어내는 힘도, 세계화를 후퇴시키는 힘도 기업 이윤율의 하락에 있다.

마르크스가 얘기하듯이 이윤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자본은 형제애를 자랑하지만 이윤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차지해야 할 몫을 늘리기 위해 형제들끼리 서로 치열하게 다툰다. 실제로 주요 경제권의 자본 수익성은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하락하다가 1990년대 이후 한동안 향상된다. 2008년 이후 자본 수익성이 다시 떨어지면서 세계화의 물결은 역전되어 사그러들기 시작한다. 세계화를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GDP 대비 세계무역의 비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3-5]. 이처럼 기업 이윤율의 하락과 세계화의 후퇴는 미중 대립의 배경을 이룬다. 미중 대립의 좀 더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인 노동 생산성, 과학기술의 격차의 축소, 곧 경제력의 격차 축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3-5] GDP 대비 세계무역의 비율



자료: Michael Roberts(2023)

미국과 중국의 노동 생산성 격차의 축소의 정도는 과학기술 수준을 대리 지표로 활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체로 연구개발 투자액이나 연구자 수, SCI 논문 수 등을 통해 개략적인 비교를 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매우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의 목표는 '자주창신(自主創新)'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에도 중국은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국정 아젠다로 추진해 왔다.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외국 기술의 흡수와 생산과정 응용에 초점을 맞춘 발전 전략을 선택했다. 미국에서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중국은 정부주도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했고 기업들의 생산 기술부문의 혁신을 지원했다. 중국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실현할 거대한 시장을 가졌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다.

실제로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이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연구투자를 보면 198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연평균 42%가 성장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은 연평균 6.3% 성장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면서 연구개발비의 절대 규모 면에서도 중국은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의 4분의 3 수준에 이르렀다. 연구개발 인력도 급속히 증가했다. 2000년부터 2013년 사이 연구개발 인력의 평균 증가율이 미국은 1.3%였는데, 중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2.1%였다. 연구개발 인력 면에서 중국은 이미 2005년에 미국을 따라잡았다.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SCI를 보면 2003년부터 2013년 사이에 중국은 연평균 5.4% 성장했지만 미국은 1.5% 성장하는 데 그쳤다(배영자 2016).

이러한 연구개발 능력, 그와 연결된 노동 숙련도의 향상, 그리고 상대적인 저임금은 중국 기업들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높여주었다.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축적해 나갔다. GDP로 표현되는 경제의 전체적인 능력도 더욱 커졌다. 예컨대 2000년에만 해도 중국 GDP는 미국의 8분의 1수준이었던 것이 20년 사이에 크

게 성장하여 2020년에는 미국의 70%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대적인 경제 능력의 급격한 격차 축소는 미국의 대응을 불러오지 않을 수 없었다.

[표3-2] 미국, 중국, 일본의 GDP 추이(1980-2020) (단위 : 10억 달러)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미국	2,857	4,339	5,963	7,640	10,251	13,039	15,049	18,206	20,893
중국	303	310	370	731	1,206	2,290	6,034	11,114	14,867
일본	1,128	1,427	3,197	5,546	4,968	4,831	5,759	4,445	5,054

자료: IMF(2021),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 위기에 대한 미중의 대응

〈자본주의 국가의 무역 정책〉

세계시장은 국제 분업을 전제로 성립하며, 국제 무역은 그 국제 분업을 토대로 전개된다. 국제 무역이 진전하면 국민경제 내부의 분업도 더욱 촉진된다. 분업이 촉진되어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발전하면 자본의 운동은 더 큰 규모의 생산, 더 큰 규모의 시장을 요구한다. 끊임없는 시장의 확대에 대한 요구는 자본으로 하여금 다시 외국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도록 한다. 이 외국시장에서도 국민경제 내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 사이의 경쟁이 이뤄진다. 그러나 외국시장의 경쟁은 개별 자본들 사이의 경쟁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국민국가들의 평균적인 노동 숙련도는 나라마다 각기 다르고 평균적인 임금 수준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에다 기업들이 외국 시장에서 경쟁할 때는 화폐들의 상대적인 가치 문제, 곧, 환율이 개입한다.

세계시장에서는 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국민국가의 정책을 매개로 해서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로 구성된 세계시장에서는 국가의 대외정책, 특히 무역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의 대외정책은 일반적으로 자본의 논리를 반영하여 수립되고 집행되지만 현실에서는 국민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럼에도 대외정책의 본질이 자본주의 경제의 재생산 구조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자본의 요구와 이해는 국가정책이라는 형태로 수행되지만 그 자본의 이해와 요구라는 것이 단일하지 않다. 대기업의 이해와 중소기업의 이해가 다르고 수입을 주로 하는 기업과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의 이해가 다르며, 군수산업의 이해와 생필품 산업의 이해가 다르다. 여러 이해가 다르다는 사실은 대외정책 수립에서 국가가 자율성을 가질 공간을 남긴다.

대외정책을 이해하는 데에서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 발전 정도에 따라 그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대외정책은 한 국가의 자본주의 발전 정도에 따라 그 재생산구조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국민경제 내부에서 생산력이 급격하게 발달하여 자본이 과잉 상태에 이르거나 산업 부문들 사이의 발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외국시장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고 국가는 그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대외정책을 편다. 생산력 발전이 뒤진 국가에서는 낮은 노동 숙련도와 노동 강도를 낮은 임금으로 메울 수 없는 한 보호주의를 요청하기도 한다. 세계시장 전체의 흐름이 대외무역 정책을 규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가 구조적인 위기에 접어들면 보호무역주의와 블록화의 분위기가 지배한다. 이렇게 본다면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외 정책을 규정하는 요인은 국민경제 내부의 재생산 구조에서 나오는 요청과 세계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나오는 요청이 중첩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역정책에 한정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수단들을 살펴보자. 먼저 관세이다. 관세는 오늘날에도 무역정책의 수단으로서 널리 사용된다. 관세는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품의 국제적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무역정책으로서 효용이 있다. 관세 이외의 무역정책 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이 있다[45]. 비관세 장벽에는 직접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과 간접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있는데, 사실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통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수단을 사용한다(수입 금지). 어떤 이유에서 상대국을 제제할 때는 자국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수단을 자주 사용한다(수출 금지). 수입이나 수출을 할당하는 수단도 있는데, 이것은 특정 국가나 특정 상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성격이 강하다.

외환관리는 금융당국이 환율에 영향을 주기 위해 외환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수단이다. 환율은 수출입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품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좌우한다. 수출자율규제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수출자율규제는 사실상 미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며, 무역수지 불균형 교정과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국의 특정상품에 대해 수출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수입과징금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상품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관세와 성격이 사실상 같다. 여러 국가들은 세계시장 경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외국시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수출 장려 수단을 활용한다. 특정 산업, 특정 상품의 수

45)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비관세 장벽은 2000년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비관세 조치 건수가 2005년에는 최소 1,953건, 2010년에는 3,651건, 2015년에는 4,167건, 그리고 2019년에는 최소 5,244건을 나타냈다(WTO Annual Report 각 연도).

출에 대한 장려금 지급, 국내가격과 세계시장 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가격제, 무역금융 등은 이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그밖에 경제 통합이나 블록화도 넓은 의미의 무역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구체적인 대중 정책〉

미중 대립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트럼프 정권 이후의 구체적인 대중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전통적인 무역 정책 수단을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제한 수단을 사용했다. 미국은 1974년에 제정된 통상법에 따른 세이프가드를 활용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1962년의 통상확대법에 따른 안전보장조치를 근거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는데, WTO 산하 분쟁처리소위원회는 2022년 12월에, 미국이 부과한 이 관세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기초해서 추가 관세 대상 리스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때는 대중 추가 관세가 미국의 산업이나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제한을 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통상대표부나 상무성이 먼저 보고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수출과 투자를 관리하는 수단도 활용했다. 미국의 국방권한법(NDAA)에는 안전보장 관점에서 수출관리개혁법(ECRA)과 외국투자 리스크 심사 현대화법(FIRRMA)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미국이 과학기술과 제조 부문에서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수출관리개혁법(ECRA)에서는 현행 수출규제로는 관리할 수 없는 신규, 중요기술을 특정해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규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또한 미국은 자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외국투자 리스크 심사 현대화법(FIRRMA)에 기초해서 외국투자를 심사하는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 위원회는 2000년대에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의 중요 인프라 매수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엑손-플로리오 조항의 강화를 추진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도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수출과 투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이어갔다. 대외투자 규제에서는 기술 유출을 우려한 상하원 초당파 의원단이 "2022년 국가중요능력방위법(NCCDA)" 초안에 합의했다. 이미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수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들면서 중국의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1) 외국자본 규제에 의해 미국 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한다 2) 기술이전 계약에서 미국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 3) 중국기업을 통해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을 매수한다. 4) 중국 인민해방군 등은 미국기업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가와시마 신·모리 사토루 2021). 이러한 비판에 기초해서 미국은 추가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미국 산업계가 기존의 수출관리체제로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대중 추가 규제가 투자기회의 상실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 더 이상의 대외투자 규제에는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비해 한발 더 나아간 점은 무역정책과 함께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정책 노선을 들고나온 사실이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서플라이 체인 강화책을 발표했다(White House 2021). 이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에 교란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전략에 바탕을 둔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대책에서 미국 내의 온쇼어링, 기업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리

쇼어링, 북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에 생산 거점을 이동시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축소시키는 니어쇼어링, 동맹국에 서플라이 체인을 집중시키는 프랜들리 쇼어링,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라이트 쇼어링 등의 개념을 제시했다.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25%의 투자 감세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총 2,800억 달러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White House 2022b).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보급을 위한 세금 공제 대상 차량의 조건으로서 배테리에 포함된 주요 광물, 부품이 우려국(사실상 중국) 이외의 국가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대응〉 46)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중국 내의 다양한 사회세력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먼저 중국 내의 논쟁을 살펴보기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중국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매우 폭넓은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에는 국제관계학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관료, 기업인, 금융인(특히 애널리스트) 등도 참여했다. 논쟁은 단계를 거치면서 진화했는데, 처음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실제로 무역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이 있었다. 미중 관계가 급속히 나빠지고 무역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논쟁의 초점은 미국이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옮겨갔다. 이어서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른바 미중 디커플링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

46) 중국에서 벌어진 논의는 주로 Li Wei(2019)를 참고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미중 무역전쟁이 실제로 발생할 것인가를 두고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사이의 논쟁이 있었다. 낙관론자들은 미중 경제 관계의 상호의존성이 높고 거기에서 두 나라가 얻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이 쉽게 무역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사업 기회가 많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도 큰데 미국이 이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했다. 낙관론자들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이념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앞에 둘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비관론자들은 주로 트럼프의 대선 정책 공약 분석을 통해 앞으로 자유무역 질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세계화와 강대국의 실력 행사 억제에 바탕을 둔 세계질서가 앞으로는 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 경제관계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미중관계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논쟁은 미국이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옮겨갔다. 여기에는 구조갈등론, 제도갈등론, 국내 문제 수출론이라는 세 가지 갈래의 주장이 있었다. 구조갈등론자들은 미중 무역 마찰이 단순한 시장 쟁탈전이 아니라 전략적 경쟁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주로 국제관계학 연구자였는데,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미중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중 마찰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두 나라 사이의 전체적인 국력 수준이 좁아진 데 있다. 이러한 상대적인 국력의 변화가 기존의 강대국과 떠오르는 강대국 사이의 구조적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구조갈등론자들은 미국이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거대전략(Grand Stratrgy)으로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피할 수도 없으려니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들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에서도 신냉전(New Cold War)이나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s Trap)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제도갈등론(또는 모델갈등론)자들은 미중 갈등의 원인을 발전 모델들 사이의 경쟁에서 찾는다. 이들은 미중 갈등의 배경으로 정부주도 발전 모델과 시장주도 발전 모델의 분기를 꼽는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 공동체는 중국의 발전 모델의 추이가 미국의 기대대로 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행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판단한다. 곧, 미국은 자기들의 시장 경제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와 경쟁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도갈등론의 특징은 미중 경제 관계를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도갈등론은 제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의 시장 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내 문제 수출론자들은 미중 갈등의 원인이 미국 계급 구조나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생기는 국내의 정치적 압력에 있다고 본다. 미국은 그러한 압력을 바깥으로 수출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이 그 좋은 대상이었다고 이들은 설명한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은 미중 경제, 교역관계의 확대에 따라 의심할 바 없이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미국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은 다국적기업이나 금융업자에게 돌아갔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미중 관계의 확대에서 생기는 이익을 거의 분배받지 못했다. 이러한 분배의 불평등은 미국 내의 계급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듯 미국 안에서 생긴 갈등을 바깥으로 수출하기 위한 정치적인 필요성이 미중 갈등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국내 문제 수출론자들은 주장한다. 이들의 논의는 대체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 바탕을 두는데, 낙관론자들의 시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미중 무역 전쟁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의 방향을 두고는

거국체제파(whole nation system school)와 시장개혁파(market reform school)의 의견 대립이 나타났다. 거국체제파에 속하는 논자들은 중국이 미국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의 일본 사례를 들면서 중국이 약하게 대응하면 일본 꼴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술과 관련해서 이들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더라도 기술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거국체제파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런 면에서 정부 주도 발전주의 논자들과 맞닿아 있다.

시장개혁파는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맞대응 조치를 비판했다. 이들은 시장경제와 개방을 향한 중국의 더 강력한 개혁이 미중 대결의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시장개혁파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념적 차이를 좁힐 것,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낮은 자세를 보일 것, 국내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기술에 대해서도 중국이 문을 닫고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미국 등 외부와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중 갈등을 두고 중국에서 펼쳐진 논쟁은 경제발전에서 정부주도를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시장주도를 앞세울 것인가, 자립적인 발전을 추구할 것인가, 상호 의존적인 발전을 추구할 것인가와 같은 전통적인 논쟁에 맥락이 닿아있다. 중국 정부는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하는 형태로 미국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이 수립한 세계경제 질서에 들어가서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혜택을 누렸다.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지 한 세대 만에 경제 규모 면에서 일본이나 독일 따라잡았고 미국에 대해서는 70% 수준까지 접근한 사실은 중국이 얻은 혜택의 정도를 말해준다. 물론 미국을 세계시장으로

이끌어 들인 일차적인 동력은 미국 기업들의 이윤율 하락이라든가 달러 헤게모니를 유지해야 했던 미국의 필요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중 경제관계의 발전에서 더 큰 혜택을 얻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현재의 미중 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에게는 미중의 대립 격화가 가져올 결과 가운데 유리한 내용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공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수동적이다. 중국의 대응이 수동적이라는 의미는 미국의 공세에 대해 중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반대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은 처음에는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미국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때는 중국도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이 미중 관계에서 수동적이라는 것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미중 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중국이 시장개혁파의 논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강하게 나올 때는 중국도 그에 대해 맞대응을 마다하지 않는 점에서는 중국의 정책이 거국체제파의 논리를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 세계 경제질서에 끼칠 영향

〈교역관계의 변화: 보호주의 강화〉

미중 경제관계의 균열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식의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교역관계에서 그동안 자유주의를 강조해오던 흐름이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바뀔 것이라는 점이다. 교역관계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금융 부문의 변화도 가져올 것이다. 안정적인 미중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금융의 확장 국면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금융세계화 국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먼저 미중관계의 균열이 교역관계에 끼칠 영향부터 살펴보자.

앞서 중국을 세계시장으로 끌어들인 배경에 세계화 물결이 놓여 있음을 보았는데, 미중 관계의 균열이 가져올 영향도 세계화의 퇴조와 관련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마이클 로버츠는 현재의 상황을 세계화의 물결이 사그라지는 국면으로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제3차 세계화 국면에서 기업들은 상품수출과 자본수출의 확대를 통해 추가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한 세계화의 흐름은 2000년 초에 이미 고점에 다다른 뒤 물러가고 있으며, 신용으로 부채질한 성장 국면이 잠깐 나타났지만 2007~8년의 글로벌 위기로 흐름의 방향이 굳어지고 있다. 세계화 물결의 퇴조는 보통 헤게모니 국가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동반한다. 19세기 말에는 영국과 20세기 말의 미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 물결의 퇴조 국면에서는 대체로 나라들 사이의 경쟁 관계가 깊어지고 이 경쟁 관계는 블록 형성으로 이어지며 전쟁으로 끝나기도 한다.

세계화의 물결이 퇴조하는 국면에서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다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무역 부문에서 무역 제한조치를 사용하는 것과 더불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발전

시켜 나가려고 하는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억제하려는 목표로 외국인 출자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중국 국내 합자법인에 대한 지분 제약,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을 문제 삼는다. 나아가 미국은 중국의 발전 계획이나 정부 역할과 관련된 중국 제조 2025, 국유기업 보조금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무역정책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수단, 곧 독점금지 규제, 법인세, 금융규제, 노동시장 보호 등을 통해서도 중국을 압박한다.

이러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 중국이, 수동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맞대응에 나서면서 교역 관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전면적인 보호주의의 강화로 이어진다면 세계경제는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로버츠는 보호주의 강화에 따라 실질 교역이 12~19%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최종재보다 중간재의 교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의 추산에 따르면 그 규모가 19~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의 축소와 나란히 총생산(GDP)도 0.9~5.3% 줄어들 것이라고 마이클 로버츠는 추산한다.

[표3-3] 글로벌 무역 균열로 인한 예상 손실(%)

	실질 교역	중간재 교역	최종재 교역	총생산(GDP)
엄격한 가정	-19.0	-25.0	-9.0	-5.3
유연한 가정	-12.0	-19.0	-1.0	-0.9

자료: Michael Ronerts(2023)에서 정리.

물론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정책들이 미국이 의도한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미국이 국내 산업의 이해 관계를 무시하고 보호주의를 일방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오히여

여러 자료들은 미국의 중국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정권이 통상법 301조 조사를 기초로 추가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2018년 7월 이후의 대중 무역의 움직임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大橋英夫 2020).

[표3-4] 통상법 301조에 따른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추가관세	주요 대상 품목	의존도
리스트1	자동차, 산업기계, 전자바품 등 818품목(340억 달러)에 25%	5.2%
리스트2	반도체, 플라스틱 제품 등 279夫품목(160억 달러)에 25%	9.4%
리스트3	식료품, 가전, 가구 등 5,745 품목(2,000억 달러)에 10%	13.4%
리스트4A	TV, 전화, 의류 등 3,243 품목(1,114억 달러)에 15% -> 2020년 7월에 7.5%로 인하	23.6%
리스트4B	스마트폰, PC, 완구, 게임 등 555품목(1,600억 달러)에 15% -> 2020년 1월에 적용 유예	84.2%

*의존도: 대상품목 총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大橋英夫(2020).

트럼프 정권은 무역대표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중 수입 의존도와 자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 관세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 리스트에 따라 추가 관세를 매겼는데, 2020년 현재 리스트1~3의 대중국 수입은 감소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는 무역 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수입 대상이 중국에서 멕시코, 대만, 베트남 등으로 바뀌었다. 리스트 4B 가운데 신발, 의료품은 수입 대상이 베트남, 방글라데시로 바뀌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환 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대중 수입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부품이 베트남으로 가서 거기에서 조립된 다음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도 나타났다. 추가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의 중국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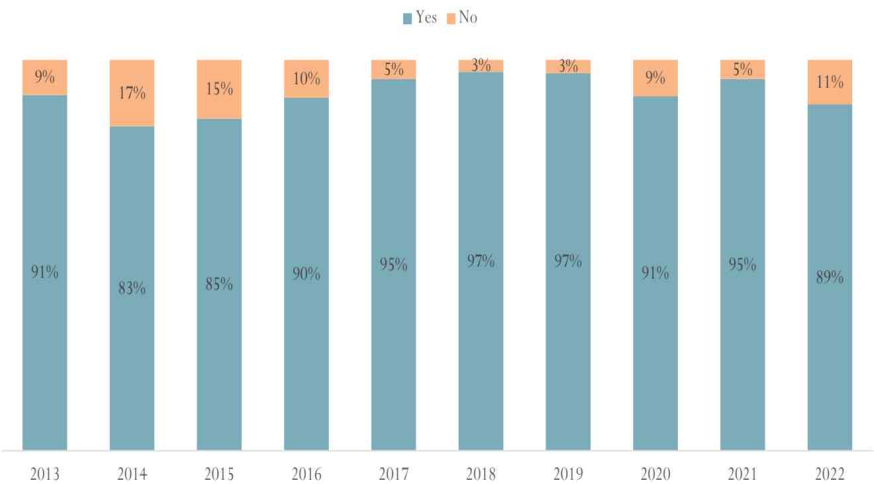
또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과 법안을 통해 화웨이와 SMIC 등 '기술굴기' 핵심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여 미국 제품·기술의 수출, 재수출과 국내 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금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웨이와 SMIC에 대한 거래 허가율이 70~9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정리하면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기술분야를 제외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는 큰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미국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2020년에 이르러 리스트 4B는 유예했고, 리스트 4A는 추가 관세를 절반으로 삭감했다. 미국의 대중 제재가 중국에 타격을 주기는커녕 중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국 바깥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오히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 분야의 자립 자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ibid.).

미국의 대중 규제가 중국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미국 제조업에는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있다. 트럼프 정권의 대중 추가 관세 효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러한 정책이 미국제조업의 생산, 고용 수출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었다는 것이다(kyle Handley et. al. 2020). 이러한 사실은 미중 두 나라의 상호의존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비용 때문에 미중 관계가 급속하게 탈동조화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을 이룬다(Farrell and Newman, 2020).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제재 일변도의 대응보다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Campbell and Sullivan, 2019).

무엇보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사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미중 무역위원회(US-china Business council)가 미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부의 수익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미국 기업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중국 사업부의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다. 2022년에 조사에서 설문대상 기업의 89%는 수익성 전망에 대해 낙관했다. 물론 낙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 전해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높은 편이며, 특히 2014년이나 2015년에 비해서도 더 높다[그림3-6]. 이는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사업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3-6] 미국 기업 중국 사업부의 수익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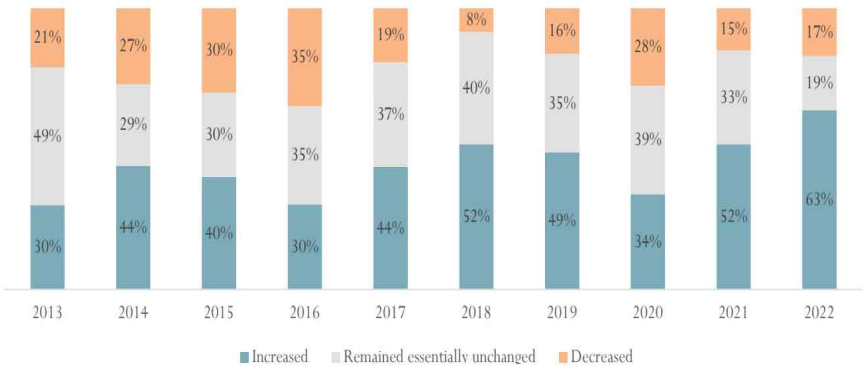
자료: US-china Business council(2021), 2022 Member Survey.

미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부가 올린 실적을 보더라도 2022년 조사에서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63%인데 비해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17%에 지나지 않았다. 수익성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 이전 해에 비해서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그림3-7]. 이는 미중 관계의 대립이 악화하는 국면에서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보다 나빠지지 않

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미국 주도의 보호주의 경향이 지금보다는 강해질 것이지만 전면적인 흐름으로 발전할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중국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면도 있지만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주의 흐름이 일직선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다.

[그림3-7] 미국 기업 중국 사업부의 전년 대비 수익성



자료: US-china Business council(2021), 2022 Member Survey.

〈화폐금융 질서의 변화(금융자산 가격 유지 중심의 금융정책 변화)〉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가 실물 부문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본, 기술, 지식을 중국의 거대한 노동력과 결합시켜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교역 가능한 상품량을 늘렸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이는 당연히 제조 상품에 대한 국제 가격경쟁의 압력을 높였고 나아가 그러한 상품들의 국제가격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쟁압력의 증가는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임금 수준을 낮추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임금 수준의 하락과 노동

조합 세력의 약화는 제조 상품의 비용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또 다른 요인이었다. 그리하여 1990년대에 중국이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후 제조 상품의 국제 가격이 장기간 안정되는 국면이 나타났다[47].

제조 상품가격의 안정, 곧 낮은 인플레이션은 여러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화폐정책의 수행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1970년대에 세계 여러 나라들의 중앙은행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해서 물가안정을 최우선에 둔 화폐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했고 화폐 가치의 하락은 금융자본의 손실을 의미했기 때문에 금융자본은 무엇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화폐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로 삼을 것을 중앙은행에 요청했다. 중앙은행들은 금융자본의 요구를 대체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물가안정을 우선에 두는 화폐정책을 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이 굳어지면서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산가격의 상승에 목표를 두는 정책을 펴게 된다. 중앙은행들은 자산가격을 띄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폈다.

첫째, 주요 중앙은행들은 자산가격 띄우기에 유리한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했다. 어떤 나라들은 법의 제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은 여러 규정 등을 통해서 사실상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예컨대 유럽중앙은행이나 우리나라는 물가안정제를 법에 못박았고 미국의 연준은 여러 규정과 관행을 통해 사실상 물가안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그 명

47) 브레너(Robert Brenner)는 1990년대 이후의 세계시장 가격 안정 요인으로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와 노동조합 힘의 약화를 든다(Robert Brenner 1998). 좀더 구체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과잉생산으로 고통을 받는 국면에서 중국(나아가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이 세계시장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과잉생산 문제가 더 심각해졌고 노동조합의 힘이 약해지면서 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을 인상시키지 못함에 따라 가격 상승이 압력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칭과는 달리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목표를 둔 제도가 아니다. 이미 세계적인 물가 안정이 대세로 굳어진 현실에서 굳이 물가안정을 중앙은행의 목표로 삼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물가안정 목표제의 진정한 목표는 현실의 물가 안정을 근거로 자산가에게 우호적인 화폐정책을 통해 자산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면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량을 늘릴 수 있고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또 화폐 공급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었는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은 더욱 공격적으로 화폐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 만약 늘어난 화폐 공급량이 주로 자산 시장에 머물면서 자산가격만을 끌어올린다면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의 책임에서도 벗어난다. 왜냐하면 현재 모든 나라들은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 자산가격의 변화는 거의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산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물가안정 목표제는 1990년대 이후 여러 나라들에서 자산가격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했다.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는 물가가 장기간 안정된 국면에서도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대안정(Great Moderation)'이라 불렀다. 이와 나란히 비슷한 시기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개념에 따라 중앙은행들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은 채 자산가격 중심의 화폐정책을 펴나갈 수 있었다.

둘째, 상품가격이 안정된다면 자산가격은 얼마가 오르든 별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라는 자산가격 중심의 화폐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dman)과 함께 『미국 화폐사』를 저술한 안나 슈워츠(Anna J. Schwartz)는 '슈워츠 가설'로 알려진 논리를 통해 상품가격의 안정이 금융의 안정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곧, 자산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증명했다. 1990년대 이후 여러 나라들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안정된 상황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상품가격의 안정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보장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셋째, 거품 처리비용을 사회가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갔다. 슈와츠 가설의 연장선장에서 금융자산이 과도하게 팽창하여 거품이 생겼을 때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는 논쟁거리였다. 그 논쟁에서 그린스펀 당시 연준 의장은 거품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리는 '그린스펀(Alan Greenspan) 독트린'이라 불린다. 자산가 계층으로서는 중앙은행이 자산가격의 잠재적인 거품에 대응하는 쪽보다 거품이 터질 때까지 거품을 계속 키우는 쪽이 더 유리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자산가격이 터진 뒤의 처리 비용을 대체로 사회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리에 따른 손실의 사회화가 제도적으로 굳으면서 자산가 계층은 거품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을 훨씬 덜 갖게 되었다.

넷째, 중앙은행들은 이미 망가진 자산가격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까지 폈다. 거품의 붕괴로 여러 금융자산의 가격은 하락한다. 금융자산 가격의 하락은 그것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최후의 대출자 기능이었다. 이는 중앙은행이 위기에 빠진 은행에 대해 담보를 잡고 벌칙금리를 부과하여 대출을 늘려주는 방식이다(배저트 원리). 최후의 대출자 기능으로도 금융기관를 구제하기가 어려울 때 나타난 논리가 중앙은행의 최후의 마켓 메이커(Market Maker of Last Resort ; MMLR) 논리이다. 이 논리는, 구제금융만으로는 부

실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우므로 중앙은행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산을 사들여야 한다는 내용에 바탕을 둔다. 중앙은행들이 망가진 자산가격을 회복시키기 위한 양적완화 정책은 이 논리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에는 중앙은행들이 자산가격 유지와 상승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의 금융정책을 정착시켜 나간다. 그렇다면 금융자산의 가격 상승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금융자산은 노동자들이 미래에 생산할 잉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이다. 예컨대 주식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 가운데서 배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서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채권은 생산한 잉여가치 가운데서 이자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증서화한 것이다.

금융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 가운데 배당이나 이자로 돌아갈 몫에 대한 금융자산가들의 청구 압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압력은 결국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해야 하고, 더 높은 강도로 일해야 하며, 더 불리한 환경에서 비정규직, 파견직, 임시직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잉여가치량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증가한 잉여가치량은 다시 금융시장을 팽창시키는 기초로 기능한다.

미중의 대립은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잉여가치량의 축소를 부를 가능성을 높인다. 그 동안 금융시장을 성장시켜 온 원동력이었던 중국의 저임금 숙련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자산가격을 끌어 올리는 핵심 정책이었던 물가안정목표제가 유지되기 어렵다. 그 동안 금융자산 가격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펴왔던 여러 금융정책들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나아가 금융정책의 변화는 또 다른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미중 경제관계의 발전은 금융의 팽창 현상을 불러왔다. 그 결과 현대

경제의 특징적인 면을 실물자본에 대비한 금융자산의 독자적인 대규모 집적(금융화 또는 경제의 금융화라 표현되는)으로 표현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현상은 증권화, 금융공학, 그림자 금융과 같은 금융 기법의 발달,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거래의 증가(특히 변동환율제로 이행 이후 외환거래가 증가), 금융시장에 의한 토지·주택의 포섭 등과 같은 금융부문 자체의 발전 논리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이윤율 하락, 미국 제조업의 상대적인 위축과 중국의 제조업 성장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과 같은 실물부문의 전개 과정을 반영한다. 무엇보다 중국이 세계시장과 연계를 맺으면서 생산해내는 잉여가치는 금융이 팽창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이었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팽창이 활발한 실물 축적을 나타내기 보다 실물 축적의 둔화와 글로벌 불균형을 나타내는 한 이는 언제든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자산은 실물자본의 이윤 창출을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는데, 만약 이윤창출의 기회가 줄어들거나 방해를 받는다면 청구권 자산의 가격은 유지되기가 어렵다. 미중 관계의 균열은 금융자산의 가격을 유지하는 바탕이 되는 이윤 창출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윤이 줄어들면 금융자본의 가치는 파괴의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금융자본의 가치파괴에 직면했을 때 미국 연준은 양적완화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었다. 중국이 뒷받침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달러 발행권을 가진 미국 연준이라도 또다른 양적완화 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금융자산의 가격은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데, 실제로 미중 관계가 본격적으로 대립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신자유주의 시기 성장해왔던 금융은 위기로 나아갈 것이다. 미중 대립은 금융자본의 대대적인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자본가로서는 마주하기 싫어하는 상황에 직

면할 수 있다. 금융자본의 가치 파괴는 달러 헤게모니의 약화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달러 헤게모니는 금융의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시장을 매개로 관철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을 가치사슬에 그대로 놓아두면 미중 생산력 격차가 줄어들어 미국의 헤게모니가 위협을 받게 되고, 가치사슬에서 밀어내면 금융시장이 축소되어 달러 헤게모니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전개된다.

〈브릭스(BRICS)의 성장과 달러 패권 약화〉

미중 대립이 격화하면서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직된 브릭스(BRICS)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브릭스와 미국 달러 패권의 관계가 관심의 대상이다. 달러 패권과 관련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달러가 사라졌을 때 이를 대체할 화폐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달러를 대체할 화폐가 떠오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달러의 패권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논거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중 대립을 계기로 달러를 대체할 세력으로 브릭스(BRICS)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하는 대체 국제 화폐가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단계이다.

브릭스는 처음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으로 구성된 브릭(BRIC)으로 시작했다. 2001년, 골드만삭스 경제학자 짐 오닐(Jim O'Neill)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50년에 이르면 세계 경제 전체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때 이 네 나라를 가리키기 위해 만든 용어가 브릭(BRIC)이었다. 2010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여기에 가입하면서 브릭은 브릭스로 불리게 되었고. 2024년부터 11개국으로 확대된다.

브릭스는 총생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G7에 버금가는 권력으로 성장했다. 브릭스의 성장으로 국제무대에는 서로 다른 지향을 갖는 글로벌 북반구(Global North)와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라는 '이중권력'이 성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김정호 2023.8).

브릭스는 공동체로 발전했는데, 그 이유를 세르지오 로씨(Sergio Rossi)는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대외무역이나 경제발전과 관련한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이 세계경제 전반에 걸친 지정학적 긴장의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이다. 다른 하나는 달러의 핵심 역할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다른 나라 금융기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다. 다시 말해서 브릭스는 미국의 무역, 금융 정책에 대항한다는 의식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이다. 세르지오 로씨는 브릭스 회원이 늘어나면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해오던 미국 달러에 대항하는 브릭스 공동 화폐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동맹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브릭스의 성장으로 국제분업 관계나 국제금융 권력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브릭스가 성장하면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넓은 시장을 가진 브릭스 안의 분업 관계가 촉진되고 나아가 교역관계가 확장될 것이다. 부족한 자원과 기술 문제는 이미 기술력을 높인 중국이나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러시아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달러 권력에 대해서는 이에 도전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달러의 사용을 줄이려는 시도나, 미국 중심의 금융시장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국제 금융기관들 사이의 결제망으로 사용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대체하려는 몇몇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미국은 러시아를 SWIFT에서 쫓아냈는데, 이를 계기로 러시아는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라는 결

제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중국도 CIPS(Cross Border Payment Interbank System)라는 결제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 중심의 금융망에서 벗어나려는 작은 시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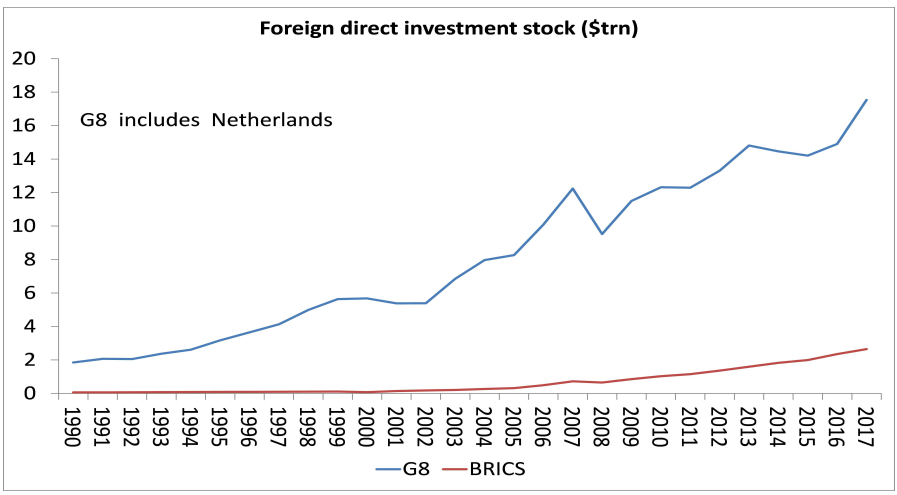
브릭스는 세계은행이나 IMF와 같은 기구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시도도 하고 있다. 예들 들어 브릭스는 2014년에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새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을 설립했다. 이 은행의 특징은 대출해줄 때 부채 축소, 긴축 재정, 민영화 프로그램과 같은 강압적인 조건을 내걸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개발은행의 영업 방식은 IMF와 세계은행의 영업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IMF와 세계은행도 대출해줄 때 채무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과거처럼 함부로 내걸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브릭스는 미국 달러를 우회할 수 있는 자체의 화폐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브릭스가 구상하고 있는 대체 국제화폐는 회원 국가의 화폐 바스켓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 화폐이다. 브릭스가 시도하는 공동 화폐가 실제로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 달러에 대항하는 화폐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화폐가 브릭스라는 거대 경제력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른 한편 브릭스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여러 취약성을 갖는다는 의견을 내는 연구자의 수도 만만치 않다.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취약성의 근거는 다양하다. 예컨대, 션 스타스(Sean Starrs)는 브릭스 국가들 사이의 동질성이 낮다는 점,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제시한다. 션 스타스(Sean Starr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17.0%인데 비해, 인도 3.6%, 브라

질 2.1%, 러시아 1.8%,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0.4%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경제력은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발전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브릭스의 명목 GDP도 G7보다 훨씬 뒤처진다. 브릭스 경제권의 GDP를 모두 합하면 2022년 기준 26조 달러인데, 이는 미국 한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1인당 GDP로 측정할 때는 그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림3-8] G8(G7 + 네델란드)와 브릭스의 대외 직접투자



자료: Guglielmo Carchedi&Michael Roberts(2019).

브릭스와 G7의 가치 이전 관계를 보면 브릭스의 취약성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국제무역에서는 여전히 브릭스에서 중심 국가로 가치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Guglielmo Carchedi&Michael Roberts 2019). 이처럼 중심국들이 교역 관계에서 불평등 교환을 통해 가치를 이전받는 이유의 하나는 이들 국가들이 훨씬 더 높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G7 국가들이 기술과 노동 생산성에서

브릭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G7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브릭스 국가들보다 기술 수준은 5배 더 우월하고,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은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ibid.). 대외 투자자산의 압도적인 부분도 G8(G7+네델란드)가 소유하고 있다. 브릭스가 소유하는 대외 자산은 G8의 6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그림3-8]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지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브릭스 중심의 금융시장이 발전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낸다. 현재 세계 외환거래의 약 90%는 달러 표시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세계무역 약 40%는 달러로 청구되고 결제된다. 미국 달러 지폐의 거의 3분의 2는 가치저장수단이자 지급수단, 교환수단으로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여러 중앙은행(미국 연준 제외)이 보유하는 세계 외환보유액의 60% 가량은 여전히 달러 표시 자산이다. 주요 경제권은 수출 흑자액을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중국 화폐는 세계 외환보유고의 3% 수준인데, 2017년의 1%에서 겨우 이 정도라도 늘어난 데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메시지의 약 40%는 미국 달러 표시이다.

이처럼 아직은 미국 달러가 갖는 지배력이 압도적이고 상대적으로 브릭스의 위상은 미약하다. 그렇더라도 브릭스의 성장은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 블럭에 의한 전일적인 지배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이 무역과 금융의 흐름을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지배력은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IV. 미중관계 이데올로기들과 소결

1. 미중 관계 이데올로기들

앞서 중국에서 벌어진 논의를 설명하는 곳에서 보았듯이 미중 갈등을 설명하는 틀은 크게 구조적 갈등론, 제도적 갈등론, 국내의 계급 갈등론 세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구조적 갈등론은 미국 주류의 관점이라 할 수 있는데, 국가를 단일의 지향을 갖는 인격체로 상정하고 갈등 관계를 설명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이론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공격적 현실주의론, 패권 전이론에 바탕을 둔 투키디데스 함정론, 신냉전론 등은 구조적 갈등론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미중 대립에 대한 미국 주류의 시각은 구조적 갈등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구조적 갈등론의 특징은 중국의 성장을 매우 과장한다는 점, 중국이 계속 호전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점, 미중 관계의 파국이 임박한 것처럼 설명한다는 데에서 나타난다. 국방부차관보, 여러 안보 책임자(국방부 장관, 국무 장관, CIA 국장)의 자문위원을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하버드대 교수가 쓴 『예정된 전쟁』이라는 저서는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앨리슨은 그의 저서에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교역 규모, 지급준비금 추이를 보여주면서 온 나라가 농촌 벽지였던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 '세계사에서 가장 큰 행위자'로 변모했음을 과장해서 설명한다. 그는 미국에 대비한 중국의 경제 규모가 2014년에는 100%, 2023년에는 150%, 그리고 2040년에는 거의 300%(세

배)가 될 것이라고 과장한다.

앨리슨은 미중 갈등이 결국 파국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그는 떠오르는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가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다룬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이다. 앨리슨은 투키디데스가 다룬, 떠오르는 아테네와 기존의 강국인 스파르타 사이의 전쟁이 현재의 중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렌즈라고 주장한다. 그는 당사국들의 의도와 관련 없이,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이 지배 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일 경우 그에 따른 구조적 압박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현상은 예외가 아니라 차라리 법칙에 가깝다고 말한다. 한편 앨리슨은 다른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다루었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미중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은연중 암시한다. 그러면서 앨리슨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그 길이란 결국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미국의 하위파트너에 머무르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클 허드슨은 『문명의 운명』이라는 저서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의 대립이 갖는 성격 규명을 통해 그레이엄 앨리슨을 비판한다. 그는 스파르타와 아테네 전쟁의 본질이 과두정치를 가질 것인지 민주정치(경제)를 가질 것인지의 대립에 있다고 본다. 이는 떠오르는 세력과 기존 강대국의 대립을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이라고 보는 앨리슨의 설명과는 사뭇 다르다. 스파르타는 패권국으로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고 이웃의 종속적인 지역에서 생산한 잉여 농작물을 거둬들여서 도시국가를 운영해 나갔다. 그 덕에 스파르타 시민들은 농업 노동에서

해방되어 군사훈련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잉여가치 수탈체제는 스파르타의 정치를 과두정치로 향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7세기부터 3세기까지 부채탕감과 토지재분배를 요구하는 대중 반란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도시국가들은 대중들의 요구를 억누르든가 아니면 수용해서 개혁하든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아테네는 대중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개혁하는 시도를 했다. 기원전 6세기 솔론의 개혁이나 기원전 5세기 페리클레스의 개혁은 부채를 탕감하고 토지를 재분배하려는 시도였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부채탕감과 토지개혁이 자기들의 불로소득 과두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를 걱정했는데, 마이클 허드슨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끝내 전쟁으로 이어졌다. 마이클 허드슨은 계급 사이의 분배를 둘러싼 투쟁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클 허드슨은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 그레이엄 앨리슨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스파르타와 유사하다고 본다. 불로소득 금융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과두정치, 필수적인 생산품의 외국 의존, 군사력을 통한 다른 나라 지배, 자립과 국내번영을 구축하려는 다른 나라에 대한 억압, 민주적 토지 개혁가와 친노동 지도자들을 탄압하는 독재자의 지원, 가계부채와 긴축으로 고생하는 미국의 일반 대중의 모습이 스파르타와 닮았다는 것이다. 마이클 허드슨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미중 대립이 표면적으로는 떠오르는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사이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그 핵심에는 불로소득 과두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경제적인 이해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세계체제론의 시각에서 미중관계를 설명하는 홍호펑은 『제국의 충돌』에서 앨리슨의 시각을 비판한다. 그는 먼저 앨리슨을 비롯한 구조 갈등론자들의 방법론을 문제 삼는다. 구조갈등론자들은 국가가 자율성을 갖

는다는 베버주의 국가 개념을 받아들인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권력 지위, 세계지배, 또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자율적인 행위자로 간주된다. 홍호펑은, 앨리슨이 자율성을 가진 국민국가들 사이의 경쟁이라는 한정적인 렌즈로만 미중 관계를 해석하기 때문에 경제적 연결이 두 나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놓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미중 갈등을 두 나라 사이의 가치와 체제의 충돌이 아닌 기업(자본) 관계의 변화와 지정학적 경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홍호펑은 베버류의 국가주의적 관점과 기업의 이해에 바탕을 둔 경제학적 관점을 넘어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과 기업조직들 사이의 경쟁을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영역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세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미중 관계가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공생에서 2010년대의 경쟁으로 변한 원인들을 검토한다. 홍호펑은 미국과 중국이 공생에서 경쟁으로 변한 근본 원인이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잉 축적의 문제, 이를 개발도상국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는 사정, 그에 따른 자본들 사이의 경쟁 증가에 있다고 본다. 홍호펑의 파악은 지정학적 경쟁만을 강조하는 주류의 설명과 달리 기업조직들 사이의 경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홍호펑의 설명도 국내 계급들 사이의 갈등과 그것을 외부로 수출하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국가들 사이의 긴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나 지식인 집단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담론의 함정(discourse trap)'으로 보면서 그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다. 그들은 투키디데스 함정론이 미국의 주류 이론가들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근거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곧, 투기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은 담론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9월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세계에 '투키디

데스의 함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이나 대립 없이 존중과 협력으로 서로 윈윈하는 외교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두 나라 사이에 어느 정도 갈등이 남아있지만 공동이익이 갈등의 크기를 넘어서기 때문에 결국 협력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처럼 미중 대립을 설명하는 한 이론인 구조갈등론, 특히 이를 대중적으로 개념화한 투키디데스 함정론은 미국의 이해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

미중 대립을 설명하는 또 다른 시각은 제도갈등론이다. 제도갈등론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경제발전 제도의 차이에서 찾는다. 국가주도의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시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사이의 제도 차이가 미중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주류 시각은 중국이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개혁을 강화하면 결국 미국 체제로 수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류들이 보기에, 실제로는 중국이 미국 체제로 수렴하기는커녕 2008년 이후에 오히려 거기에서 멀어져갔다. 이리하여 두 체제 사이의 틈이 커졌는데, 이것이 미중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주류 시각이었다. 제도갈등론의 대중적인 버전은 미중 관계 악화의 원인을 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차이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설명은 정치인들의 정책 슬로건으로 쉽게 표현될 수 있는데,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 동맹'이라는 구호로 이를 선 보였다.

미국이 얘기하는 가치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옹호하는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뭉쳐서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하자는 논리에 바탕을 둔다. 미국은 가치동맹을 조직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 자체에 대해서도 동맹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당할 불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두려움을 만들어낸

다. 미국은 경제, 군사안보 등의 여러 다자협의회를 중층적으로 만들어 가치동맹을 이끌어 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가치동맹에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배어 있고 이 때문에 동맹국의 일자리와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효과가 생긴다. 가치동맹의 이러한 성격 탓에 여러 곳에서 대오의 균일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가치동맹은 단일한 이해에 기반한 단단한 조직이 아니다. 여러 나라들은 비록 가치동맹에 속해 있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좇아서 언제든 독자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우 이념적으로 접근하여 대중 관계에서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제시하는 가치동맹의 규범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2. 소결

이 글은 이윤율로 표시되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본과 자본에 경쟁관계를 바탕으로 미중 갈등을 설명한다. 이에 따를 경우 미중 관계의 발전과 균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는 세계경제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세계시장은 그 이전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커졌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의 노동 분업 관계도 함께 발전했다. 새로운 노동 분업 관계는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으로 포착되었다. 세계시장이 커지고 노동 분업 관계도 발전하면서 상품 생산과 잉여가치의 생산도 증가했는데, 이는 저물가를 바탕으로 한 금융 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력 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 이후 본격적인 금융 세계화 국면이 전개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금융화 현상은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를 떼놓고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의 배경에는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 하락과 또한 미국이 달러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과잉 달러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 과잉 달러는 수익성 있는 자본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미국의 기업들은 과잉 자본, 기술, 지식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숙련 노동력과 결합시켜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경영 방식을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미중 관계가 발전했다. 미중 관계의 발전은 처음에는 두 나라에게 모두 이익을 주는 것처럼 비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순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나라 사이의 노동 생산력이 불균등하게 발전한다는 사실에서 나왔다.

중국이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이후 한 세대 만에 미중 관계는 협력에서 갈등으로 바뀌었다. 미중 관계의 갈등은 세계 경제 질서에 여러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 이후 새롭게 형성된 노동 분업 관계,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금융세계화 국면은 이제 달라질 것이다.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는 한국경제의 미래나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미중 갈등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중 관계에 생긴 갈등의 원인, 정도, 방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중 갈등이 한국경제와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끼칠 영향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중 관계에 대한 시각에는 여러 이데올로기들이 끼어든다.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 주류의 안보주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파국론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중국의 경제적인 능력과 미중 갈등을 크게 과장하는 경

향이 있다. 안보주의자들은 중국의 경제적 능력이 조만간 미국을 앞지를 것이며 미중 갈등은 현재도 심각한 수준이고 앞으로 전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예견한다. 이러한 파국론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미중 갈등이 노동자에게 끼칠 영향을 전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중 갈등을 주류의 지배적인 관점이 아닌 노동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한다.

4장

KCTU

신냉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Ⅰ. 미국의 경제패권 약화와 경제블록

1. 금융세계화의 한계와 달러 패권의 약화

1) 달러 체제와 세계금융위기

1991년 소련이 몰락하면서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세계화되었다.

미국은 자본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을 글로벌 규칙으로 강제하여 국가의 공적 기능을 축소하고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의 월가 대형은행들은 금융화, 증권화, 유동화 기법으로 세계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자본 이득을 극대화했다.

반면 자본회전이 느린 제조업은 해외로 이전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 국제분업체제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였고, 자유무역으로 이를 촉진시켰다. 여기에서 IMF와 WTO 등 국제기구들은 자본자유화와 자유무역 등 미국의 입장을 관철하여 세계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미국은 상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면서 무역적자가 커졌고, 군사비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도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미국은 기축통화 이점을 이용

하여 쌍둥이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메울 수 있었으나 거대한 부채가 누적되었다.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발행된 과잉 달러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상승시켜 지대추구 경제가 구조화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기반한 세계화 시대, 미국의 패권은 달러 체제와 군사력으로 유지되었다.

무엇보다 석유 수입 가격을 달러로 지불하게 하는 등(페트로 달러) 무역 결제에서 달러 사용을 강제하고, 준비자산(외환보유고)에 달러표시자산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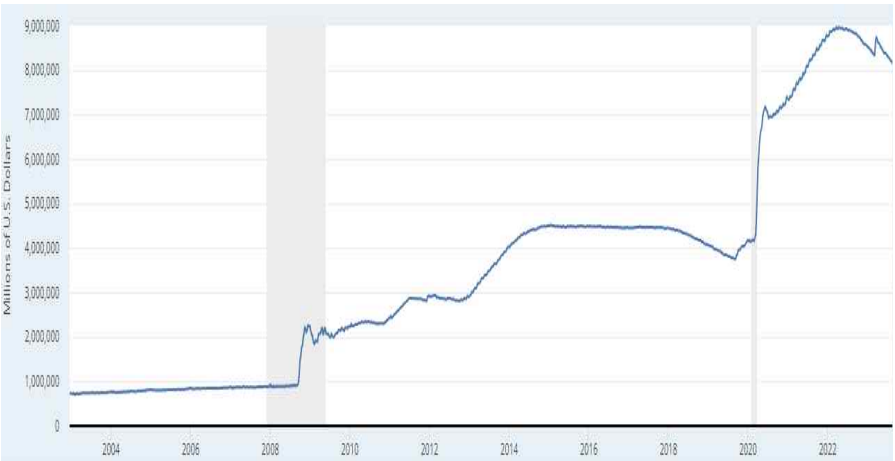
다음으로 중국, 일본, 한국 등의 무역 흑자분은 미국 달러로 액수가 매겨지고, 이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구조에서 주변국들은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보유로 낮은 금리를 받았으나, 미국은 해외 우량기업의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높은 금리를 받았다.

또한 주변국에서 미국 국채에 투자한 많은 부분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등의 전쟁 비용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달러 체제로 유지되던 세계금융시장은, 규제되지 않은 자본의 탐욕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한 대형은행들이 무너지면서 2008년 파국에 직면하였다. 세계금융위기는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이어졌고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은 10년 이상의 대침체에 빠졌다. 하지만 무모한 대출로 문제를 발생시킨 월가 은행들은 휴지조각이 된 모기지 자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의 세금 수천억 달러를 제공받았고, 민간이 소유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휴지 조각이 된 월가 주요 은행들의 부채를 떠안기 위해 수조 달러의 화폐를 찍어내었다. 실제 미국은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7년간 양적완화로 4조 달러를 쏟아부었다.(윌리엄 엥달, 화폐의 신, 2015).

연준의 달러 발행액은 2008년까지 1조 달러 이하였으나, 2009년 2조 달러를 넘어섰고 2016년 4.5조 달러에 이르렀다가 코로나 이후 9조 달러까지 증가하였다.[그림4-1]

[그림4-1] 연준 자산 추이



자료 : F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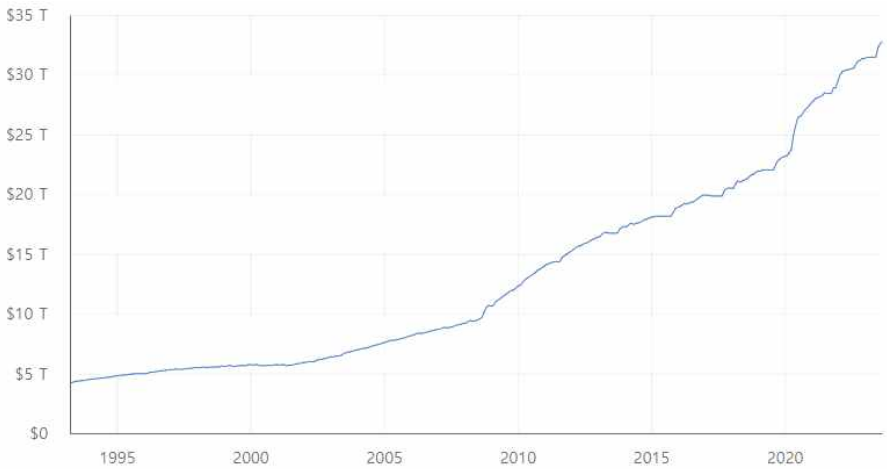
2009년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세계화의 한계가 공론화되면서, '대형은행 규제', 'ILO의 소득주도성장', '달러 체제 의존 탈피' 등의 대안들이 모색되면서 미국의 경제패권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대안 경제체제가 마련되지 못하는 가운데 2020년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또다시 천문학적 달러를 발행하여 국채를 조달하면서 정부 부채가 2020년 23조 2,000억 달러에서 2023년 33조 6,000억 달러로 늘어났다.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는 2019년까지 10년간 평균 2.05%였으나, 최근 평균이자율이 3%를 넘어섰다. 피터슨 재단에 따르면,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2022년 4,760억 달러인데, 금리인상으로 2023년 6,630억 달러(853조 원)로 예측된다. 이는 2022년 국방 지출 7,670억 달러에 근접한다. 미 의회예산국은 지금처럼 빚을 늘리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3년 25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33년 미국 정부 부채가 50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로 조건에서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2023년 8월 AAA에서 AA+로 강등했고, 11월에 무디스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한다고 밝혔다.

[그림4-2] 미국 정부 부채 추이



자료 : 미국 재무부

2) 중국경제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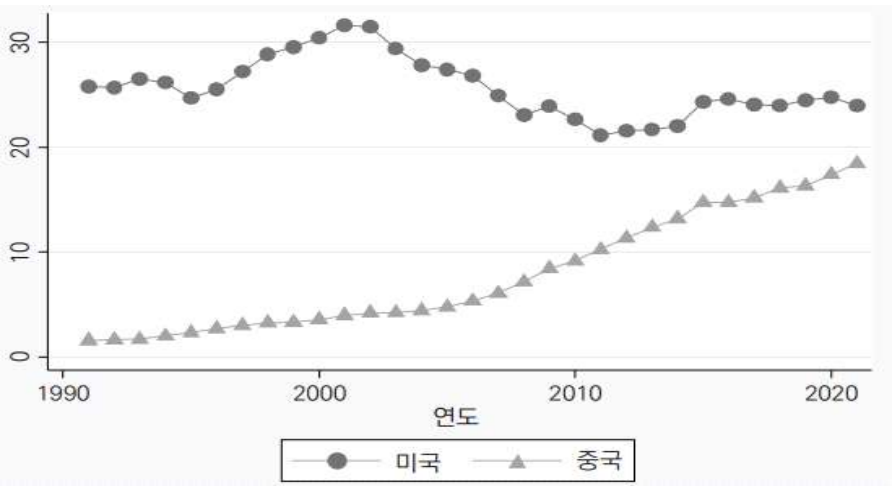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GDP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을 차례로 추월하고 2010년 일본을 넘어 세계 2위에 등극하였다. 세계은행은

2030년 경에 GDP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 세계 GDP에서 미국과 중국의 비중은 1990년대 초반 20%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났지만, 2021년에는 5.5%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명목 GDP에서 중국이 미국의 78%까지 추격하였고, 구매력을 기준으로는 이미 미국을 추월하였다.

2020년 기준 140개국 이상에서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며, 미국이 최대 교역국인 나라는 40개국에 불과하다.

블룸버그통신은 IMF의 세계경제전망 자료를 분석하여, 중국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세계 GDP 성장 기여 비중이 22.6%로 미국(11.3%)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4-3] 전세계 GDP 대비 미중이 차지하는 비중 비교(1991~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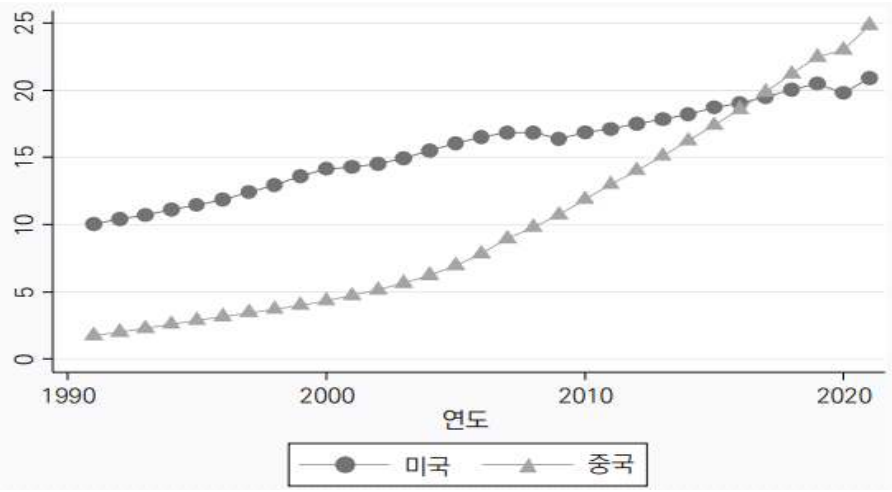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ata(2022)

시진핑 주석은 2022년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공동부유와 중국몽을 제시하였다. 중국몽은 1단계로 2021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샤

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2단계로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며, 마지막으로 건국 100주년인 2049년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여 경제·군사·외교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림4-4] 구매력 평가(PPP) 기준 미중 GDP 비중 비교(1991~2021,%)



자료 : World Bank Data(2022)

2. 미중 갈등과 세계화의 쇠퇴

1)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패권이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였다.[48] 미국은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러시아처

48) 2018년 중국은 세계 190개국 중 128개국에서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수출과 수입액에서 세계 1위이다.

럼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중국은 시장경제를 수용하면서도 은행 등 주요 국유기업의 개방을 제한하였고, 민간보다는 국가 주도 성장정책을 지속하였다. 국가 주도 성장정책은 미국 등 선진국들도 산업화 시기에 수십 년 동안 채택한 바 있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작은정부와 (민간) 자본주도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금융과 기간산업을 장악하지 못했고, 중국의 기술 굴기와 일대일로 등 시장확장에 경제패권 상실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장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화웨이 등 일부 국유기업 제재 등으로 보호무역을 시행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탈냉전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는 가운데 미국·서구가 수립한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도전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기초를 재건해야 한다고 선언했다.[49] 이는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거대한 부채 누적,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긴축재정 등으로 인해 달러·엔·파운드로 구축된 기축통화 동맹의 위기가 세계경제 위기로 전이되어 무역과 통화질서 등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이후 혼란, 기후와 식량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날 세계가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 중산층의 부흥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소

49)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ctober 202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10/Biden-Harris-Administrations-National-Security-Strategy-10.2022.pdf

득', '낮은 가계비용', '특정 국가가 미국의 지적재산을 빼가거나 불공정한 이점을 얻기 위해 통화를 조작하는 것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과 서방의 가치에 도전하는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경제제재가 확대되고 첨단기술 통제가 강화되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시되면서 핵심 산업 자국 생산 등으로 신냉전 경제블록이 구축되고 있다.

2) 신냉전 경제블록 형성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자 안보체인 쿼드(QUAD)를 2021년부터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시켜 군사 및 기술 협력으로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미국·영국·호주 3자 군사동맹체인 오커스(AUKUS)를 출범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오커스 동맹에 따라 미국·영국은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여 8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국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군사동맹 수준의 정례적 연합훈련을 약속하였다.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의 협력범위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로 확장되었고 중국을 주된 타겟으로 설정하였다. 성명에는 대만해협을 언급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 표명되었다. 아울러 러시아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우크라아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며 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완벽하게 편입되었고, 한미일이 위협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공동대응에 나서는 안보협력틀이 정식화되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군사동맹 확장과 함께, 경제동맹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T)를 2022년 출범하였다. IPET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반부패 등을 의제로 다루며,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인한 공백을 채우고,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EU와 대서양지역에서는 군사동맹인 나토가 있고 경제동맹으로는 미국EU무역기술위원회(TCC)가 2021년 출범하였다. TCC는 핵심적인 국가 산업으로서 반도체의 공급난 해소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또한 적대적인 외국인 투자 및 수출통제 심사와 인공지능 및 반도체 공급망의 보안 확보 등 다양한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중국의 불공정무역(비시장 경제)을 통제하여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3. 탈달러 흐름과 브릭스의 부상

1) 탈달러 흐름

(1) 진영 대결에 중립적인 국가들의 증가

제2차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미국 주도 세계질서가, 신냉전으로 파편화

되고 경제적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비동맹 중립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였으나, 이에 동참한 나라는 52개국이고 러시아를 지지한 나라는 12개국이다. 그러나 대다수인 127개국은 중립을 지켰다. 이들은 국익에 따라 실리적으로 접근하여 어느 편에 서는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실용적으로 거래하듯(transactional) 중립을 지키는 주요국을 T25(멕시코, 이스라엘, 모로코, 알제리, 튀르키예, 베트남, 카타르,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페루, 이집트, 태국, 남아공화국, 필리핀, 칠레, 나이지리아,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리비아, 아랍에미리트 등)라고 하는데 이들은 전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한다.[50]

한편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21개 아랍연합 국가의 정상들과 제1차 중국-아랍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등 8개 영역에서 공동행동을 기초로 운명공동체 구축을 합의하였다. 아랍국가 정상회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 지부티, 팔레스타인, 카타르, 코모로, 모리타니아, 이라크, 모로코, 알제리, 레바논 등의 정상과 아랍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어 중국의 중재로 오랜 숙적인 사우디아리비아와 이란이 관계정상화를 합의하고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하여 시리아, 예멘 등까지 연관된 중동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과거 중동의 패권국이었던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하고 있다.

미국은 뒷마당인 중남미에서도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2023년 1월 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 7차 정상회담에서는 33개국 회원국이 결집하였는

50) The Economist, 2023.4.11, “How to survive a superpower split”

데, 여기에 미국, 캐나다는 배제되었다.

한편 일본은 2022년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전년 대비 4.6% 증가시켰다. 또한 미국이 설정한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를 어기고(배럴당 60달러 상한선) 2023년에도 배럴당 69.5달러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올 9월 30일까지 가격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미국의 양해를 구하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였다. EU도 2022년 가격상한을 넘겨 러시아산 에너지를 1,86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였다.

국제적인 다극화 흐름과는 달리, 한국만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호주,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에서 비싼 에너지를 구입하여 석유, 가스, 전기세, 교통비 등 물가가 폭등한 바 있다.

(2) 위안화 및 지역통화 사용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러시아를 국제금융결제시스템인 SWIFT에서 차단하고 미국과 서방 은행에 있는 러시아 외환보유고 3,000억 달러를 동결하였다. 또한 미국과 EU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제재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중국, 인도 등에 에너지 수출을 확대하면서 중국 결제 시스템인 CIPS[51]를 사용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3월 러시아와 중국 간 교역의 2/3 이상이 위안화와 루블화로 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가 오히려 달러패권에 타격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도 언젠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달러 의존을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2022년 신흥국 중심으로 국제 무역에서 위안화 또는

51) CIPS(위안화 결제시스템)는 2022년 말 103개 국가, 1,280개 은행이 사용하고 있다.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달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에 대한 석유 수출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겠다고 발표했고 11월 시진핑-살만 정상회담에서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올 3월에는 중국해양석유공사가 프랑스 토탈에너지도 참여해 개발한 액화천연가스(LNG) 6만 5,000톤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수입하는데 위안화로 결제하였다. 또 6월에는 인도 정유사들이 러시아 원유를 구입하면서 위안화로 결제했다.

인도는 탈달러를 위해 국제간 교역에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20개국과 자국 루피화로 결제하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올해 4월 러시아 건설대금 결제대금 3억 1,800억 달러를 위안화로 결제하였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도 최초로 IMF 구제금융 부채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상환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오랫동안 미국의 임의적인 금리인상으로 자본이탈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외채 문제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IMF 차관을 도입하여 채무의 수렁에 빠졌다. 하지만 이제는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올 6월 만기도래한 IMF 구제금융 6월분 상환 원리금 27억 달러를 특별인출권(SDR)과 위안화로 상환하였고, 7월에는 IMF 차관 27억 달러 중 17억 달러를 위안화로 상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4월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을 위안화로 결제하였고, 6월에는 중국과 1,300억 위안(24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였다.

제2의 핑크타이드를 주도하는 브라질도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표를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 3월 중국과의 무역에서 달러

대신 자국 화폐인 헤알화와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 결제 거래에서 위안화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SWIFT 대신 CIPS를 이용하자는 데도 합의를 이룬 상태다.

중국은 다양한 나라들과 양자 협정으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중국 외환관리국은 [그림4-5]와 같이 올 상반기 중국의 대외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이 48.6%로 달러화 비중(46.8%)을 앞섰다고 발표했다.

[그림4-5] 위안화와 달러화 결제 비중 비교(%)

자료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2023.4.21.) *위 곡선이 달러, 아래가 위안

아세안에서도 3월 재무차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달러화·유로화·엔화·파운드화 의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세안 회원들끼리 교역할 때 달러보다 역내 화폐를 이용하고, 중앙은행 간 직거래로 거래하는 결제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세안이 역내 통화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다.[52)]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탈달러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와 교역에서 루블화를 사용하기로 했고, 올해 3월 인도네시아와 교역에서 달러가 아닌 양국의 통화로 결제하기로 합의했다. 7월 인도와 UAE도 달러 대신 루피와 디르함으로 결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라크는 지난 2월 중국과 교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했고, 자국 화폐가치가 계속 하락하자 지난 5월에는 달러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국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53]

케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정을 맺고 달러 대신 케냐 실링으로 석유를 구입하고 있으며, 수단은 러시아와 자국 통화로 거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가나는 UAE 등에서 석유수입 대금을 달러 대신 금으로 지불했다. 동아프리카공동체(EAC)는 동아프리카 실링이라는 지역화폐 창설 계획을 세우고 아프리카 수출입은행과 협의하고 있다. 16개국이 모인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도 공동통화를 고려하고 있다.[54]

(3) 중국, 일본 등 미국 국채 보유 비중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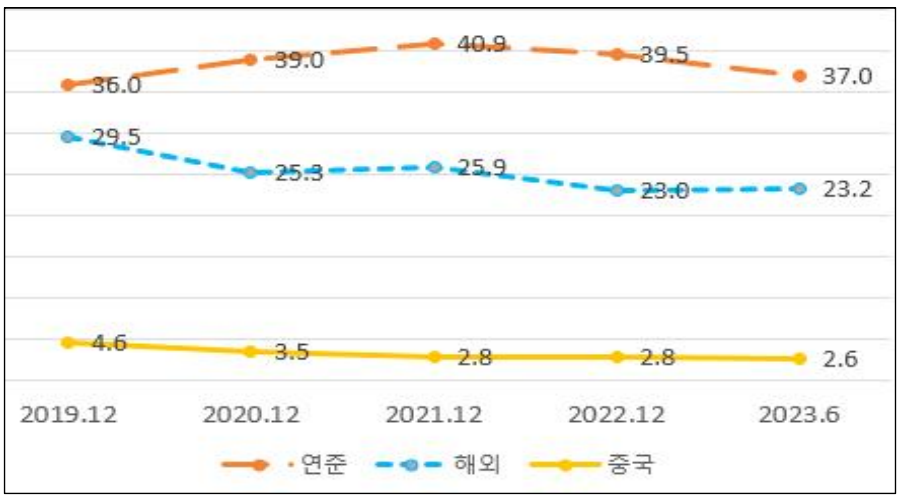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00년 이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70%를 차지하던 달러 비중은 2022년 4분기 58%로 감소하여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부문별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보면, [그림4-6]과 같이 중국 등 해외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연준이 팬데믹 위기에서 시중에 유

52) 프레시안(2023.8.14.)
53) Ibid
54) Ibid

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국채 보유 비중을 늘렸다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긴축으로 국채 보유를 줄이고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

[그림4-6] 주요 수요자들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최배근TV(2023.10.12.)

미국은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무한히 공급하고 있는데 국채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 2023년 국채가격이 유례없이 하락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5%에 이르고 있다. 이에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은,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다.

한편 신냉전과 공급망 재편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실물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 보유자산 동결 등으로 신흥국들은 경제제재 등을 우려하여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

세계금위원회(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2022년 금 수요는 10여 년 만에 가장 강세를 보였다. 투자자 구매가 10% 증가하고 안정을 도모하려는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대량 매입하면서 금 소비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4,741톤에 달했다.

2022년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 1,136톤을 매수하였는데 이는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55년 만에 최대치이다. 전체 금 수요의 42%를 중앙은행이 차지하였는데, 국가별로 보면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가장 많은 148t의 금을 매입했고, 이집트(47t), 카타르(35t), 이라크(34t), 인도(33t) 등이 금 보유량을 크게 늘렸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11~12월 두 달 동안에만 62t의 금을 사 모았다. 금리인상으로 미국 국채가격 하락 등 안전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확실한 실물자산인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늘어난 금 보유량이 러시아 264톤, 중국 107톤, 인도 198톤 등에 이른다.

JP모건은, 탈달러의 위험은 미국이 과거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달러)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JP모건은 "역사적으로 '남미 및 동유럽과의 무역을 통한 수입 물가하락', '수익성 낮은 경제 부문의 아웃소싱', '무역흑자의 달러자산 재활용', '에너지 자립(셰일가스)' 등이 달러패권의 핵심 요소였다"며, "수입 물가하락과 부채 수요 덕분에 서방은 통화·재정 조치를 조합하여 지금까지 모든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가 분리되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JP모건은 "이러한 위기 대응 조치가 위험에 처해, 잠재적으로 서구의 인플레이션과 부채 소용돌이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최근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도 이러한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JP모건은

"제조업과 원자재 생산 등 탄소집약적인 산업이 동양으로 아웃소싱되어 서양이 산업적으로나 인플레이션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서방은 우크라이나에서 천연가스, 식량, 군수품 등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다"고 전했다.(비즈니스인사이더, 2023년 9월)

2) BRICS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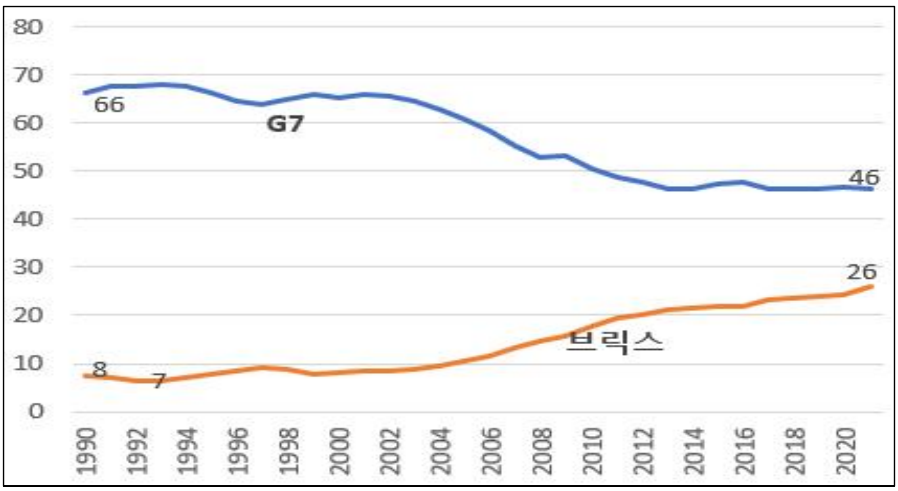
(1) 브릭스의 위상

최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패권적 보호무역 강화', '보건·기후위기·평화·이민·불평등 문제 방치', 'UN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반대' 등으로 국제 리더십이 추락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의 방해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IMF와 세계은행은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여 방향을 잃었으며, 미국은 글로벌 번영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 반면 BRICS는, 남반부 국가들의 권익을 대변하며 미국의 일극패권에 반대하고 다극 질서를 추구하면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제15차 정상회의에서 확장된 브릭스 11개국은, 세계 인구의 47%, 세계 석유 생산량의 48%, 세계 GDP의 29%(구매력 기준은 37%)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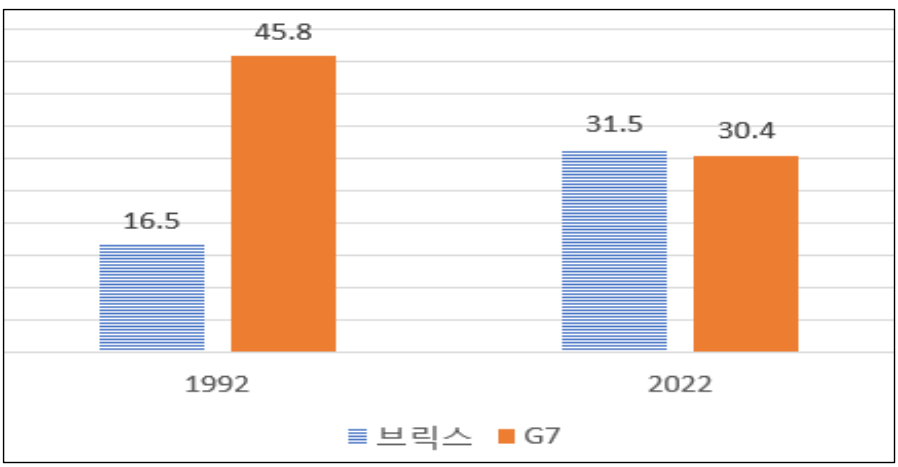
[그림4-7]을 보면, 기존 브릭스 5개국의 세계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에서 2020년 26%로 증가하여 G7(동기간 66%에서 46%로 하락)을 추격하였다. 구매력 기준 GDP로는 [그림4-8]과 같이 2022년 브릭스 5개국(31.5%)이 G7(30.4%)을 추월하였다. IMF는 2028년까지 브릭스(5개국)의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가 33.6%로, G7의 27.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4-7] 브릭스 5개국과 G7 간 명목 GDP 비교(%)



자료 : 통계청에서 재정리

[그림4-8] 브릭스 5개국과 G7 간, 구매력기준 GDP 비교



자료 : Takushi, Christian(2023.4.17.),
"Geopolitical Update: BRICS overtake G7, 29 nations defy the USD and the West"

또한 브릭스는 미국 주도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세계은행 및 IMF의

대안으로, 2015년 회원국들의 공동출자로 신개발 은행(New Developmen t Bank)을 상하이에 창립하였다. 이는 최초로 개발도상국이 설립했고 개발도상국을 위한 은행으로 유엔 회원국에까지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전체 대출의 30%를 회원국 화폐로 대출할 예정이다. 현재 브라질 전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가 총재를 맡고 있고, 자본은 1천억 달러이다.

2023년 6월 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브릭스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다자체제를 촉진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공동성명은 미국 일극 패권에 반대하여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개발도상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억압 조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기반한 국제법을 수호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을 견지하며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영토 또는 정치독립 침범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 외 국제관계에서 이중 잣대를 반대하며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그 어떠한 강제적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동성명은 인민 중심의 국제협력을 핵심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며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으로 상의하고 공동으로 건설하며 공유하는 방법으로 세계경제 관리를 강화할 것도 강조했다.

(2) 제15차 브릭스 정상회의

2023년 8월 남아공화국에서 개최된 제15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회원국 확대', '회원국 화폐 사용 비중 확대', '다자 체계', '포용적 성장'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먼저 BRICS 정상들은 새롭게 아르헨티나,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을 정회원으로 승인하여 브릭스의 남반부 대표성을 강화하였고, 중동의 핵심 산유국들을 포괄하면서 에너지 공급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브릭스는 자체 지침과 원칙, 과정에 따라 6개국 가입을 승인하였는데, 추가적으로 20개국 이상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다. 의장국인 남아공 대통령은 이번은 첫 번째 단계일 뿐 2차, 3차의 확충으로 새로운 회원을 계속 가입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4-9] 브릭스 11개 가입국

자료 : 국제시사평론(2023)

다음으로 브릭스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예측가능하며 포용적이고 평등하고 비차별적이고 규칙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5차 정상회의 선언문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이 더 큰 역할을 맡도록 브레튼우즈 체제

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브릭스는,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로 보호무역을 추구하면서 WTO와 UN을 무력화시키고[55] 서방의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또한 달러의 대안으로 지역화폐 사용 확대가 결의되고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언급되었다.

남아공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 및 결제시스템이 지정학적 경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된다”며 “글로벌 경제 회복은 예측 가능한 글로벌 경제시스템과 금융 흐름뿐 아니라 은행, 공급망, 무역, 관광 등의 원활한 운영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대통령은, 무책임한 통화 조치로 인한 G7 통화의 변동성으로부터 신흥시장을 보호하고 브릭스 국가들을 위한 ‘새로운 기준 단위(new reference unit) 아이디어’를 언급했다.

또한 15차 정상회의에서 공동화폐 개념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재무장관은 “브릭스 회원국들이 단일 계정단위(single unit of account) 창설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유로화와 같은 단일통화가 아니라 단일통화나 그 발행센터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일부 상품에 대한 상품 배송 및 표준가격이 표현될 수 있는 도구”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이 실제로 단일 통화(EU의 유로와 유사)가 아니라 "단일통화 또는 그 발행센터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일부 상품에 대한 상품 배송 및 벤치마크(기준) 비용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in which the cost of commodity deliveries and benchmarks for some goods can be expressed in order not to de

55) 미국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정책을 전환한 후, WTO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임기가 끝난 상소기구 위원(7명) 선출에 반대하여 무역분쟁 재심기구인 상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pend on a single currency or its issuing center.)라고 설명했다. 장관에 따르면 제안된 단일 회계 단위는 미국 달러의 대안이 된다.[56]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요하네스버그 선언'은 총 9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하네스버그 선언 주요 내용>

○ 서문
- 이해, 주권평등, 연대, 민주주의, 개방, 포용, 합의의 브릭스 정신에 대한 약속 재확인
- 평화, 공정한 국제질서, 다자시스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 포용적 다자주의를 위한 파트너십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조화롭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대화,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 지지
- 평화 증진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가 중요한다는 것을 인정
-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다자주의와 유엔의 중심적 역할 중요
- 유엔 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 높일 것을 요구.

○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 다자간 금융기관과 국제기구 장려, 지정학적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 강조
- 브릭스 국가가 세계 식량의 1/3을 생산하는데, 탄력적 식량 공급망을 위한 농업 협력 강화
- 브릭스 국가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공급망과 결제시스템을 상호 연결, 무역 분야의 교류와 협력 강화
-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결제수단에 대한 추가 대화 장려, 브릭스 회원국과 다른 개도국 사이 지역화폐 사용 장려.
- 브릭스 국가 간 국제 무역 및 금융 거래를 위해 은행 네트워크 강화.

56) 스푸트니크(2023.8.24)

- 현지통화, 결제수단 사용 등에 대해 다음 정상회의까지 보고하도록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에게 임무 부여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 기후변화에 대한 다자간 대응을 수호·촉진·강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저탄소, 저배출 경제 전환 옹호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 중시, 생물다양성 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한 선진국들의 약속 이행 촉구
- 기후 문제 해결을 구실로 선진국들이 취하는 무역장벽에 반대

○ 인적교류 심화
- 경제발전에서 여성의 역할 강조, 브릭스 여성기업동맹의 활동 장려
- 글로벌 공공재로서 문화와 창조경제 장려

○ 제도의 발전
- 브릭스 회원 확장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 원칙과 표준, 기준, 절차 합의
- 아르헨티나 등 6개국을 정식 신규 회원으로 승인
- 브릭스 파트너 국가 모델과 잠재적 파트너 국가 목록을 작성하고 다음 정상회담에 보고하도록 외무장관들에게 임무 부여

(3) 브릭스 부상의 의의

브릭스의 부상으로 미국과 G7의 경제패권은 크게 약화되고 자주적이고 호혜평등한 관계의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브릭스 국가들은 실물경제에 기반하고 있어, 지대추구 금융경제에 기반한 미국과 서방보다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브릭스 11개국은 러시아·중동국가의 석유·가스·광물, 브라질·아르헨티나의 농·축산물,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산업기반, 중국·러시아의 자본과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G7은 금융경제에 기반하여 과도한 부채경제와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 해외 이전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

특히 11개국으로 확장되어 핵심 산유국들과 최대 소비국인 중국을 포괄한 브릭스는 세계 석유 생산과 소비를 좌우할 수 있다. 현재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는 미국·서방의 증산 요구와 달리,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브릭스 회원국들은 감산으로 유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최대 석유 수입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어 위안화 결제가 확대되는 등 석유 시장의 주도권이 브릭스로 넘어가고 있다.

둘째, 11개국으로 확대된 브릭스는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을 포괄한 거대한 시장이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있더라도 브릭스에서 교역이 보장되면 G7 중심의 경제블록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지리적으로도 브릭스는 북극항로, 국제남북운송회랑, 일대일로 구상의 동서회랑, 페르시아만, 홍해, 수에즈 운하 등을 거느리고 있어 세계무역을 주도할 수 있다.

셋째, 브릭스 경제권의 협력으로 회원국들은 경제의 내재적 발전이 가능해졌다. 브릭스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선진국의 수탈을 받았고 다국적 기업의 요구에 따른 편향적인 수출로 내재적 발전이 지체되었다. 이제 브릭스 국가 간 협력으로 사회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1·2·3차 산업의 균형을 이루면, 그 기반 위에서 특화된 산업을 집중 발전시킬 수 있다. 그간 개도국들은 미국 등 선진국들의 요구에 따라 석유 가격을 조절하고, 자원을 수출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기술과 자본에서 종속되어 글로벌 공급사슬의 밑바닥을 위치했다. 또한 달러 체제에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종속되어 상시적인 환율 불안정이 발생하고, 자본자유화로 금융과 기간산업이 장악되어 신자유주의 지대추구 경제로 편입되었다. 향후 브릭스에서 호혜평등하고 공정한 무역이 보장되고 기술과 자금이 지원된다면, 회원국들의 자립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할 것이다.[57]

넷째, 브릭스가 향후 새로운 공동화폐를 만들 경우, 달러 체제가 균열될 수 있다. 브릭스의 거대 시장과 다양한 상품·원자재 거래는 회원국들의 지역통화로 이루어질 것이고 페트로 달러는 힘을 상실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북한 등이 금융제재를 받으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중국은 독자 결제시스템과 디지털 화폐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통화 사용 확대와 디지털 통화 등 신기술의 발전은 달러에 맞서는 복수의 기축통화가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57) 김정호, 울산함성(2023.8.31), 국제 이중권력의 성립과 다극질서의 진입

Ⅱ. 미중 갈등과 신냉전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

미국은 세계화의 주도자로 자유무역을 추진하였으나, 2023년 소위 뉴 워싱턴 컨센서스(New Washington Consensus)[58]를 통해 기존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화의 종료를 선언하고 신냉전 경제블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화 시대 비용절감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여, 자국 중심으로 핵심 기술과 생산설비를 재배치하고 있다. 즉 동맹국 경제블록 내에서 반도체, 전기차, 전기배터리, 의약품 등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 러시아 등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는, 이에 대한 공급을 차단하여 기술 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바이든 시대에 인프라투자와 일자리법,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실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이 시행된 후 1년간 친환경 및 반도체 분야에서 110건의 투자프로젝트, 2,240억 달러(약 300조 원) 이상이 미국 제조업에 투자되었다.[59]

58) 뉴 워싱턴 컨센서스는 2023년 4월 27일 워싱턴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경제 리더십 회의 중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발제 중에 언급했다. 주요 내용은 작은정부를 지향하며 IMF, WTO,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경제 질서를 추구하던 신자유주의와 달리, 정부가 주도하여 보조금과 중국 제재 등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에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부흥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프렌드쇼어링을 구축하고 UN이나 WTO가 아닌 미국 중심의 새로운 법과 룰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표4-1] 미국 내 생산확대 법안 및 행정명령

법안	제정	주요 내용
인프라투자와 일자리법	2021.11	청정기술,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개선 등에 10년 동안 1,420조 원 투자하여 150만 개 일자리 창출, 21세기 뉴딜정책. 단 미국산 자재 사용, 미국에서 제조하고 완성, 미국산 부품 55% 이상 사용해야 지원
반도체와 과학법	2022.7	미국 내 설립하는 반도체 제조시설 확충에 365조 원 지원. 장비 투자에 25% 세액공제, 연구개발에 보조금 지원 중국 투자 제한(반도체 장비 제공 금지, 한국의 중국 현지공장에 대해서는 1년 유예). 미국이 설계와 생산까지 장악하여 반도체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계획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8	전기차 등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산업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 + 경기부양책(학자금 대출 확대) + 15% 최저 법인세율 발효 미국 투자에 세금감면 등 지원금, 중국·러시아 원자재와 부품(배터리 등) 사용 금지, 중국·러시아와 거래 제한 명시.
바이오 행정명령	2022.10	미국 내 신약, 바이오 생산설비 확대, 미국 발주 해외 위탁생산 생산 감축, 미국으로 이전

자료 : 각 언론사

1) 반도체와 과학법

(1) 반도체 칩4 동맹

칩4 동맹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하는 반도체 동맹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60]. 미국은 반도체 설계의 원천기술과 반도체 장비 시장을 주도하며, 일본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D램 및 낸드플래시)의 65% 이상을 과점하며, 대만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

59)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2023.8.16.)
60) 2030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한 이후,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었다.

이상을 과점하고 있다. 이렇게 반도체 각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4개국이 동맹을 형성하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2022년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은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면서 동맹 강화 전략을 제안했고 한국은 이에 동의하였다.

반면 중국의 환구시보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 중 중국·홍콩에 대한 수출 비중이 60%에 이르는데 이렇게 큰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행위라고 칩4 동맹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칩4 동맹에 따라 반도체 중국 생산과 거래를 제약하면, [그림4-10]과 같이 반도체 수출의 60% 이상을 중국(홍콩 포함)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본다.

[그림4-10] 한국의 국가별 반도체 수출 비중 (202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삼성전자는 그동안 30조 원 이상을 중국 시안의 낸드플래시 두 개 공

장에 투자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물량의 40%를 생산한다. 삼성이 낸드플래시 세계시장 점유율이 35.3%를 차지하는데 중국에서 14.1%가 생산되는 셈이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2개의 D램 메모리 생산라인이 있는데 그간 5조 원을 투자했고, 2023~2025년 2조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우시 공장은 SK하이닉스 D램 전체 물량의 40%를 생산한다. SK하이닉스의 세계 D램 시장의 점유율이 27.3%인데 13.1%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또한 SK하이닉스는 2021년 인텔의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을 10조 3,000억 원에 인수[61]하였다. 다롄 공장은 SK 낸드플래시 전체 생산량의 20%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 견제와 지정학적 리스크 예방을 위해 첨단반도체의 중국공장 생산을 통제하고 대만·한국 생산의 미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봉쇄 정책에 의해, 한국이 반도체 전체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현지 공장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생산과 수출에서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며, 미국으로 생산 이전은 향후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독과점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2) 반도체와 과학법

반도체와 과학법은, 미국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적

61) 미국의 제재로 중국공장에서 첨단 공정 전환이 제한되어 중국 생산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텔이 중국공장을 SK에게 매각하자마자 미국 당국의 중국 제재 방침이 나와, 이를 알고 의도적으로 다롄 공장을 매각하였다는 '인텔 음모론'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생태계 육성 법안으로, 2,800억 달러(366조 원)를 투자하여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현재 12%)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글로벌 기업에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시설·장비 투자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현재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대만의 TSMC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우선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62]에 대한 첨단시설 투자를 제한하는데,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의 5%,[63] 범용 반도체는 10%까지만 웨이퍼 투입량을 늘릴 수 있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삼성 낸드플래시 웨이퍼 투입량은 100~120% 증가했다. 그런데 웨이퍼 투입량이 10년간 5~10%로 제한되면 최소한의 양산 유지를 위한 신규 시설투자와 신규 장비 등의 공장개선을 위한 투자마저 어렵다고 한다.

최정동 테크인사이츠 메모리 부문 수석부사장에 의하면, 삼성과 SK는 양산 메모리칩의 이익률은 좀 낮더라도 연간 1,000만 장에 육박하는 웨이퍼 양산으로 이익을 창출해 왔는데, 만약 양산 웨이퍼 수에 제한이 있을 경우, 신규 첨단반도체의 생산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없다고 한다.

첨단 기준은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레시 △핀펫 기

62)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63) 반도체는 장치산업이라서 지속적인 생산능력 확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가드레일에서 첨단반도 생산능력 확장 규모를 5%에서 10%로 늘려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10년간 5% 확장은 사실상 반도체 공장 확장이 동결되는 수준이며,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생산능력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상실하게 된다.

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 등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대부분이 해당하므로, 중국 현지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제약될 수 있다. 한국은 첨단 공정 투자시 건당 10만 달러(1억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미국 상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미국은 2년마다 첨단반도체 기준을 다시 정할 수 있다.

미국의 수출통제가 연장되더라도 1년 단위로 중국 사업이 연명하는 것이므로, 특정 장비의 반입 목록에 한미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반도체 투자에서 제품 개발과 양산 결정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특히 D램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장비가 필수적인데 이를 반입할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철수나 범용(레거시) 공장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표4-2] 반도체와 과학법 가드레일

요건	주요내용	문제점
초과이익 환수	보조금 1.5억 달러 이상 받는 회사, 수익성 예상보다 높은 경우 보조금의 75%까지 이익 환수	초과이익 계산을 위해서는 회계장부 공개해야하므로 영업비밀 유출 우려
상세한 정보 제출	수익성 지표, 주요제품 제조원가, 제품별 생산량과 재고, 10대 고객정보, 생산장비, 원료명 등 정보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	기업 및 영업비밀 유출 유출 우려
시설접근 허용	반도체 생산시설에 미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 허용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저장장치인 메모리는 안보와 관련 없음)
중국공장 증설제한	보조금 받은 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제조능력 확장 불가(확장시 보조금 반환)	첨단반도체는 5% 범위에서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범용은 10%),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 제한하고 그 기준을 정기적으로 미국이 설정.

자료 : 각 언론사

다음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얻으면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하고 임금·작업규칙·보육시설 등의 부담을 져야 한다. 또

한 시설접근 허용과 상세한 정보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이러한 조항들은 과거 미국이 슈퍼 301조로 환율조정 등 비관세장벽을 만들어 한국, 일본 등에 보호무역을 강제했던 사례를 연상하게 한다.

미국의 불공정한 반도체법으로 한국, 대만 등의 메모리반도체 기술과 설비가 미국으로 이전되어, 세계 반도체 산업이 미국만의 생태계로 전락할 수 있다. 산업 특성상 반도체 산업은 제조시설과 설비를 공개하지 않으며 차세대 칩 공급, 웨이퍼 예상 수율, 판매가격 등은 영업비밀인데, 이를 미국 상무부에 엑셀 파일로 제출하면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 인텔 등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 흐름에서, EU도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430억 유로 규모의 유럽 반도체 지원법(ECA)을 제정한다. 유럽 현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유럽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현재 9%에서 2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미국의 반도체법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을 촉발시켜 한국의 수출이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2)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미국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마련된 법으로,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0년에 걸쳐 3,690억 달러를 투자하여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중고차 등 그린 생태계 전반에 걸쳐 세액공제 및 산업보조금을 지급한다.

IRA는 제조·생산·조립 설비를 미국으로 이동시키는 '리쇼어링'을 추진하는데,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터리에 대해

서도 핵심 부품과 광물의 일정 수준 이상을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고 미국이 기술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표4-3]에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보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등에 대한 공제조건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6년부터는 70% 이상, 그리고 2028년 80~90%, 2029년은 80~100%까지 올라간다.

[표4-3] IRA 배터리 핵심광물, 배터리 부품 최소비중 요구치

대상	세액 공제	지역 생산 요건	요구비율(%)						
			23	24	25	26	27	28	29
핵심광물 (니켈,리튬 등)	$3,750	①미국 ②미국과 FTA 체결국 ③북미에서 재활용	40	50	60	70	80	80	80
배터리부품 (양극재, 음극재)	$3,750	북미 제조, 조립	50	60	60	70	80	90	100

자료 : 조은교 외(2020)에서 재작성

미국은 시행 1년을 맞아, IRA 입법으로 인한 제조업 투자와 고용 확대 등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미국 밖에서 생산했거나 중국산 배터리나 광물을 사용한 한국 등 외국 전기차 회사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고, 미국에서의 비싼 인건비와 부족한 기술 인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미국의 IRA에 대응하여 유럽연합은 핵심 원자재의 역내 광물 채굴·가공과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핵심원자재법(CRMA), 그리고 탄소중립

기술 제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탄소중립 산업법(NZIA)을 추진하고 있어, 유럽 밖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프랑스판 IRA 입법안은 유럽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국을 위시로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한국 수출기업들은 공급망 제약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3) 생산기지 미국 이전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에 한국은 최대 투자로 응답하였다. IRA와 반도체법 도입 후 1년 동안, 한국은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20건을 발표하였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대기업들이 약속한 전체 미국 투자 규모는 300조 원이 넘는다.

삼성전자는 향후 20년간 250조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개를 신·증설할 계획이고,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7조 원을 투자해 2025년부터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에서 반도체 등에 2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표4-4] 해외직접투자(총투자) 국가별 동향(상위 3개)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미국	153.3	112.4	157.7	151.7	279.5	277.7
케이만군도	50.9	63.1	84.2	67.7	108.9	93.8
중국	32.2	48.1	58.7	45.1	67.3	65.9

자료 : 기재부 보도자료 '2022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2023.3.24)

기재부에 의하면 [표4-4]처럼,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20년 153억 달러에서 2021, 2022년 각각 280억, 278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인 반도체, 전기자동차, 전기배터리, 태양광 장치, 로보틱스, 바이오 의약품 등의 생산이 미국으로 이전하면 한국 국내 투자와 생산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

기업 차원에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배당금 수입을 늘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총생산이 감소하여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지생산에 따른 수출 물량의 감소', '기술이전으로 한국의 독과점 지위 약화', '국내 연관산업 쇠퇴(부품·소재 등)', '법인세 등 세수 감소', '고용감소 및 지역경제 쇠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수출주도성장의 쇠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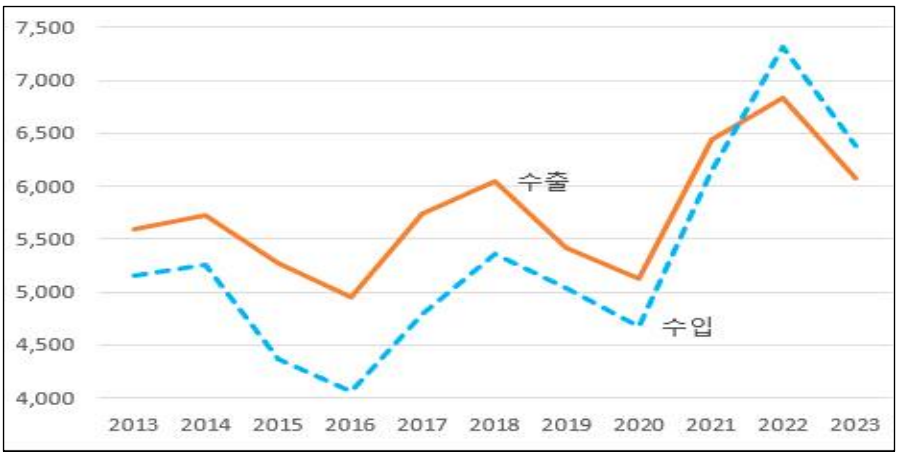
1) 무역수지 적자 지속

(1) 무역수지 동향

한국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6,000억 달러를 기록했고, 다시 코로라 충격을 넘어 2022년 6,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수출증가율은 점차 감소하여 2022년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미중갈등이 본격화되면서 2023년 9월 현재, 수출증가율은 1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수출감소로 무역수지도 2022년 3월 이후 15개월째 적자를 기록하였다. 2023년 하반기 무역수지가 소폭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전년 대비 수출·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이다.

[그림4-11] 한국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에서 재가공. * 2023년은 9월까지 통계를 연율계산

[표4-5] 한국 수출입 현황, 무역수지 (단위 : 억 달러, 전년대비 %)

년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률	
2013	5,596	2.1	5,156	-0.8	440
2014	5,727	2.3	5,255	1.9	472
2015	5,268	-8.0	4,365	-16.9	903
2016	4,954	-5.9	4,062	-6.9	892
2017	5,737	15.8	4,785	17.8	952
2018	6,049	5.4	5,352	11.9	697
2019	5,422	-10.4	5,033	-6.0	389
2020	5,125	-5.5	4,676	-7.1	449
2021	6,444	25.7	6,151	31.5	293
2022	6,836	6.1	7,314	18.9	-478
2023*	6,080	-10.5	6,373	-11.2	-263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는 증감율. * 2023년은 9월까지 통계를 연율계산

이는 신냉전 경제블록으로 수출주도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측면을 보여준다. [그림4-11]과 [표 4-5]는 최근 10년간 수출입과 무역수지 추이를 보여준다.

(2) 국가별 무역수지

IMF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상반기 무역수지가 약 398억 달러 흑자로 무역수지 규모로 세계 5위였는데, 2023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약 281억 달러(약 35조 원) 적자로 조사 대상 208개국 중 200위로 추락하였다. ([표4-6]의 합계 참조)

[표4-6] 한국의 주요국별 무역수지 격차 변화 (억 달러)

구분	2017 上	2023 上	증감
중국	167	-131	**-298**
홍콩	152	84	**-68**
아세안	191	118	**-73**
대만	-16	-31	**-15**
일본	-129	-105	**24**
미국	69	184	**115**
EU	0	3	**3**
인도	43	53	**10**
중동	-212	-377	**-165**
중남미	51	-41	**-92**
대양주	63	-68	**-131**
합계	398	-281	**-679**

출처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에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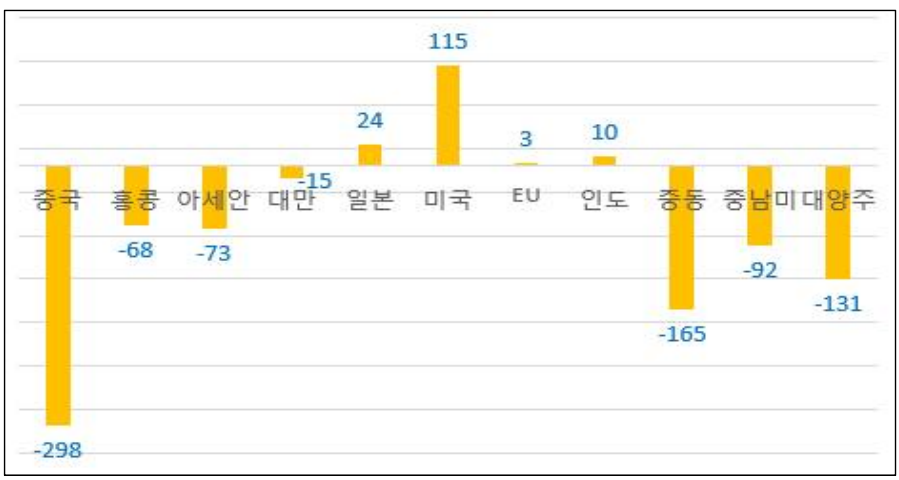
2017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 간 무역수지 격차를 주요 국가별로

비교하면 [그림4-12]처럼 구조적 변화를 알 수 있다.

중국, 아시안 그리고 중동, 중남미, 대양주 등에서 무역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였거나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었다.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의 경제침체 및 경제제재에 한국이 참여하면서 발생했고, 이것이 중화권(홍콩, 대만) 및 중국과 동조화된 아세안의 무역수지 감소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냉전의 영향으로 인한 무역의 구조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동·중남미·대양주의 무역수지 적자 및 감소는 석유 등 원자재 가격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구조적인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미국, 일본, EU, 인도 등에서는 무역수지 흑자 폭이 증가하였거나 적자 폭이 줄었다. 이는 미국 중심 경제블록, 그리고 중국 대체시장 모색 등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서방이나 신규시장이 과거 중국·아세안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4-12] 2017상반기~2023상반기 주요국 무역수지 증감폭 (억 달러)



출처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에서 재작성

2013년 이후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4-7]과 같다. 주요 국별 무역수지에서 단일 국가로는 대중국 무역수지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표4-7]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무역수지 추이(2013~2023) (단위 : 억 달러)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중국	628	552	469	375	443	556	290	237	243	13	-262
홍콩	258	255	289	312	372	440	301	291	352	251	168
대만	11	-6	-47	-42	-32	40	-5	-14	8	-20	-62
아세안	287	312	298	302	414	405	389	342	411	417	236
일본	-254	-216	-203	-231	-283	-241	-192	-209	-246	-237	-210
미국	205	250	258	233	179	139	115	166	227	274	368
EU	-74	-107	-91	-53	-32	-46	-30	-76	-23	-1	6
중동	-349	-842	-380	-278	-457	-644	-543	-301	-496	-906	-754
인도	52	75	78	74	101	97	119	70	76	98	106
중남미	180	176	147	102	110	84	60	-9	-26	-61	-142
대양주	-37	-10	24	3	78	-88	-93	-78	-202	-224	-48
전체	440	472	903	892	**952**	697	389	449	293	**-478**	**-562**

자료 : 산업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 * 2023년은 1~6월까지 통계를 연율계산

[그림4-13]에서 대중무역 추이를 보면 2013년 628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9년 미중 무역전쟁 시기 200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홍콩, 아세안 등은 무역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고, 대만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 EU, 인도 등은 무역수지 흑자 폭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을 보면, 대중 수입 비중은 변화가 미미하지만 대중국 수출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림4-13]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억 달러)

[그림4-14]에서, 한국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8년 26.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3년 19.7%로 감소하였다. 반면 중국의 대한국 수입 비중은 2015년 10.9%에서 2023년 6.2%까지 감소하여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림4-14] 대중국 수출입 비중 추이

자료 : 무역협회,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55호 재인용.
* 주 (2023년은 1~8월 누적)

(3) 품목별 무역수지 동향

최근 수출 감소는 반도체만이 아니라 나머지 14개 주요 품목도 자동차, 선박 등을 제외하면 비슷한 추이로 감소세를 보인다.

이는 신냉전과 경제블록, 글로벌 경제침체 등으로 한국의 대외의존적인 수출경제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표4-8] 주요 품목별 수출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17 상반기			2023 상반기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수출	259,920	17.3	100.0	294,194	-12.8	100.0
ㅇ석유제품	15,562	38.2	6.0	23,977	-19.1	8.2
ㅇ화 공 품	32,274	21.0	12.4	47,752	-14.0	16.2
ㅇ철강제품	15,552	20.5	6.0	17,546	-12.3	6.0
ㅇ비철금속	4,534	16.0	1.7	6,652	-21.2	2.3
ㅇ일반기계	22,467	11.7	8.6	25,695	1.6	8.7
ㅇ정밀기계	4,576	98.7	1.8	4,288	-20.0	1.5
ㅇ자 동 차	19,221	4.2	7.4	34,071	46.8	11.6
ㅇ자동차부품	11,138	-5.6	4.3	11,173	-1.8	3.8
ㅇ선 박 류	23,077	39.8	8.9	8,866	8.8	3.0
ㅇ전자·전기	86,887	17.0	33.4	84,810	-29.1	28.8
- 산업용전자	18,754	-10.6	7.2	16,482	-27.3	5.6
·무선통신기기	10,513	-23.5	4.0	6,922	-16.6	2.4
·컴퓨터	3,764	5.8	1.4	3,422	-61.1	1.2
- 가정용전자	4,238	-17.1	1.6	3,868	-8.3	1.3
- 전자부품	58,592	36.0	22.5	57,218	-33.8	19.4
·반도체	39,238	48.7	15.1	40,203	-38.6	13.7
·액정디바이스	8,754	12.1	3.4	1,840	-43.2	0.6
ㅇ플라스틱	4,087	7.9	1.6	4,749	-14.6	1.6
ㅇ섬 유 류	6,339	-0.1	2.4	5,412	-13.8	1.8
ㅇ생활용품	3,410	6.7	1.3	4,036	-6.5	1.4

자료 : 사업통상부 보도자료 수출입동향

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면, [표4-8]처럼 2017년 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17.3% 증가하였는데 석유제품, 화공품, 철강제품, 비철금속, 정밀기계, 선박류,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등 대부분의 품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부품 등만 감소하였다.

반면 2023년 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12.8%로 하락하였다. 석유제품, 화공품, 철강제품, 비철금속, 정밀기계,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플라스틱, 섬유류 등이 감소하였고, 자동차와 선박

류만이 증가하였다.

[표4-9] 주요 품목별 수입 비교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2017 상반기			2023 상반기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수입	220,135	21.5	100.0	322,335	-8.3	100.0
ㅇ농림수산물	16,293	11.6	7.4	23,160	-6.0	7.2
ㅇ광 산 물	59,516	45.1	27.0	99,977	-13.9	31.0
- 금속광물	7,171	22.0	3.3	11,750	-17.8	3.6
- 원 유	27,392	50.2	12.4	41,061	-17.5	12.7
- 석유제품	7,292	37.3	3.3	10,759	-21.9	3.3
- L N G	7,575	29.7	3.4	21,473	6.9	6.7
ㅇ화 공 품	23,384	12.8	10.6	36,693	-3.7	11.4
ㅇ섬 유 류	6,453	6.3	2.9	8,621	-4.3	2.7
ㅇ철강·금속	18,346	21.3	8.3	22,256	-15.8	6.9
- 철강제품	11,063	22.6	5.0	11,859	-12.0	3.7
- 비철금속	6,952	19.7	3.2	9,868	-20.1	3.1
ㅇ기 계 류	35,319	23.4	16.0	44,363	4.2	13.8
- 정밀기계	10,654	140.7	4.8	12,604	-1.6	3.9
- 수송기계	10,736	-6.9	4.9	16,259	12.4	5.0
·승용차	4,005	-9.7	1.8	3,876	15.2	1.2
ㅇ전자·전기	49,297	10.9	22.4	72,022	-7.2	22.3
- 산업용전자	16,785	8.8	7.6	20,233	-8.8	6.3
- 가정용전자	3,101	21.1	1.4	3,968	-8.5	1.2
- 전자부품	24,308	12.7	11.0	39,809	-8.5	12.4
·반도체	18,182	6.7	8.3	29,664	-14.0	9.2

자료 :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수출입동향

주요 품목별 수입을 보면, [표4-9]처럼 2017년 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수입 증가율이 21.5%인데 원유, 화공품, 철강·금속, 섬유제품, 정밀기계, 반도체, 산업용전자 등 대부분의 품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수송기계(자동차)는 감소하였다.

반면 2023년 상반기는 전년동기대비 수입 증가률이 -8.3%로 금속광물, 원유, 석유제품, 화공품, 섬유류, 철강·금속, 산업용전자, 가정용전자,

반도체 등 대부분이 감소하였고, 증가한 품목은 LNG와 수송기계(자동차, 항공기)뿐이었다.

요약하면 2017년 상반기는 수출과 수입 품목이 대부분 증가하였고 수출액 2,599억 달러, 수입액 2,201억 달러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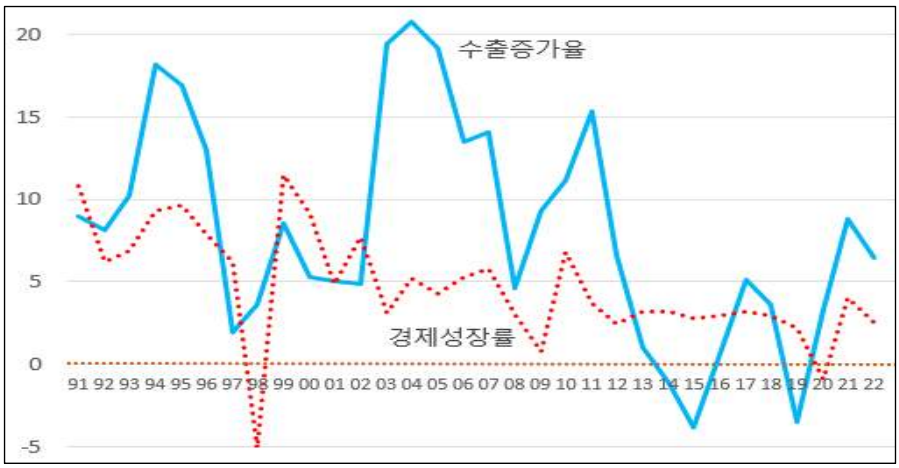
그러나 2023년 상반기는 수출과 수입 품목이 대부분 감소하였고, 수출액 2,942억 달러, 수입액 3,223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2017년 상반기는 수출주도성장이 이루어졌으나 2023년 상반기는 큰 폭의 무역적자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6~9월 사이 소폭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불황형 흑자 상태이다. 2023년은 반도체만이 아니라 모든 품목에서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자동차와 선박류만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신냉전 시기 한국 수출구조의 변화로 볼 수 있다.

2) 세계화의 쇠퇴와 수출주도성장의 위기

(1) 수출주도성장의 위기

한국은 세계화에 기반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분업체계를 형성하고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세계화의 쇠퇴로 최근 10년간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는 시대가 마감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진영 간 경제블록’과 ‘글로벌 무역침체’로 인해 교역조건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그림4-15]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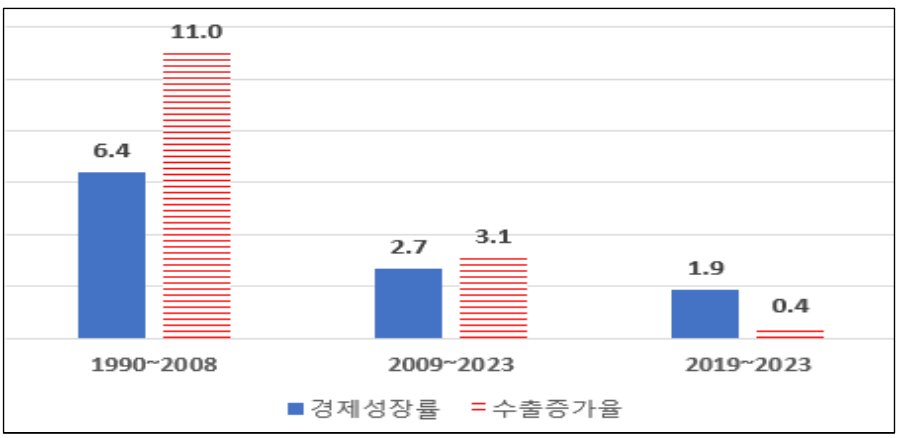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3개년 이동평균, * 2023년은 상반기 통계로 이동평균 구함

[그림4-15]를 보면 세계화 시대인 1990~2008년 사이 한국은 수출증가율(평균 11.0%)이 경제성장률(평균 6.4%)의 두 배로,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였다. 하지만 세계금융위기 이후 2009~2023년 사이 한국의 수출증가율(평균 3.1%)은 경제성장률(평균 2.7%)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그림4-16]에서 코로나 위기와 신냉전 보호무역이 발생한 최근 5년을 보면,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0.4%로 경제성장률 1.9%보다 낮다. 세계화의 쇠퇴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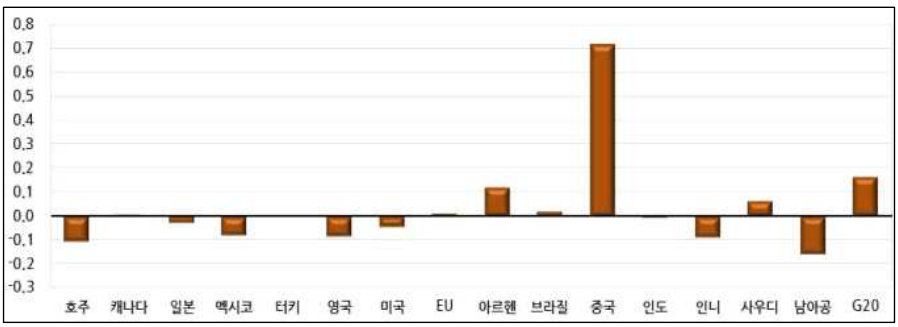
[그림4-16]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 시기별 비교(%)



자료 : 통계청에서 재작성, * 2023년은 상반기 통계

(2) 대중국 수출감소의 원인

[그림4-17] G20 경제성장률(t-1분기)와 한국 경제성장률(t분기) 간 상관계수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64)]
* OECD 국가별 분기 계절조정 전기비 경제성장률(2011년 1분기~2023년 1분기)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그림4-17]에서 보듯 다른 G20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의 1분기 전 경제성장률은 당해 분기 한국 경제성장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는 상호 높은 교역 연관성으로 경기 동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경제의 침체는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의 수출감소에서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러한 한중경제의 높은 동조성은 최근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대중국 수출감소의 요인은, 한편으로는 '중국의 산업고도화'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탈중국 정책'이다.

물론 대중 수출감소를 단기적·현상적으로는 반도체 수출단가 하락, 중국경제 침체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 구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64) 주원·노시연(2023), 현대경제연구원.

수년 전부터 산업고도화로 중국이 중간재를 자립하면서 석유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에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경제구조와 시장환경 변화에 맞추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여 중국이 필요한 제품을 공급해야 최대 수출처인 중국 시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주도 경제블록에 가담하여 화웨이 제재, 마이크론 관련 수출 제약 등 대중 경제제재에 앞장서면서, 핵심 반도체 장비나 부품의 중국 수출길이 좁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와과학법 등으로 중국 현지공장 투자 제약과 중국산 부품·광물 사용 제약으로 한국기업들의 중장기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주도 경제블록과 경제제재에 맞서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자립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은 갈수록 감소하게 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문제 발언 및 한미일 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반중 동맹에 가담하면서 보이지 않는 중국의 보복 조치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반중 분위기가 고조되고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중단이나 철수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중 무역적자는 향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이 미국의 칩4 동맹 등 경제블록에 참가하여 대중 봉쇄에 동참하면,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홍콩 포함)의 축소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표4-10] 삼성 중국법인 투자액 추이(2013~2022) (단위 : 억 달러)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신규투자액	47	53	49	24	18	37	58	54	57	22
누적투자액	168	221	270	294	312	349	403	457	514	536

출처 : 삼성 중국법인 사회책임보고서, 파이낸셜뉴스 재인용

실제 반도체와 과학법 도입 이후 [표4-10]처럼 삼성 중국법인의 대중국 투자액 규모가 2021년 57억 달러에서 2022년 22억 달러로 절반 이하로 급락하였다. 이는 사드 보복을 받은 2017년 이후 최저액이다. 바이든 출범 이후 한국이 첨단반도체 중국 제재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투자규모 급감의 원인을 삼성 중국사업의 핵심인 반도체 투자 축소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국 시안 공장에서 96~128 낸드가 제조되는데 이는 삼성전자 전체 생산의 40%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첨단 낸드의 공정 전환을 위해서는 공장을 수시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현재 공정 전환 및 증설에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낸드 투자가 줄면서 전체적인 중국 투자액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 2022년 8월 반도체와 과학법 및 대중 장비수출 규제 등으로 삼성·SK 등 반도체 기업들은 대중국 투자를 제한했다. 현재 반도체 장비 수출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1년 유예조치를 받았지만, 극자외선 노광장비 등 첨단장비 반입은 금지된 상태이다.[65]

(3) 대중국 수출 감소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수입 순위는 [표4-11]처럼 2019년 1위에서 2023년 5위로 급락하였다. 중국의 한국산 수입은 2023년 7월 현재 전년

65) 파이낸셜뉴스(2023.9.11.)

동기대비 −24.7%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중국 수입 상위 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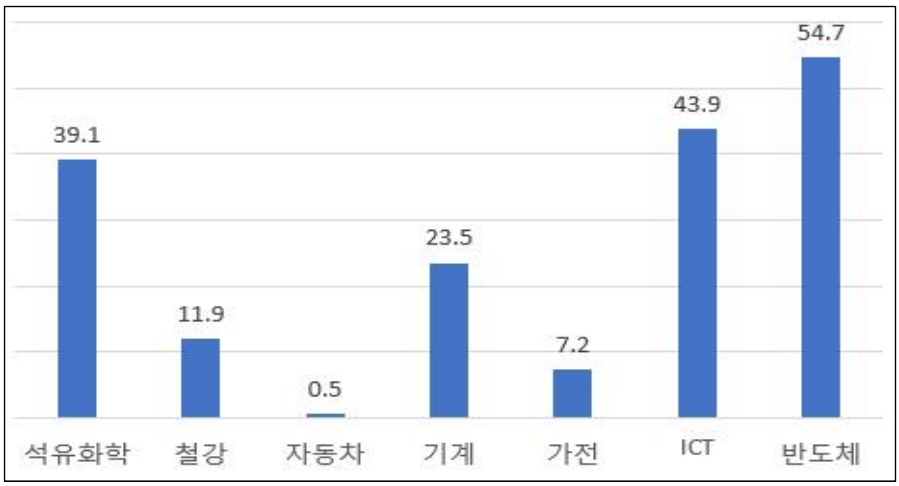
[표4-11] 중국의 수입시장 상위 5개국 비교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1~7월	
						증감률
총수입	20,686	20,800	26,788	27,155	14,556	-7.6%
대만	1,728	2,020	2,515	2,402	1,087	-23.8%
미국	1,223	1,350	1,795	1,777	1,000	-4.5%
호주	1,195	1,149	1,622	1,407	918	10.5%
한국	**1,736 (1)**	**1,734 (3)**	**2,136 (2)**	**2,002 (2)**	**901 (5)**	**-24.7%**
일본	1,715	1,760	2,062	1,848	912	-16.6%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중국 해관총서 통계 기준. ( )는 순위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그림4-18]처럼 한국의 주력 산업인 ICT 및 반도체 산업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고, 석유화학(39.1%), 기계(23.5%) 등도 여전히 중국의 핵심 시장이다. 반면 자동차(0.5%), 가전(7.2%), 철강(11.9%)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림4-18] 한국 산업별 대중국 수출의존도 (2022년, 홍콩포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66] 재인용, * ICT에 반도체 포함됨.

2022년 반도체 수출의 중국시장 의존도는 54.7%이고 ICT도 43.9%에 달해, 중국시장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국의 산업경기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2023년 하반기에도 현재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수준(1~7월 누적 -25.9%)이 지속될 경우, 다른 요인들이 변화가 없다면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1.2%P 하락시키는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대중국 수출감소 요인에 따른 GDP 감소 규모는 24.3조 원이다. 2023년 중 추정된 실질 대중국 수출감소 규모는 2022년 실질 GDP 1,969조 원 대비 1.2%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2023년 소비, 투자, 중국 이외의 수출 등의 다른 부문이 2022년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대중국 수출감소 요인으로만 2023년 경제성장률이 1.2%P 하락한다는 것이다.[67]

66) 주원·노시연(2023), 현대경제연구원. p3
67) Ibid. p6

한국경제는 과도한 수출의존의 축소와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중국 교역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 속에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을 위시로 한 급격한 수출감소에 대한 지적은, 수출주도성장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 주도 경제블록에 편향적인 가세가 대중국 수출감소의 하나의 원인이므로, 중립적인 통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은 어느 특정 나라에 편향되지 말고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다자간 무역 관계를 확대해야 한다.

3. 내수경제의 침체

신냉전으로 파편화되고 블록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경제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첫째, 경제블록과 경제제재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제약되어 교역이 침체하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둘째, 연준의 금리인상과 주변국 경기침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수입물가 폭등과 환율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수천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는, 달러체제로 이득을 보는 금융세력에게는 유리하지만, 운용수익률이 낮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부담이 된다.

셋째, 고금리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폭발시킬 수 있다. 현재도 가계부채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은 소비를 저하시켜 경제성장률을 잠식하고 있다.

넷째, 경제침체시 재정지출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나, 윤 정부는 신자유주의 철학에 근거하여 작은정부를 추진하고, 복지재정보다는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므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1) 인플레이션과 실질소득 감소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중국의 값싼 공산품 제공과 세계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어 낮은 물가수준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누렸다. 그러나 '전염병 창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부품 등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이

차단되어 2022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특히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가격 폭등은 소비자물가지수를 4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시켰다.

경제제재로 에너지 공급난이 발생하자 유럽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에너지를 수입하는 미국, 일본, 한국 등도 타격이 컸다.

미국은 유럽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고, 가격이 비싼 미국산 에너지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경제제재 참여를 압박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은 줄었지만, 중국·인도·튀르키예 등 다수 국가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 러시아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미국과 EU의 경제제재는 △금융결제 차단 △적대국에서 수입금지 및 가격상한제 도입 △미국·서방의 첨단제품 및 기술이전 통제 △설비투자 금지 등으로 추진되는데, 그간 이란,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레바논 등은 큰 타격을 받았다. 반면 최근 러시아, 중국 등은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중립적인 제3세계 등으로 교역을 확대하면서 미국 주도 경제블록에 대응하고 있어 타격이 크지 않았다.

한국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호주 및 중동산 에너지로 대체하였는데,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가 6.3%까지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는 2023년 들어 감소하다가 유가 상승으로 10월 다시 3.8%로 뛰었고, 근원물가지수는 여전히 3.9%를 기록 중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경제제재와 경제블록으로 인해 교역 침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등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은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경제침체를 불러온다. 전기·가스요금, 교통요금, 외식비 등의 인상으로 2023년 2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이 2006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을 보면,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79만 3천 원으로 전년동

기대비 0.8% 감소했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 3.2%를 반영하면 2분기 실질소득은 3.9%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은 383만 1천 원으로 2.8% 줄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질임금 인상률도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2023년 상반기 노동자 1인당 평균 실질임금은 한 달 355만 8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줄었다. 해당 기간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보다 2.4% 오른 393만 8천 원인데, 물가상승률 4.0%를 반영하면 사실상 임금이 감소하였다. 실질임금은 2022년 2분기(-1.1%)부터 시작해 올해 2분기(-0.3%)까지 5분기 연속 감소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2.5%에 그쳐 시급 9,860원으로 내년에도 1만 원에 이르지 못한다.

대외의존성이 큰 한국경제가, 글로벌 수입물가 상승과 수출감소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되고 있고. 실질소득 감소로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2) 가계부채로 성장 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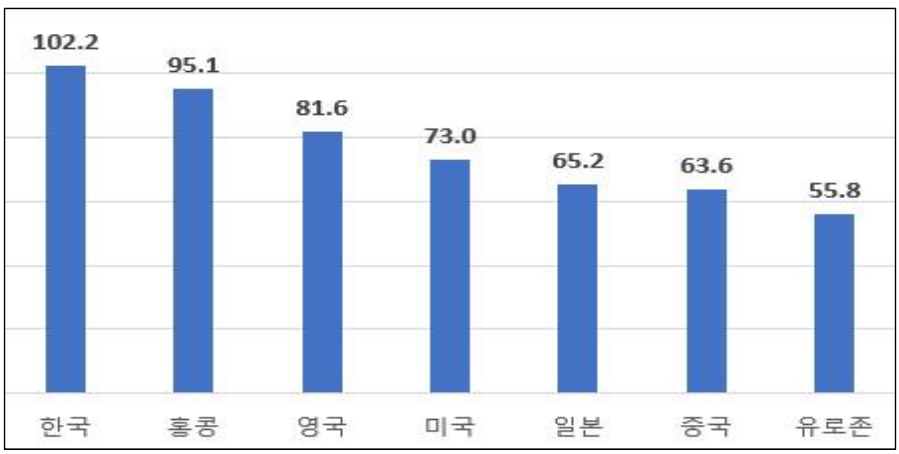
저금리 시기 글로벌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의 금융지대를 형성하였고, 한국의 역대 정권들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거품을 키워 왔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00년 중반 이후 규제 완화로 계속 확대되어, [그림4-19]처럼 2023년 1분기 기준 GDP 대비 102.2%[68]로 OECD 회원국 중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68) 여기에 전세대출을 제외된다, 전세대출은 한국만 특이한 제도이므로 국제 비교가 어렵다. 1,000조 원에 달하는 전세대출을 포함하면 한국의 가계부채(GDP 대비 157%)는 세계 1위이다.

GDP 대비 80%를 넘으면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은 전세대출을 포함하면 실제 가계부채가 GDP의 157%나 된다. 반면 선진국들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림4-19]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 : 국제금융협회(2023.1분기)

금리인상의 여파로 2022년부터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2023년 'DSR 50년 만기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특례역전세론', '임대인에 DTI 60% 적용' 등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의 '최근 4년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가계대출은 2022년 말 대비 0.7% 감소해 1,844조 원이었으나,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858조 원으로 전년 12월 말 대비 2.4%나 늘어났다.

또한 2023년 2분기말 자영업자 대출은 1,043조 원으로, 연체율이 1.1

5%로 1분기(1.00%)보다 0.15%포인트 높아졌는데 8년 만에 최고치이다.

한편 주택시가총액은 2021년 6,551조 원에서 2022년 말 6,209조 원으로 342조 원(-5.2%) 감소하여,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치를 기록했다.

그동안은 빚을 내도 저금리였고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팔고 나올 수가 있었으나, 고금리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매매 수요도 급감하여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자산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는 자산가격 보호 및 경기부양을 우선하여, 대출 완화정책을 지속하였다.

가계부채는 아래와 같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침체를 초래하며 결국 경제위기로 이어진다.

첫째, 부동산 지대수익에 자금이 몰리면 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투입되지 못한다.

둘째,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과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률을 잠식한다.

셋째, 고소득자일수록 금융 접근성이 용이하여 매매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된다.

넷째, 가계부채 폭탄이 제때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경제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다섯째, 중앙은행은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보장하고, 위기 때는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한다. 특혜를 받는 민영화된 금융기관은 서민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최대의 금리 수익을 올렸다. 한국에서 부동산은 금융화되어 금융기관과 부자들을 위한 지대가 되었다.

3) 달러 체제에 종속된 통화·재정 정책

(1) 물가안정과 통화·재정 정책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중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감소 추세이나 9월 이후 유가 인상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 기준이 되는 근원물가지수는 2023년 7월 미국 4.8%, 유로존 6.6%, 한국 3.9% 등으로 목표치인 2.0%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현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등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목표제[69]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물가상승률을 2%로 되돌릴 때까지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금리인상은 일반적으로 개인 소비나 기업 투자와 같은 수요 쪽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공급 쪽에 문제가 생겨서 물가가 오를 때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물가상승은 주로 에너지, 식량, 원자재를 포함한 국제적인 상품 공급의 부족에서 빚어진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주요 나라의 물가상승은 외부에서 '수입'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공급발 인플레이션에서 금리인상이 물가를 잡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70]

---

69)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는 중앙은행이 중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통화정책 운영체제이다. 1990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적정성장, 완전고용과 같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그러나 금융자유화가 진전되면서 물가안정목표제가 채택되었다.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2%이다.

70) 임수강, ‘IMF 요구로 도입된 물가안정제, 노동자를 옥죄고 있다’, 프레시안(2023. 5.4.)

한국은 외환위기 때 IMF 요구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포함된 '재정 건전화'와 '정부 보조금 축소'와 관련된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신자유주의 작은정부를 지향하여, 중앙은행의 목표에서 '고용 확대', '경제성장', '재정 지원', '불평등 완화' 등을 제거하고 '물가안정'만을 남긴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중앙은행을 국민경제로부터 떼어 놓았다.

신자유주의 금융정책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을 추진하고 금융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한다. 민간 은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채 발행시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직접 국채를 매입하지 못하게 하고 시중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하게 한다. 민영화된 시중은행에서 정부와 시민이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내게 하여 민간 은행의 이익을 보장한 것이다. 이처럼 중앙은행은 국민경제보다는 물가안정에 집중하고, 위기 때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융권과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채권(대부분의 채권은 상위 1%가 보유) 가격 하락을 막아준다. 중앙은행에서 풀린 돈은 자산시장(부동산과 채권)으로 몰려 거품이 누적되고, 노동소득보다 블로소득에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여 양극화가 심화된다. 노동소득의 상당 부분은 금융 이자, 부동산 임대료 등 지대수익으로 흘러가므로 가계소득은 정체된다. 실제 2022년 가계부채 위기와 경기침체에도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렸다.

신냉전은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강화하여 금융과 실물 사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2) 환율변동과 외환보유고

달러 체제에서 주변국은 기축통화국인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종속된

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화가치 하락', '수입물가 폭등', '외국자본 이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달러를 남발해도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많이 사용하므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위기를 상당 부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원화를 무제한 찍어낼 수 없고, 주기적인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달러표시자산 등)가 필요하다.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데 '조달금리와 운용금리 사이 이차 손실(금리 차이)', '환율 조정' 등으로 거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

외평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수십조 원의 마이너스 순자산 상태가 이어지면서 자본잠식 상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1998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손실액이 17조 8,300억 원이다. 2021년 금융시장 호황으로 이례적으로 12조 7천억 원의 순자산을 기록했으나 한국투자공사의 투자 손실[71]로 1년 만에 순자산이 2조 3,738억 원으로 축소되어 다시 자본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늘려가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달러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 미국은 주변국들이 달러표시자산을 많이 보유하면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차 손실(금리 차이), 외환평가손실 등으로 손해를 본다.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금리가 낮지만, 한국이 발행한 국고채는 수요가 적으므로 이자가 높다. 따라서 이차 손실(국내와 외국의 이자율 차이에 따른 손실)이

71) 한국투자공사는 한국은행에서 외화보유액(전체의 25%)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한 주식·채권·사모펀드 등의 가치가 급락하여 2022년 19조 3,51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발생한다. 또한 과잉 발행으로 미국 국채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외환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021~2023년. 최근 2년간 강달러와 원화가치 하락으로, 외환당국은 환율방어에 680억 달러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2023년 10월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28억 달러로 세계 9위로 하락하였다.[72] 여기에 미국 국채가격 하락으로 인한 미실현 손실 등을 반영하면 실제 외환보유고는 더 줄어들 것이다.

다음으로 외평기금 확대는 금융자산의 증가로 이어져 금융세력과 자산계급에게 유리하다. 외평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국고채 발행 증가, 외화자산 매입에서 발생한 통화량의 증가를 중화하기 위한 통화안정채권의 발행, 외평기금을 통한 대외 자산운용의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이 늘어난다. 금융자산(주식, 채권, 예금 등)이 늘어나면 배당과 이자가 증가하여 자산소유자가 이득을 본다. 또한 외환보유고가 많아야 고환율 정책을 쓸 수 있으므로 수출 대기업도 이익을 본다.

결국 '달러 유통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이해', '고환율을 유지하려는 국내 수출 재벌들의 이해', '금융자산의 성장을 바라는 금융세력의 이해'가 맞물려 외평기금에 모이면서 그 규모를 끝없이 증대시키고 있다. 이는 외평기금 혈세 투입과 양극화 확대 등으로 국민경제에는 손실이 된다.[73] 미국은 달러패권 유지를 위해 신냉전을 추진하여, 미국 주도 경제블록에서 기존 금융시스템이 더욱 강화된다.

(3) 공공서비스와 조세·재정정책

72) 양경숙 의원실(한국은행 자료 제출).
73) 김성혁·김수강·박용석·김장호(2022), 『달러제국과 한국경제』, 민플

복지국가는 정부가 충분한 재정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주택, 교육, 의료,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를 무상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데, 화폐는 국가부채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금을 표시하기 위한 공공재[74]로 탄생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금융 투기가 아니라 공익 목적에 신용을 확대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초기 중앙은행은 엄격한 금융규제하에 공익성을 우선하고, '국민경제 발전', '고용창출' 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하에서 헤게모니를 잡은 금융자본은 정부의 공적 기능을 제거하고, 자산계급과 금융주주 등 지대추구 집단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작은정부를 지향하여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을 제거하고,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였다. 그 결과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재정은 축소되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5년간 세수 감소 효과는 총 72조 4천억 원이고, [표4-12]와 같이 2028년까지 6년간 감세 효과는 총 89조 원에 이른다.

74)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공급하는 특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중앙은행은 금본위제에서는 금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했으나, 법정화폐(불태환 화폐) 시대에는 국채를 담보로 한다. 법정화폐는 정부의 세금 징수권 즉 그 나라 경제력을 기반으로 보장된다.

[표4-12]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년간 세수효과 (단위: 조원)

구분	22년 세법개정안	23년 반도체 등 세액공제 확대	23년 세법개정안	합계
소득세	-18.2	0	-3.2	-21.4
법인세	-34.7	-13	0.7	-47
증권거래세	-9.4	0	0	-9.4
종합부동산세	-9.8	0	0	-9.8
기타	-1.3	0	-0.5	-1.7
합계	-73.4	-13	-2.9	-89.3

자료 :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 327조(2023.7.27.)

기재부는 정부가 세율을 낮추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므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그림4-20]에서 보듯 올해 7월까지 걷힌 세금은 전년보다 43.4조 원 감소하였고, 2023년 한해로 보면 세수 목표 400조 원에서 59.1조 원의 세입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4-20] 2022년과 2023년 1~7월 국세수입 비교 (단위: 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재정은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및 성장'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경제안정 및 성장만이 중시되어 왔다.

역대 정부들은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재정건전성을 명시적으로 지향해 왔다. 그 결과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기준으로 2019년 공공부문 고용은 전체 취업자의 8.1%에 그쳐, OECD 국가 평균(17.9%)에 훨씬 못 미치고 신자유주의 원조 국가인 영국(16.0%), 미국(14.9%)과도 차이가 크다.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GDP 대비)은 2019년 12.3%로 OECD 국가 평균(20.1%)과 현격한 차이가 난다.

반면 국방예산 비중(GDP 대비)은 세계 4위 수준이며 경제활동 예산(R&D·SOC·에너지 등) 비중도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75]

보수적 재정 운용을 주도해온 IMF마저 재정 긴축이 저성장과 불평등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했음을 인정한 바 있고,[76] 미 재무장관(옐런)도 2021년 취임 당시 과감한 재정 투자와 경기부양을 통해 국가 부채의 혜택이 비용을 초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및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는, 미국을 넘어 일본·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 재정 긴축이 후퇴하고 재정 확장이 보편적 추세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냉전으로 인한 경기침체', '산업구조 전환(디지털화·탈탄소화)' 등으로 고용위기가 확대되고, 사회안전망 불안 속에서 주요 사회

75) 김형남·박용석·이상민(2023),『정부재정 지출구조와 부문별 지출 비교연구』, 민주노동연구원

76) 2016년 5월 IMF의 조너선 오스트리(Jonathan Ostry) 등은 「Neo-liberalism : oversold(과잉판매되었나)?」 보고서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재정 건전화(재정 긴축 등)가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출했다. 조너선 오스트리는 이후 2020년 「IMF, Confronting Inequality)(불평등에 맞서다)」 보고서를 통해 불평등 극복을 위한 재정 확장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지표(출산율·자살률·노인빈곤율)들이 위기 상황을 알리고 있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1.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 준칙과 같은 과거 유물을 폐기하고 확장 재정을 민생 안정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에 편승하여 이념대결을 추구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극단적인 재정건전성과 긴축을 추구하여 교육·주택·의료·돌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빚이나 민간보험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으며, 누진적 소득세 체계나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외면하고 있다.

올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6%(전기대비)인데,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에서 정부의 소비와 투자가 모두 줄어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0.5%p나 끌어 내렸다. 물가 폭등과 복합위기 상황인데도 기재부는 지출증가율 2.8%인 2024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저수준이다.

Ⅲ. 시사점

한국경제는 최근 3년 연속 OECD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OECD 국가 성장률 평균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표4-13]과 같다. 특히 올해는 일본이 1.8%로 한국을 추월할 예정이다.

[표4-13] OECD 평균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

년도	2021	2022	2023	2024*
OECD : 한국	5.8 : 4.3	2.9 : 2.6	2.7 : 1.8	2.9 : 2.1

자료 : 각 언론사. * 2023, 2024년은 전망치

실제 2022년 한국의 GDP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경제규모 순위도 11위에서 13위로 두 단계 하락했다. 세계은행의 경제규모 상위 100개국 GDP 자료를 보면, 2022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6,652억 달러로 2021년 대비 8%p 감소하였다. 금융위기인 2009년 9.9%p 감소 후 가장 큰 폭이다.

이러한 경제침체는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감소', '대중국 수출감소', '반도체 등 소수 품목에 의존한 수출경제' 등이 주요 원인이다.

세계 경제의 변화를 보면, 한편으로는 신냉전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일극 패권이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신냉전 시대 외부 변화에 좌우되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으려면, 한국은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내수경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진영 간 경제블록이 구축되는 시기, 한국은 '핵심 산업의 자립화', '확장적 재정정책', '중립적인 통상정책', '자주적 통화정책' 등으로

자립경제 기반을 강화해야,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1. 핵심 산업의 자립화

보호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핵심산업의 자립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한국이 여전히 수출주도 대외의존경제를 고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9%로 OECD 38개국 중 32위이고, 식량자급률은 44.4%이다. 식량안보지수는 70.2점으로 OECD 34위이다.

소재·부품·장비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주요국 대비 첨단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경쟁력은 정체되어 있으며 장비는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는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 소비량, 탈탄소 등으로 측정하는 에너지 지속가능성은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따라서 한국은 에너지의 전환과 자립을 동시에 추진하여,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와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산업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은 전쟁, 전염병, 경제제재, 기후변화, 독점가격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중국의 요소수나 갈륨·흑연·희토류 등의 공급중단 사태가 언제들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 차원을 넘어서 경제안보와 산업주권 차원에서 핵심산업 자립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주요 산업 자립화는 미국 등으로 첨단산업 이전을 조정하여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강화하여 고용안정에 기여한다.

2. 확장적인 재정정책

한국의 공공부문은 지난 20년간 극단적인 시장화 전략으로 민영화, 민간위탁, 민간보험 증가 등으로 보편적 공공서비스가 축소되었다.

2021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8.0%로 OECD(평균 33.5%) 38개국 중 아래에서 9위이고, 2019년 기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2.3%로 OECD 평균(20.1%)의 61.2%에 불과하다(하위 3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가계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저소득 가구일수록 지원 효과가 크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2021년 시장소득은 1,323만 원인데 공적 이전소득은 600만 원으로, 가구소득 중 공전 이전소득의 비중이 45.4%이다. 한편 소득 5분위(상위 20%)의 시장소득은 1억 4,973만 원인데 공적 이전소득은 528만 원으로, 가구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3.5%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공적 이전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전 국민에게 교육, 의료, 주택, 돌봄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가 필요하며, 재정에서 국방비와 산업·기업 부문 지출 비중을 줄이고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늘려야 한다. 공적 이전소득 및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는 노동자·자영업자·취약계층(노인, 청년, 여성 등)의 지불

능력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것이다.

노동자들의 관점에서는 공공서비스 확충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복지 확대 및 공적 이전소득 증가로 실질소득이 상승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수 있다.

3. 중립적인 외교통상 정책

한국은 미국 주도 프렌드 쇼어링에서 탈피하여 중립적인 외교통상 정책을 펼쳐야 한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경쟁국을 고립시키고 보조금 지급 산업정책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하면서 국제규범을 선도하려 하고 있는데, 한국이 어느 일방에 가담하면 교역 시장이 축소된다. 한국과 직접적인 대립관계가 없는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경제제재에 우리가 앞장설 이유가 없다.

세계적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이 약화되고 있고, 브릭스 등 새로운 대안 경제협력체가 부상하고 있다. 한국도 브릭스에 가입하고 국익 위주로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생산지인 중국,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강국인 러시아 등과 자주적 입장에서 교역해야 하며, 모든 나라와 호혜평등한 외교통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경협과 통일경제도 경제자립과 내수 확장 차원에서 복원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와 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중립적인 통상정책은 수입물가 안정, 국내산업 보호 등을 추진할 수 있어 고용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된다.

4. 자주적인 통화정책

달러 의존을 축소하여 달러 체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연준의 자산이 약 1,000% 증가했으나 GDP 증가는 100% 증가에 그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괴리되고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위기 때마다 달러를 남발하여 천문학적인 부채가 누적되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서 달러의 지위도 약화되고 있다. 무역에서 지역통화 사용이 늘어나고 브릭스 기축통화 등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나라 통화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달러 체제에서는 한국은 환율변동을 막기 위해 연준의 금리정책에 따라야 하며 수천 억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필요하다.

미국은 달러 남발에도 인플레이션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고금리, 강달러, 경기호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최근 2년간 환율방어에 680억을 쏟아 부었다. 미국의 호황에 수출증가 등 한국의 동반성장도 사라졌다.

한국이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 통화주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중앙은행이 고용안정과 경제성장 등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자와 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자주적 통화정책은 외환보유고 등으로 소요되는 국세를 줄이고, 고환율에 따른 수입물가 폭등을 완화시키므로 실질소득 상승에 기여한다.

참고문헌

〈2장〉

네그리, 안토니오. · 하트, 마이클. 2001. 『제국』, 이학사.

레닌, V.I. 1988. 『제국주의론』, 백산서당.

레닌, V.I. 2017.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두번째테제.

레닌, V.I. 2018. 「서문(1915.12)」, 부하린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책갈피.

바란, 폴. 1984. 『성장의 정치경제학』, 두레.

브루어, 안소니. 1984.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 사계절.

스위지, 폴. 2009. 『자본주의 발전의 이론』, 필맥.

자골로프, N.A. 1989. 『정치경제학 교과서 Ⅰ-3』, 새길.

전국노동자정치협회. 2023. 『맑스주의와 현대제국주의』, 밥북.

정성진. 2003. 「21세기 미국 제국주의: 맑스주의적 분석」, 『사회경제평론』 제20호.

제르바우도, 파울로. 2022. 『거대한 반격』, 다른백년.

초스도프스키, 미셸. 1998. 『빈곤의 세계화』, 당대.

프라샤드, 비자이. 2022. 『신냉전에 반대한다』, 두번째테제.

하먼, 크리스. 2009. 『크리스 하먼의 새로운 제국주의론』, 책갈피.

하비, 데이비드. 2016. 『신제국주의』, 한울아카데미.

허드슨, 마이클. 2023. 『문명의 운명』, 아카넷.

Alami, I., Alves, C., Bonizzi, B., Kaltenbrunner, A., Koddenbrock, K., Kvangraven, I.H. and Powell, J. 2023. International financial subordination: a critical research agenda,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30(4).

Caraballo, J.G. and Jiang, X., 2016, Value-added erosion in global value chains: an empirical assessment, Journal of Economic Issues, 50(1).

Cope, Z. and Ness, I. 2022.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mperi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Dos Santos, T., 1970, The structure of depen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60(2).

Howard, M. and King, J. 1989. A History of Marxian Economics Volume 1, 1883-1929, Macmillan.

Hudson, M. 2021. Super Imperialism, Third Edition, ISLET.

Kvangraven, I.H. 2021. Beyond the stereotype: restating the relevance of the dependency research programme, Development and Change, 52(1).

Kvangraven, I.H. 2023. Dependency theory: strengths, weaknesses, and its relevance today, in Reinert, E.S. and Kvangraven, I.H. (eds). Uneven Economic Development, Edward Elgar.

Madriana, A. and Palestini, S. 2021. Dependent Capitalism in Contemporary Latin America and Europe, Palgrave Macmillan.

Noonan, M. 2017. Marxist Theories of Imperialism, I.B.Tauris.

Palley, T. 2022. Theorizing dollar hegemony: the political economic foundations of exorbitant privilege, Review of Keynesian Economics, 10(4).

Panitch, L. and Gindin, S. 2004. Global capitalism and American empire, in Panitch, L. and Leys, C. (eds). The New Imperial Challenge Socialist Register, Merlin Press.

Patton, M. 2016. US share in the global economy declines almost fifty percent, available at https://www.forbes.com/sites/mikepatton/2016/02/29/u-s-role-in-global-economy-declines-nearly-50/?sh=158d5da15e9e.

Ricci, A. 2018. Unequal exchang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51(2).

Ricci, A. 2021. Value and Unequal Exchange in International Trade, Routledge.

UNCTAD. 2016.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6, UN.

〈3장〉

가와시마 신·모리 사토루(2021), 이용빈 옮김, 『미중 신냉전?』, 한울.

강두용(2023),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KIET 산업경제 이슈』, KIET.

구본우, 「미중 무역분쟁과 지구적 가치사슬 : 지적재산권 체제의 동

요」, 『경제와 사회』, 2020.

그레이엄 앨리슨(2018), 정혜윤 옮김, 『예정된 전쟁』, 세종.

김정호(2023.8.31.), 「국제 '이중권력'의 성립과 다극질서의 진입」, 노동자독립신문 울산 함성.

김흥규(2009), 「미·중 전략·경제대화 분석: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함의와 더불어」, 『주요 국제 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데이비드 하비(2007), 최병두 옮김,『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

로버트 브래너(1998), 전용복, 백승은 옮김, 『혼돈의 기원』, 이후.

마이클 허드슨(2022), 조행복 옮김, 『문명의 운명』, 아카넷.

마틴 하트 랜즈버그(2005), 임영일 옮김,『중국과 사회주의』, 한울.

배영자(2016), 「미중 패권 경쟁과 과학기술혁신」, 『국제·지역연구』 25권 4호, 2016 겨울.

쉬잔느 드 브뤼노프(1778), 신현준 옮김, 『국가와 자본』, 새길.

에릭 헬라이너(1994) 정재환 옮김, 『누가 금융세계화를 만들었나』, 후마니타스.

원톄쥔(2016), 김진공 옮김,『여덟 번의 위기: 현대 중국의 경험과 도전, 1949-2009』, 돌베개.

조반니 아리기(2007), 강진아 옮김,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 길.

존 J. 미어샤이머(2017), 이춘근 옮김,『강대국정치의 비극』, 김앤김북스.

차이팡·장쇼우징(2021), 김애화·김민정 옮김.『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구축』. 역락.

필립 암스트롱 외(1993), 김수행 옮김,『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동아

출판사.

홍호펑, 하남석 옮김(2022), 『제국의 충돌』. 글항아리.

大橋英夫(2020), 『チャイナ·ショックの經濟學:米中貿易戰爭の檢證』, 動草書房.

Bown, Chad(2022), "Four Years into The Trade War, Are the US ans China Decoupling?",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ctober 20.

Budd, A.(2021). "China and imperialism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Socialism*.

Coe, Neil M.&Yeung, Henry Wai-Chung(2015), *Global Production Networks: Theorizing Economic Development in an Interconnected World*, Oxford University.

Christopher A. McNally(2020). "Chaotic mélange: neo-liberalism and neo-statism in the age of Sino-capit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7(2).

European Chamber(2020), "Decoupling: Severed Ties and Patchwork Globalisation",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in partnership with MERICS(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Fergson N.&Schularick M.(2007), "Chimeric and the Gilobal Asset Boom", *International Finance*, vol.10. Issue 3.

Guglielmo Carchedi&Michael Roberts(2019), "The Economics of Mod ern Imperialism", Historical Materialism conference.

James X. Zhan(2021), "GVC transformation and a new investment la ndscape in the 2020s: Driving forces, directions, and a forward - looking research and policy agenda", UNCTAD. *Journal of I nternational Business Policy.*

Kyle Handley, Fariha Kamal Ryan Monarch(2020), "Beyond Imports: The Supply Chain Effects of Trade Protection on Export Growth", FEDS Notes. https://doi.org/10.17016/2380-7172.2751.

Li Wei(2019), "Towards Economic Decoupling? Mapping Chinese Discourse on the China-US Trade War",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Michael P. Dooley, David Folkerts-Landau, Peter Garber(2004), "The revived Bretton Woods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Finance and Economics.*

Michael Roberts(2023), "Globalisation waves and profitability", IIPPE.

Pan, C. & Kavalski, E. eds(2022), *China's Rise and Rethink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ristol Univ Press.

Sean Kenji Starrs(2023), "China's Techno-Dependency on the Core: Taking US Imperialism Seriously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my", IIPPE.

Sergio Cámara Izquierdo(2023), "The weakness of the post-neoliberal Restructuring in the USA and the Challenges to its World Hegemony", IIPPE.

Stephen Roach (2014), *Unbalanced: Codependency of America and*

China, Yale University press.

Tara Beeny, Jennifer Bisceglie, Brent Wildasin, Dean Cheng(2018), "Supply Chain Vulnerabilities from China in U.S. Feder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Tomas Rotta&Rishi Kumar(2023), "Was Marx Right?", IIPPE.

UNCTAD(2013), *Global World Investment Report: Value Chains and Development*, unctad.org.

UNCTAD(2022), *World Investment Report*, unctad.org.

U.S. Department of Defense(2021). *Global Posture Review*.

USTR(2022), *2022 Trade Policy Agenda and 2021 Annual Report*,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Vasudevan Ramaa(2009), "Dollar Hegemony, Financialization, and the Credit Crisis",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ume 41, Issue 3.

White House(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18.

White House(2020). *Unites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te House(2021),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100-day Review under Executive Order 14017*, June.

White House(2022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ctober 12.

White House(2022b), *Fact Sheet: CHIPS and Science Act Will Lower Costs, Creat Jobs, Strenthen Supply Chains, Counter China*, August 9.

World Bank(2021), *World Bank Open Data*. https://data.worldbank.org/?locations=CN-US

WTO, *Annual Report 각 연도*, Trade Policy Review Body.

〈4장〉

강두용.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 이슈 제150호(2023.7.4.)

김성혁·임수강·박용석·김장호. 2022.『달러제국과 한국경제』. 민플

김정호. 국제 '이중권력'의 성립과 다극질서의 진입, 노동자독립신문 울산 함성(2023.8.31.)

마이클 허드슨. 2023. 『문명의 운명』, 아카넷

산업연구원,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55호, [2023-10]

이경태·강환구.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3-23호, 한국은행

윤호정, 2022. 『제국의 충돌』, 글항아리

조반니 아리기. 2007.『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길

조은교 외. 2022.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에 따른 중국의 전략과 우리의

대응 –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주원·노시연. 2023. 대중국 수출감소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23-11.

페페 에스코바르(Pepe Escobar, 이승규 역). BRICS 11-힘의 전략적 여정, 스푸트니크(2023.8.25.)

Michael Roberts blog. 2023.9.9 IIPPE 2023 Part One – the end of US hegemony?

Michael Roberts blog. 2023.9.11. IIPPE 2023 Part Two – China, profitability and financialisation

◈ **집필진**

-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임수강** (경기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발 행 일**	2023년 11월 22일
• **펴 낸 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91 / 팩스 (02)2670-9299
• **홈페이지**	http://kctuli.kctu.org
• **전자우편**	kctuli2020@gmail.com